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665-14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 협동조합 업무지침

2017. 3.









## I. 일반사항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및 제·개정경과 .....	11
2. 협동조합 개요 .....	16
가. 협동조합의 정의 .....	16
나.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	17
다. 다른 조직과의 비교 .....	19
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23
3 협동조합 업무체계 .....	24

## II. 총칙

1. 명칭 .....	27
가.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	27
나.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	28
다. 연합회의 명칭 .....	30
2. 법인격과 주소 .....	34
3. 협동조합의 의무 .....	35
4. 협동조합 정책 .....	36
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	36
나.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	86
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	87
라. 협동조합 실태조사 .....	88
마.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92
바. 협동조합의 날 및 로고·슬로건 .....	94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5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5
나. 다른 법률의 준용 .....	97



### **Ⅲ. 협동조합**

---

<b>1. 개요</b>	101
<b>2. 설립</b>	102
가. 설립신고 절차	102
나. 설립신고 서류	111
다. 성립 및 설립무효	119
라. 변경신고	120
<b>3. 조합원</b>	125
가. 자격 및 가입	125
나. 출자 및 책임	127
다. 의결권 및 선거권	129
라. 탈퇴	130
마. 제명	132
바.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33
<b>4. 기관</b>	135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135
나. 임원	139
다. 선거운동의 제한	147
<b>5. 사업</b>	149
가. 사업의 내용	149
나. 사업의 이용	152
<b>6. 회계</b>	154
가. 회계	154
나. 경영공시	161
<b>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b>	238
가. 합병 및 분할	238



나. 타 법인 흡수합병 .....	242
다. 해산 및 청산 .....	247
라. 조직변경 .....	251

8. 등기 .....	256
-------------	-----

**IV. 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	269
-------------	-----

2. 설립 .....	270
-------------	-----

가. 설립신고 절차 .....	270
나. 설립신고 서류 .....	277
다. 성립 및 설립무효 .....	285
라. 변경신고 .....	286
마.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290

3. 회원 .....	291
-------------	-----

가. 자격 및 가입 .....	291
나. 탈퇴 .....	292
다. 의결권 및 선거권 .....	293
라. 회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294

4. 기관 .....	295
-------------	-----

가. 총회 .....	295
나. 임원 .....	296
다.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297

5. 사업 .....	301
-------------	-----

가. 사업의 내용 .....	301
나. 공제사업 .....	302
다. 사업의 이용 .....	309

6.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310
------------------------------	-----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관련 준용규정 .....	312
8. 등기 관련 준용규정 .....	314

## **V. 사회적협동조합**

1. 개요 .....	319
2. 설립 .....	320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	320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	331
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	340
라. 정관변경 .....	342
마.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343
3. 조합원 .....	344
가.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344
나.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345
다. 조합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346
4. 기관 .....	349
가. 임직원의 겸직 .....	349
나.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350
5. 사업 .....	354
가. 주사업 .....	354
나. 사업 관련 준용규정 .....	364
다. 소액대출 .....	367
라. 상호부조 .....	369
마. 사업의 이용 .....	371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373



<b>6. 회계</b>	377
가. 회계	377
나. 경영공시	381
다.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385
<b>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b>	388
가. 합병 및 분할	388
나. 타 법인 흡수합병	393
다. 해산 및 청산	398
라. 조직변경	403
<b>8. 등기</b>	409
<b>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b>	419
가. 감독	419
나. 설립인가 취소	421
<b>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b>	423
<b>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b>	428

## VI.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b>1. 개요</b>	433
<b>2. 설립</b>	434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434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440
<b>3. 준용규정</b>	448
가. 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449
나. 협동조합연합회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455
다. 사회적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457



## **VII. 보칙**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65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67
3. 규제의 재검토 .....	468

## **VIII.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	471
2. 벌칙 .....	473
3. 과태료 .....	477

## **IX.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1. 개요 .....	483
가. 구축배경 .....	483
나. 구축현황 .....	483
다. 기대효과 .....	486
2. 협동조합 업무처리 방법 .....	487
가. 중앙부처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487
나. 자치단체 - 협동조합 .....	492
3.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	519
가. 협동조합 관련 정보 공유 .....	519
나.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주요통계 .....	519
다. 협동조합 상품물 .....	521
라. 사이버교육 .....	522
마. 모바일 홍보포탈 .....	523



## **X. 부록**

---

<b>1. 협동조합 주요 참고자료</b> .....	527
<b>2. 협동조합 법령</b> .....	548
가. 협동조합 기본법 .....	548
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572
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	584
<b>3. 협동조합 표준정관례</b> .....	641
가.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641
나. 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	660
다.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678
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	699







## I. 일반사항

<b>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및 제·개정경과</b>	<b>11</b>
<b>2. 협동조합 개요</b>	<b>16</b>
가. 협동조합의 정의	16
나.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17
다. 다른 조직과의 비교	19
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23
<b>3. 협동조합 업무체계</b>	<b>24</b>







#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및 제·개정경과

## □ 법 제정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게 됨

-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

\*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는 ‘08년 금융위기시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

\*\* ‘09년 UN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에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

### < 각국의 협동조합 관련 입법 현황 >

▪ 기본법 체제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태국 등
▪ 기본법 + 개별법	한국(기본법 제정 후), 프랑스, 러시아
▪ 개별법만 존재	한국(기본법 제정 전),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
▪ 민법, 상법 형태	영국, 스위스,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뉴질랜드 등
▪ 기타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 제한

-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 다수

\* 출자자와 이용자의 일치, 1인 1표의 사업운영, 사업이익의 균등한 분배 등

\*\* 전국적으로 약 4천여 개의 협동조합 지향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를 발족하여 입법청원(‘11. 10월)

### <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

- 생산자 조합
  - 1차 산업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농식품부), 엽연초조합(기재부), 산림조합(산림청)
  - 2차 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청)
  - 3차 산업 : 신용협동조합(금융위)·새마을금고(행안부)
- 소비자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 사회양극화 확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필요성 증대



## □ 법 제 · 개정 경과

- 민주당 손학규 의원 발의로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11.10.12, 기재위)
  -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11.12.29) 및 국무회의 의결(‘12.1.17)
  - 「협동조합기본법」 공포(‘12.1.26) 및 시행(‘12.12.1)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4.1.21)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7.22)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14.12.30) 및 시행(‘15.7.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5.7.1)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16.3.2)
- ※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뒤편의 「참고」 참조



## □ 연합회에 국가나 시·도명칭 사용 허용

-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협동조합 등기 항목에 임원(이사장 제외) 주소 제외

- 협동조합 설립등기 기재 항목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주소 제외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 연장 및 기한 내 미등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재 완화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
- 설립등기 기한 내 미등기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기존에는 '인가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제재를 완화

## □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 연장

- 출자금 변경 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능한 비영리법인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 민법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포함

##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의결요건 완화

- 민법 및 기타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에서 구성원 2/3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

- 협동조합의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고,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심의회 개최 주기 원칙을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

### □ 비조합원(비회원)의 사업의 이용 허용

-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
  - 공제사업\*을 제외하고 조합원(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비회원)도 사업을 이용 가능
- \* 연합회에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 □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

- 2012.12.1.일 이전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 한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기한을 2015.11.30일까지 1년 더 연장(법 부칙 제2조)



### □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 금지

-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지자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오해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 선거관련 규정

- 범죄구성·형벌 부과 시 위반사항을 법률에 정하여야 하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임원 선거운동 제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삭제(죄형 법정주의 위반)

###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또는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 신설

### □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가능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신고 및 등기 등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

###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조항 신설

### □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허용

-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허용



## 2. 협동조합 개요

### 가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하고 있음

####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통칭



## □ 특징

-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 민주적 운영 · 지역사회 기여 · 자율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

##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ICA 홈페이지 : [www.ica.coop](http://www.ica.coop))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li> </ul>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li> <li>▪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li> </ul>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li> <li>▪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li> <li>▪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li> </ul>
4	자율과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li> </ul>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li> <li>▪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li> </ul>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li> </ul>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li> </ul>



## □ 효과

### ○ 경제주체별 효과

-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함
-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축산 농가는 다른 우유업체(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농가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원유를 납품
-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 가능

### ○ 경제적 효과

-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

###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 시스템 보완
-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 기타

-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 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과 사업목적·설립 및 운영 방식·책임·범위·규모·성격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 ■ 협동조합과 「상법」상 회사

-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
  -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음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짐



-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과의 관계

-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 중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① 독립된 조직형태일 것 ②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일자리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지역사회 공헌형 중 하나에 부합할 것 ④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⑤ 정관에 법정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등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임

사업	근거	주무부처	사업내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li> <li>▪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li> <li>▪ 위탁사업</li> <li>▪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li> </ul>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에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li> <li>▪ 지역사회 공헌</li> </ul>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침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 소득·일자리 창출</li> <li>▪ 지역사회 발전</li> </ul>



## 참고 1

## 「협동조합」과 「회사」의 차이

	협동조합 (조합법)	주식회사 (상법)
목 적	△자주·자립·자치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상생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회사)
정의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설립목적 운영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투기목적의 행위 금지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금지 △다른 협동조합등과 상호협력, 공동사업	△영리 목적
공직선거	△특정정당 지지 금지	△없음(정치자금법 등에 적용)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1주 1표(주식회사) * 1좌 1표(유한회사)
제명	△일정기간동안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제명 가능	△없음
사업	△아래 사업을 반드시 포함(일반) - 조합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등 - 협동조합간 협동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에 기여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권익 증진 -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22개 행위로 구분(상법제46조) 1.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등
운영의 공개	△경영공시자료 게재(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개(주식회사)
적립금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법정적립금 으로 적립	△없음
배 당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주총 결정사항
잔여재산 처리	△해산시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 재산은 연합회 등 귀속(사회적협동조합)	△청산규정에 따라 청산 △없음(비영리법인 해당, 민법)
자금조달 금융사업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출자금 한도내에서)	△다양한 금융사업 (단 금융업법 적용)
출자방식	△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 없음	△채권, 유상증자 등



## 참고 2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사단법인 · 협동조합 비교

구분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민법상 사단법인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허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 · 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 · 인적결합	물적 ·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 · 인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시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 회사 등	일반 경제 활동 분야	의료 협동 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삼성전자 (주) 등	세무법인 하나 등	Dream Works Animation	법무법인 울촌 등	미래에셋 PEF 등			
영 리 법 인							비영리법인	
사 회 적 기 업								



□ 「협동조합기본법」은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종 구조"를 도입

○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목적(공익)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과 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

\* '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여 '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법제화

- 별도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근거를 마련 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보완에 기여

####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	▪ 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 3. 협동조합 업무체계

####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업무 총괄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운영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등

#### □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설립·정관변경·합병·분할), 해산신고 수리, 청산사무의 감독, 해산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 □ 지방자치단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내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정관 등 설립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벌칙·과태료 부과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참가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협동조합 교류협력·경영지원·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업무
-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한 내용의 확인,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 확인 등

#### □ 중간지원기관

-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인가지원,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등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전국 16개소)



## Ⅱ. 총칙

<b>1. 명칭</b>	<b>27</b>
가.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27
나.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28
다. 연합회의 명칭	30
<b>2. 법인격과 주소</b>	<b>34</b>
<b>3. 협동조합의 의무</b>	<b>35</b>
<b>4. 협동조합 정책</b>	<b>36</b>
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36
나.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86
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87
라. 협동조합 실태조사	88
마.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92
바. 협동조합의 날 및 로고·슬로건	94
<b>5. 다른 법률과의 관계</b>	<b>95</b>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95
나. 다른 법률의 준용	97







# 1. 명칭

## 가

##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 기본법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함
-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협동조합),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안됨

####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불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 □ 기존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 금지(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사용 금지)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업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명칭 사용 금지



## 기본법 제3조(명칭) 및 시행령 제2조(명칭)

**법 제3조(명칭)**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 시·도 및 중앙부처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신청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여부 확인
  - 명칭이 협동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

##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1항제1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명칭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 □ 명칭의 중복 금지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 금지
- 동일명칭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 입력

## □ 명칭의 혼동 금지

- 사업구역과 사업분야·조합원 구성을 병기함으로써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 최소화

사업구역과 사업분야 병기	사업구역과 조합원의 구성 병기
성수 수제화 협동조합 은평구 어린이집 협동조합 부산 수산유통 협동조합	서울 상담전문가 협동조합 송파 행정사 협동조합 제주 감귤생산자 협동조합

- 고유명사만 사용하거나, 고유명사와 업종 병기 가능  
(ex. 늘푸른 협동조합, 두리베이커리 협동조합)
- 사업, 구역, 조합원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협동조합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명칭사용 지양  
(ex. \*\* 협동조합 중앙회, \*\* 협동조합 협회)



## 연합회의 명칭 관련 법령

**법 제3조(명칭)**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명칭)**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2.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조(이의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제2조(명칭 사용 요건)** ① 시행령 제2조제3항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에 따라 명칭 사용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는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협동조합 수는 명칭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협동조합 수(인가받은 누적 사회적협동조합 수) × 55.5%(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운영률)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법 제80조 및 제11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연합회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됨

## ☐ 연합회 명칭 사용 기준

### ○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Korea, ROK 등 국가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전국’, ‘국가’ 등과 같이 국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 사용금지
- ‘중앙’, ‘고려’ 등 비국가명칭과 과거의 국가명칭 사용가능

### ○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SEOUL, SEOUL Metropolitan 등 시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경상남도, 경상도, 경남도, 경상, 경남, 영남, Gyeongsangnam-do, Gyeong-Nam 등 도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 다만,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과 업종 등 다른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허용

예시) 한국안경협동조합연합회, 경북사과협동조합연합회



- 연합회의 성격, 사업분야,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 사용
  - 연합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용  
예시) 내고장 특산물 협동조합연합회
  - 업종별 연합회의 경우 업종 표기  
예시) 광주 체육도장 협동조합연합회
  - 명칭이 협동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
- 예외적으로, 출자금, 회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가능  
예시) 한국협동조합연합회, 서울협동조합연합회

####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 i)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ii)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iii)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iv)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 일 것

####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 i)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ii)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의미)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iii)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iv)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시·도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 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은 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음

- 이때,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1항제3호)

## □ 연합회 명칭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 ○ 이의신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명칭의 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 이의신청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가능



## 2. 법인격과 주소

### 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법인격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구성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법인으로서는, ‘영리법인’으로 해석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배당 금지

#### □ 주소

- 주소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로 구분
  - “주된 사무소”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하며,
  - “지사무소”란 주된 사무소 이외의 모든 사무소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음
- 정관상 주소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까지 명시 가능
  - 예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 3. 협동조합의 의무

#### □ 기본원칙 (법 제6조)

-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
-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 금지

#### □ 협동조합의 교육훈련 및 상호협력 (법 제7조)

-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
- 정관에 조합원(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반드시 포함 (법 제45, 80조)

#### □ 공직선거 관여 금지 (법 제9조)

- 협동조합은 공직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
-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행위 및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개인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는 가능)
-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제1호)



## 4. 협동조합 정책

### 가

#### 협동조합 기본계획

#####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법 제11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및 여건 조성
  -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14~'16)

-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 (4대 핵심전략) △ 시장참여기회 확대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교육확대 및 인력유입 활성화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17~'19)

- (목표)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4대 핵심전략) △ 자생력 제고 △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 네트워크 강화 △ 인식개선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7~2019년]

2017. 1.

관계부처 합동





## 차 례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39
II. 제1차 기본계획 평가 .....	41
III.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	45
1. 자생력 제고 .....	46
2.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	50
3. 네트워크 강화 .....	53
4. 인식개선 .....	56
IV. 과제별 추진일정 .....	58



#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1. 수립배경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월)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13.12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16.12월 기준 10,640개)
  -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간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으로 비용절감 및 사업의 규모화 진행
    - \* (동네빵네협동조합) 개인 빵집이 모여 원재료 공동구매 및 공동브랜드 개발
  -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 (한국택시협동조합) 택시기사가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근무일수 단축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배당금 및 수당 등을 통해 급여 수준 향상
  -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에 직접 참여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 \*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부모들이 공동육아 방식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 청년창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확대 기여
    - \* (성북신나 협동조합) 청년들이 문화콘텐츠 생산,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 다만, 협동조합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모델 미비 및 영세성 등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은 낮은 상황
  - \* 설립된 협동조합중 44.5%가 휴·폐업 상태이며 운영중인 협동조합도 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는 2차 기본계획('17~'19)에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 반영 필요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추진경과

- 2015.3.~12.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하단 참조)
- 2015.7. 제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워크숍 개최
- 2016.1.~3.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16.4.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책 심의회 의결
- 2016.5.~10.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2016.6.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16.7.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선진 정책 조사·연구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 2016.10.~11. 협동조합 유관기관 기본계획 수립 의견 조회
- 2016.1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참조: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운영율) 설립 이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55.5%
- (평균 조합원 수) 47.3명이며 10인 미만 소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52%
- (평균 자산) 5,744만원 수준이며 출자금은 4,069만원, 조합당 매출액은 2억 1,402만원
- (평균 종사자) '13년 7.1명에서 '15년 8.2명으로 증가
-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 정규직 월 평균 143만원 수준이며 전체 피고용인의 81.9%가 4대 보험에 가입
- (지역사회 공헌) 전체 49.4%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4년 1년간 사회 공헌 활동 금액을 환산하면 약 90억원
- (필요한 정책) 판로지원(40.7%), 금융 인프라 확보(17.7%),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16.7) 등으로 조사



##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 1.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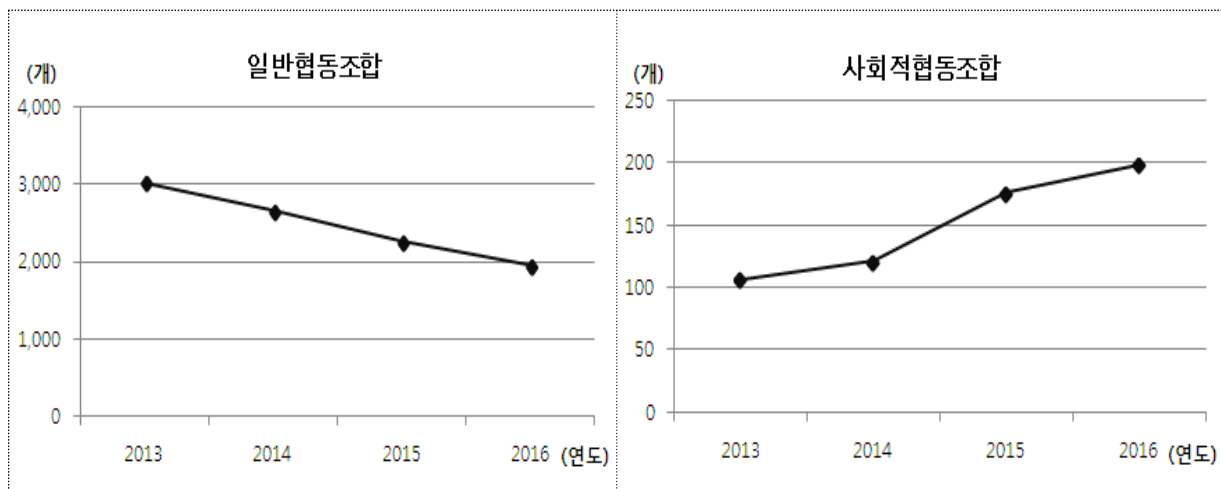
□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여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역할 수행

○ (설립 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 이후 총 10,640개('16.12월 기준) 설립\*

-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문화예술 등 금융업을 제외한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사업 수행

\* (설립 누계) '13년 3,197개→'14년 6,010개→'15년 8,476개→'16년 10,640개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 수 변화 추이>



○ (고용창출) 정부의 직접지원 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산업전체 평균을 상회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타 사회적경제 정책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지원

\*\* (평균 종사자) '13년 7.1명→'15년 8.2명으로 증가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21.4명으로 쏠산업 평균 취업계수(6.4명)보다 높음('15년 실태조사)



○ (직무 만족도 향상)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조합원간 신뢰도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일반 영리회사 이직률(22.3%) 대비 협동조합 이직률(4.8%)이 낮고('15년 실태조사) 조합원간 신뢰도 및 직원 충성도가 높음('16년 KDI조사)

○ (높은 생존율) 타 법인 사업체 대비 기업 생존율이 높은 편

\* 협동조합의 3년 기업 생존율은 93.1%로 소상공인(66.3%)이나 2인 이상 일반기업(51.7%)보다 높음('15년 실태조사)

○ (지역사회 기여) 협동조합중 49.4%가 자원봉사, 생산물품 및 현금 기부 등을 시행

\* 848개 협동조합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협동조합 취업자의 14.1%가 취약계층('15년 실태조사)

□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 여건 조성

○ (시장진입 원활화) 물류, 복지, 유통, 교육 등의 분야에서 타 법인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동등한 혜택 부여 등 25건 시장 진입 개선

-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협동조합 참여 증가, 학교협동조합 확산 등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 확대

\* '15년 319개 공공기관에서 총 264억원의 구매실적 발생

○ (자금조달 개선) 보증제도 요건 완화\*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허용 등을 통해 자금 접근성 제고

\* 협동조합 희망보증 대상 업종 확대(5개→네거티브 방식) 및 협동조합 특례보증의 보증요율과 한도 조정(보증요율 1%→0.8% 인하, 보증한도 3→5천만원 상향)



- (인력양성) 제도 초기 협동조합 설립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

\* 표준교육교재 개발, 온라인 상시 교육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 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14년 5,909명, '15년 10,081명 교육 참여

\*\* 협동조합의날 기념식 및 로고·슬로건 공모전 등 대국민 홍보 추진

- (연대·협력 확대) 협동조합간 협업을 위해 연합회 설립 (54개) 및 광역단위 연합회 설립\* 허용

\* 연합회 설립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가능

- 개별법 협동조합,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확대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협동조합 성장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

\* 농협, 수협 등과 협동조합 상품 기획전 개최, GS홈쇼핑과 MOU 체결 등으로 TV 및 온라인 상품물에 협동조합 제품 입점

-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기에 적합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공모전을 통해 88개팀 중 12팀의 창업팀을 선발, 신탁 등 선배 협동조합이 사업 모델 수립 및 창업 컨설팅 등 지원

## 2. 한계

-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협동조합 자생력은 높지 않은 상황

- (낮은 가동률) 수익 모델이 미비하여 未운영 또는 폐업한 협동조합 다수 발생

\*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55.5% 수준('15년 실태조사)

- (영세한 규모) 협동조합의 자본 및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등 일반 영리기업 대비 낮은 수준

\* (월매출액) 협동조합 1,682만원('15년 실태조사), 창업기업 2,247만원('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청

\*\* (자본금) 협동조합 3,929만원('15년 실태조사), 창업기업 8,804만원('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청



□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금 조달, 전문인력 양성,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

○ (자금조달의 어려움)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정책이 부족하고 자금조달 제도의 효과성 미흡으로 활용 실적이 낮음

\* 협동조합 보증제도 활용 실적은 총 178건, 52.7억에 불과하며 연합회 공제사업의 경우 실제 신청 사례가 없음('15.9월)

**<참조: 협동조합 자금조달의 어려움 사례>**

- (사례1)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평균 2,500만원의 출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협동조합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차입에 의존
- (사례2) 청소원들이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자체 청소용역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청소용품 등 초기비용(3,000만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 (수요자 맞춤형 교육 부족) 설립 절차 안내 및 이론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회계 등 전문교육 부족

\* 교육대상자 중 약 20%만이 경영 교육 수요('15년 실태조사), 교육 내용중 가장 부족한 부분을 경영 등 운영 전문 교육이라고 응답('16년 KDI 조사)

- 협동조합 경영 및 중간지원기관의 심화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부재

○ (연합회 활성화 부족) 연합회 설립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표성을 갖고 연대 사업을 수행한 사례와 경험 부족

\* 협동조합 중 50% 이상은 연합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업종·지역별 연합회 활동 현황은 매우 미흡('15년 실태조사)

□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공공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을 통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

○ 협동조합을 사업체가 아닌 사회운동단체로 인식하거나 정부지원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

○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민간위탁 입찰 참여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Ⅲ.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목표**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4대 핵심전략

#### 11대 정책과제

자생력 제고

1. 판로 개척 지원
2. 자금조달 경로 확대
3. 내부 역량 강화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4.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5.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

7.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8. 민관 파트너십 강화
9.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인식개선

10. 대국민 홍보 강화
11.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추진기제

- 지역밀착 및 규모화된 유형별 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
- 정부는 정책·사업 환경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



# 1 자생력 제고

## 1. 판로 개척 지원

◇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 및 상품 경쟁력 제고

### □ 민간·공공 유통 인프라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연계

- 협동조합 제품의 품질 개선 컨설팅\*을 강화하여 유통 매장\*\* 입점 지원

\* 상품·유통 전문가 진단·평가한 제품의 품평회, 우수상품 기획전 개최  
(’17년 대도시 중심으로 시범실시 → ’18년 중소도시로 확대)

\*\* 민간(백화점,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공공(중소기업 전용백화점, 중소기업 정책매장,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등)

-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중 협동조합의 활용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참여 요건 완화 추진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판매전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및 홍보 지원 등

###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

-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지표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 등 우선구매 확대 유도

- 협동조합 상품물을 구매종합 정보망으로 확대 개편\*

\* (현행) 협동조합 상품 소개 → (개선) 지자체 쇼핑몰과 상품정보 연계, 수요도 분석, 상품 소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대상 공공구매 워크숍 개최 확대\* 등을 통해 우선구매 교육 및 상품 정보 제공 강화

\* 6개 권역별 1회씩 총 6회 개최

-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우선구매 마크를 추가하여 구매 확대 유도



## □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활성화 촉진

- 기본법 협동조합의 판로 개척을 위해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협력사업('16년 시범 실시) 확대

\* ('16) 경영교육 및 우수제품 기획전 → ('17) 경영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으로 확대

-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여 협동조합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 추진('17년 중)

\*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 등

## 2. 자금조달 경로 확대

◇ 정책자금 등 외부 자금 접근성 제고 및 자생적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업모델로 정착

## □ 정책 자금 활용 제고 및 외부 투자자원 유인 확대

- 한국에 맞는 협동조합 금융모델 개발 등 외부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협동조합금융 전략방안\* 마련('17년 말)

\* 금융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

- 창업기업지원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기존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18년~)

\* 협동조합이 제도상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소유구조 등에서 기존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실제 대출 활용 실적은 거의 없음

- 협동조합 특례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등 협동조합 전용 보증\* 이용에 대해 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보증심사기준이 일반보증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100%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보증신청건수가 적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출심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시) 협동조합은 과점주주가 없기 때문에(총 출자금 대비 30% 초과 출자 불가), 협동조합에 대출시 이사장 등 임원을 영리기업의 과점주주로 보고 대출 가능토록 추진



- 협동조합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사회적협동조합의 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내부자금 보유를 적극 유도
    - \* 조합원 사이에 배분할 수 없고 청산 시 다른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에 승계되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세제혜택 부여
  - 회원조합 잉여금 적립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합회 자체 공제기금 마련
    - \* (사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상호기금으로 매년 잉여금의 3% 납입을 의무화하여 고용 확대, 융자 지원 등에 활용(납입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신탁, 새마을금고 등 금융 관련 협동조합이 연합회 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예시)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을 허용하여 연합회 내에서 신탁 등이 공제 사업 추진

### 3. 내부 역량 강화

◇ 경영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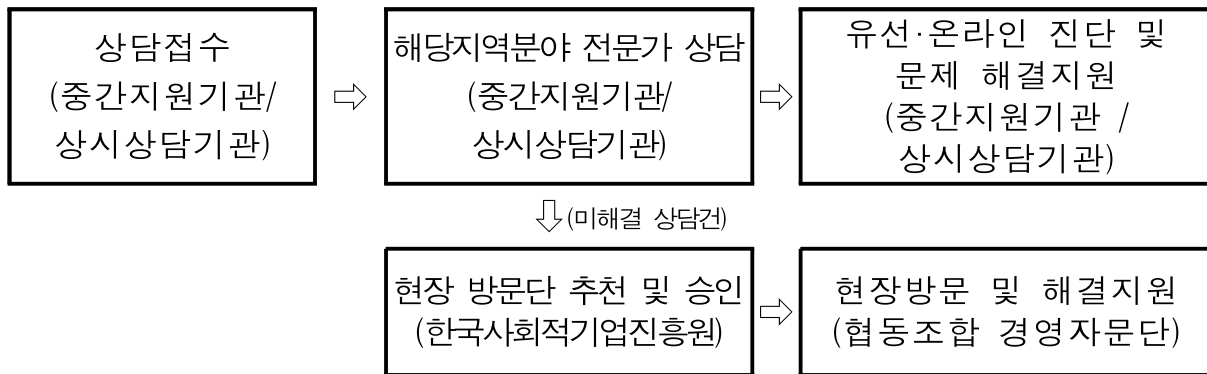
- 단계별 전문화된 경영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협동조합 성장단계\*에 맞는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 \* (설립단계) 설립행정, 사업계획서 작성, 수익모델 수립 등, (운영단계) 회계·세무, 인사·노무, 마케팅, 홍보 등, (퇴로단계) 해산절차 등
  - 협동조합 운영 경험이 있는 개별법 협동조합, 업종별 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확대
    - \* 학교협동조합(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흥덕쿵), 돌봄(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의료협동조합(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교육 실시



- 사업부진, 관리역량저하 등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온라인) 도입
-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경영자문단\***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 지역내 마케팅, 조직관리, 법률, 협동조합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협동조합 경영진단 운영절차>



## □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 기존 경영지도사, 컨설턴트, 협동조합 실무자 등을 **협동조합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공인자격 제도**(가칭 협동조합 지도사)\* 도입

\* (예시) 진흥원 주관(추후 민간위탁)으로 일정한 요건(민간의 협동조합 전문과정 이수자,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 장기근무자, 경영지도사 중 일정기간 실무 경력자 등)에 해당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자격증 발급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대학 내 **비학위 단기과정(1년) 개설\*\***을 지원하여 **지역단위 전문가 육성**

\* (수도권) 서울대 협동조합 경영 전문가 과정(비학위), 성공회대, 한신대 협동조합 대학원 과정을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

\*\* ('18년) 시범적으로 1개 대학 비학위 과정 신설 → ('19년) 3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확대

- 협동조합 교육 역량 강화 및 상시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력풀 활용 확대**

\* 지역·업종·분야별 전문가, 개별법 협동조합 은퇴자, 프로보노 등



## 2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 1.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프랜차이즈를 통한 비즈니스 확산 및 프리랜서 등의 고용 문제 해결 등 협동조합 방식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 기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규모화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확산

○ 가맹 본부 설립·운영(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영세 자영업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조합원으로 참여)로 설립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발굴 연구 용역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중기청)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시범추진('17년~)

\*\*\* (사례) 소셜카페 협동조합(마을카페 8개), 와플대학 협동조합(49개)

□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개발

○ 간접고용,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창업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 방송, 언론 등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IT 산업, 번역 등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협동조합이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사회보험,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의 운영은 사업자 직원의 수수료(7~15%)로 운영하되 3년 이내에 개인 창업을 유도

\*\*\*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도입방안 마련

□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 성공 모델 확산

○ 직원협동조합 모델 확산을 위한 초기 자금조달 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 등과의 제도적 연계 방안 마련

\* 신규 창업 및 기업 인수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예 :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장년 고용지원 등 고용지원 사업과 연계



## 2.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 진입 환경 조성 및 경쟁력 제고

#### □ 시장 진입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활용 가능한 제도적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시장 참여 유도

\* (규정) 민간위탁 대상에 협동조합 未 표기, 이전 실적 불인정으로 경력 미달(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 되어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 사례 방지

\*\* (제도)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현재 사회적기업 +1.7점) 부여 등

- 공공기관 계약·구매 담당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상·하반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사업별 위탁 근거, 위탁 우수사례, 협동조합의 조직특성, 운영 현황 등 소개

- 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수요\*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요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시장의 민간위탁 수요 2015년 기준) 5조 3,087억원으로 총 9,556개 영리·비영리 업체가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에서 민간위탁 수행중

\*\*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동조합 구매 정보망에 민간위탁 조달정보 추가

#### □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수행능력 제고

- 민간위탁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수탁이 어려운 협동조합에 대해 입찰 절차 등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 수행능력, 세부 서비스 기준, 공급가격 등의 표준화 추진\*

\* 서비스 표준화가 용이한 교육, 돌봄 분야 시범실시('17년)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업종 확대 추진



### 3.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16년 시범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 협동조합 이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설립 단계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등 사업 수행단계까지 창업 전(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6년) 12개팀 → ('17년) 24개팀 → ('19년) 50개팀으로 지원대상 확대

-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 모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OOP-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신설('18년)

\* 일반협동조합 분야와 사회적협동조합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모전 수상자는 창업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

-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한도 상향(0.7 → 1억원)

#### □ 예비 창업자에게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 기회 제공

- 예비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모델개발, 자금준비, 조합원 확보 등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에 협동조합 창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창업 기회 확대

\* 중소기업청 창업사관학교, 스마트 창작터 프로그램 등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 등 시니어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모델 개발 및 확산

\* 교육, 멘토링 등 시니어 창업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지원



### ③ 네트워크 강화

#### 1.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 부처별 정책, 법령의 연계를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별 해소 및 규모화 유도

##### □ 법·제도·정책 상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농어업법인) 자금·컨설팅·교육 등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기업 수준의 세제상 혜택 부여 방안 검토

\* 사회적기업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19년까지), 취·등록 면허세(50%, '18년까지), 재산세(25%, '18년까지) 감면

- 개별법 동조합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 등을 협동조합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방안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 등

##### □ 협동조합 규모화 유도

- 전문자격업종\*에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 개선 검토

\* 공중위생관리법(이미용사), 의료기사법(안경사), 수의사법(수의사) 등

<참조 : 전문자격사 업종의 규모화를 위한 창의적 대안(동물병원 사례)>

- (필요성) '서비스 경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성장에 한계
  - 현재 '동물병원'은 민법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수의사법 17조)
    - \*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 불가
  - 현재 영리법인 허용은 개인사업자의 반발로 애로
  - 대안으로서 수의사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 검토



## 2. 민관 파트너십 강화

◇ 민·관 협동조합 업무협의체 신설,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 □ 협동조합 업무 협의 및 조정 기능 강화

- 시·도 단위 협동조합 협의회, 연합회 등 민간 협동조합 대표조직과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17년~)

\* 법적 공식기구인 협동조합 정책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

- 시도 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개정 및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지자체별 우수 지원 사례 발표 등

### □ 지역내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 협동조합 공인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연장(1년→3년)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성 확보

\* (현행) 사회적경제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개선) 협동조합 공인자격증 보유자('18년)

- 기존 협동조합 설립 상담 중심에서 창업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간지원기관 업무 재설계(~'18년)

- 중간지원기관과 지자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지원조직 간 역할 분담\*으로 협동조합 지원 중복 방지(~'18년)

\*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진흥원 중간지원기관과 지자체 지원조직간 설립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판로, 교육 등 업무를 분담하여 제공



### 3.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 행정 절차 개선 및 협동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구축으로 정책 서비스 품질 향상

□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관리 체계 고도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협동조합 설립·변경·폐업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강화

\* 법원행정처(법인등기), 국세청(사업자등록), 지자체(신고·변경) 등

○ 복잡한 해산 절차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휴면조합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휴면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추진

\* (예시) 일정기간 사업 미수행시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안에 사업재개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으로 간주하여 법인등기 소멸

○ 경영공시 항목 개편\* 및 일반협동조합 공시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경영공시 정보 활용도 제고

\* (예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한 매출액 기재 등

\*\*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을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축소

□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에 활용

○ 협동조합의 재무적 성과와 취약계층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성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Coop-Index 개발 및 보급

\* ('17년) 사회적가치측정지표(SROI) 등 관련 연구자료 분석 및 성과지표 Pool 구축  
→ ('18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지표 확정 → ('19년) Coop-Index 개발 및 보급

○ 판로,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우수 협동조합 포상 등에 Coop-Index 활용



## 4 인식개선

### 1. 대국민 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와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우호적 분위기 조성

#### □ 우수 비즈니스 모델 확산으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확산 효과가 높은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유형별 우수사례를 카드 뉴스, 동영상 등으로 제작·배포

\* (현행) 연 1회 책자 형태 사례집 제작 → (개선)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SNS를 통해 확산 유도(월 2회)

-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청년 및 실버세대 협동조합가의 강연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대중적 이슈 확산

\* 전국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신설 및 협동조합 주간행사와 연계

#### □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

- 개별법 협동조합과 공동 콘텐츠 제작(슬로건, 영상 등) 및 홍보 인프라 연계\* 등 홍보 협업 체계 구축으로 협동조합 붐업 조성

\* TV·신문 등 미디어 광고, 홈페이지, 농민신문 등 소식지, 대학생 서포터즈, 전국 지점·매장 포스터 부착, ATM 안내문, 전광판 등

-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치, 정책 성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심포지엄, 정기 포럼 개최

\* '17년 시범적으로 심포지엄 등 2회 개최, '19년까지 단계적 확대

#### □ 협동조합 행정 관련 일선 공무원 인식 개선

- 신고·인가, 사업자 등록, 등기 등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17년부터 권역별로 반기별 1회 개최



## 2.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 ◇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국내 협동조합의 성장과 역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 □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

- 학교 협동조합 확산 및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이 직접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 확대

\*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진, (교육청) 교내 매점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 관련 조례 개정

-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17년) 전국 20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운영, ('18년) 청소년 협동조합 캠프 개최

-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습 이수 시간 인정이 가능한 교직원 대상 협동조합 연수 프로그램 신설('17년 하반기 시범 실시)

- 청년층의 협동조합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교양 및 전공 연계 과목 개설

\* '18년 3개교에 시범 운영 후 '19년 5개교까지 확대

### □ 국내 협동조합 제도 및 성과 공유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국내 협동조합 현황 및 성과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 정기 간행물 등 제작·배포

\* ('17년) 영문 홈페이지 개설, ('18년) 정기 간행물 제작











- 해외 유명 활동가 초청 및 컨퍼런스 등 국제 행사 개최로 국내외 협동조합 이슈 확산

- 국내외 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및 현장 탐방·연수 지원













\*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인턴 진출을 지원하는 K-Move 사업과 연계













## IV. 과제별 추진일정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1. 자생력 제고					
1-가. 판로 개척 지원					
1-가-1. 민간·유통 인프라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연계					기재부 중기청
○ 품질 개선 컨설팅을 강화하여 유통 매장 입점 지원					기재부 중기청
○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중 협동조합의 활용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참여 요건 완화 추진					기재부 중기청
1-가-2.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					기재부 중앙부처 지자체
○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지표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					기재부 행자부
○ 협동조합 상품물을 구매종합 정보망으로 확대 개편					기재부 지자체
○ 공공구매 워크숍 개최 확대 등을 통해 우선구매 교육 및 상품 정보 제공 강화					기재부 지자체
○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우선 구매 마크 추가					기재부 조달청
1-가-3.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활성화					기재부 소관부처
○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확대					기재부
○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					기재부 소관부처
1-나. 자금조달 경로 확대					
1-나-1. 정책 자금 활용 제고 및 외부 투자자원 유인 확대					기재부 소관부처 금융위 등
○ 외부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협동조합 금융 전략방안 마련					기재부 소관부처
○ 기존 정책자금 내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					기재부 중기청










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 협동조합 전용 보증 이용 홍보 강화					기재부
○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					기재부 금융위 등
1-나-2.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기재부
○ 사회적협동조합의 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내부자금 보유 적극 유도					기재부
○ 회원조합 잉여금 적립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합회 자체 공제기금 마련					기재부
○ 신탁, 새마을금고 등 금융 관련 협동조합의 연합회 공제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기재부
1-다. 내부 역량 강화					
1-다-1. 단계별 전문화된 경영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재부
○ 협동조합 성장단계에 맞는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기재부
○ 개별협동조합, 업종별 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확대					기재부
○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온라인) 도입					기재부
1-다-2.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기재부
○ 협동조합 전문가 육성을 위한 민간공인자격 제도 도입					기재부
○ 수도권 이외 지역에 비학위 단기과정 개설					기재부
○ 전문강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					기재부
2.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2-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2-가-1.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확산					기재부 소관부처
○ 가맹 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 패키지 지원					기재부 중기청



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2-가-2.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개발					기재부 고용부
○ 근로 조건 개선 및 창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기재부 고용부
2-가-3. 직원 협동조합 성공 모델 확산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직원협동조합 모델 확산을 위한 초기 자금조달 지원 및 제도적 연계 방안 모색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b>2-나.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b>					
2-나-1. 시장 진입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활용 가능한 제도적 지원					기재부 소관부처
○ 계약·구매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기재부 조달청 지자체
○ 공공시장 수요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요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					기재부 조달청 지자체
2-나-2. 협동조합 민간위탁 수행능력 제고					기재부
○ 입찰절차 등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기재부
○ 협동조합 서비스 분야 표준화 추진					기재부
<b>2-다.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b>					
2-다-1.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기재부
○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체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기재부
○ COOP-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신설					기재부
○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경우 예비 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한도 상향					기재부 중기청



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2-다-2. 예비 창업자에게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 기회 제공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기재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에 협동조합 창업 프로그램 포함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시니어 창업 모델 개발 및 확산					기재부
3. 네트워크 강화					
3-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3-가-1. 법·제도·정책 상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					기재부 소관부처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 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방안 검토					기재부
○ 개별법 협동조합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 등을 협동조합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방안 검토					기재부
3-가-2. 협동조합 규모화 유도					기재부 소관부처
○ 전문자격업종에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기재부 소관부처
3-나.	민관 파트너십 강화				
3-나-1. 협동조합 업무 협의 및 조정 기능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민간 협동조합 대표조직과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					기재부
○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 재·개정 및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기재부 지자체
3-나-2. 지역내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기재부 고용부 지자체
○ 중간지원기관 전문인력 채용 확대 및 위탁기간 연장					기재부 고용부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7년	'18년	'19년	
○ 기존 협동조합 설립 상담 중심에서 창업 컨설팅 강화 등 중간지원기관 업무 재설계					기재부
○ 중간지원기관과 자자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지원조직 간 역할 분담					기재부 지자체
3-다.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3-다-1.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관리 체계 고도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협동조합 설립·변경·폐업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기재부
○ 협동조합 경영공시 항목 개편 및 공시 대상 기관 확대					기재부
3-다-2. 협동조합 조직적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기재부
○ 협동조합 성과평가지표(Coop-Index) 개발·보급					기재부
○ 판로, 컨설팅 등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우수 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기재부
4. 인식개선					
4-가. 대국민 홍보 강화					
4-가-1.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기재부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유형별 우수사례 홍보					기재부
○ 혁신적인 협동조합가 강연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등 대중적 이슈 확산					기재부
4-가-2.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기재부 지자체
○ 개별법 협동조합과 홍보 협업 체계 구축					기재부
○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심포지엄, 정기 포럼 등 개최					기재부 지자체



실천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4-가-3. 협동조합 행정 관련 일선 공무원 인식 개선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 일선 협동조합 담당자 대상 협동조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b>4-나.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b>					
4-나-1.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					기재부 교육부
○ 학교협동조합 확산 및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기재부 교육부
○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재부 교육부
○ 교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신설					기재부 교육부
○ 대학·대학원에 교양 및 전공 연계과목 개설					기재부
4-나-2.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 협동조합 현황·성과 등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영문 홈페이지 및 간행물 제작·배포					기재부
○ 해외 유명 활동가 초청 및 컨퍼런스 등 국제 행사 개최					기재부
○ 국내외 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및 현장 탐방·연수 지원					기재부 소관부처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4~2016년]

2013. 12. 27.

관계부처 합동





## 차 례



I. 수립 배경 .....	66
II.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방향 .....	68
III. 4대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	71
1. 시장 진입 .....	71
2. 자금 조달 .....	74
3. 인력 양성 .....	76
4. 연대·협력 .....	78
IV. 추진 체계 .....	81
V. 실천 과제별 소관 기관 .....	82



## I. 수립 배경

- **[경제 환경]**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에 따라 **低성장** 기조가 지속
  - 정부는 보건·의료 등 복지지출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에 직면
  -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산층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 **[협동조합의 부각]** 협동조합은 일자리·복지·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협동조합의 장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UN은 '09년 136호 결의문에서 '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에 관련 법·제도 정비를 권고
  -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생존율도 높아 **고용 안정성**에도 기여
    - \* 향후 5년간 8,000~10,000여개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으로 취업자는 4~5만명(피고용자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보사연, '12.11월)
  - 취약계층 고용 및 자활, 돌봄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 확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
  - 은퇴 세대의 재능기부형 재취업, 중소기업인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
  - 조합원의 1인 1표에 따른 상향식 경제 민주화로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 의식(Ownership) 제고 (조합원 = 주인 = 이용자)



□ **[정책 추진경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일) 이후 협동조합  
설립\* · 운영을 지원하는데 중점

\* '13.11월말 현재, 총 3,057건(월평균 255건)이 신고수리 · 인가되었으며,  
상법상 회사의 월 평균 설립건수인 6,278건의 약 4.1% 수준

○ 법인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 경제 · 사회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증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지정기부금 단체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

○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 운영 상담 및  
경영컨설팅 제공

\* '13.4월 전국 7개(17개 기관 컨소시엄) 권역에서 업무 개시

○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 · 구매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2.2일 개통)

○ 업무관계자(공무원 등) 및 설립자를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주 토요일)' 기념  
행사 등 홍보 실시

\* '13.10월말 기준 설립희망자 등 국민 대상 교육을 300회 이상 개최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간지원기관)

□ **[기본계획 수립]** 법 시행 후 1년간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년)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  
조합등의 자주 · 자립 ·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Ⅱ.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방향

- **[개괄]** '12.12월~'13.5월까지 신고수리·인가된 1,209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3.7월에 조사 실시

### < 실태조사 주요 내용(요약) >

- 신생 설립이 대부분(97.7%)이며 도소매업(28.2%) 비중이 높고, 공동판매(51.4%)가 주 수익 창출방식
- 제도 시행초기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이고, 평균 자산은 약 4천만원 수준
- 평균 조합원 수는 58.7명, 평균 취업자 수는 5.83명이며, 이 중 약 3.5명이 신규 고용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공공 조달시장 우선권부여(31.5%),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23.8%)으로 조사

- **[분석]** 협동조합은 ① 시장 진입, ② 물적 자본, ③ 인적 자본, ④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애로요인 존재

- (시장 진입) 판로 미확보로 매출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이 부진

\* 목표 매출액 평균은 약 1.8억원, 목표 이윤은 약 0.4억원이나, 2분기 달성도는 각각 26.6%, 15.5% 수준

- (물적 자본) 매출실적·담보 등 신용기반이 부족하여 투자 및 운영 자본 조달에 곤란\*

\* 협동조합의 투자·운영 자금은 대출금(2.4%) 등 외부자금보다 출자금(74.4%) 등 자기자본이 대부분

- (인적 자본) 교육 부족, 전문가 부족, 열악한 고용 환경 등으로 유능한 인력 유치에 한계\*

\* 조합원 또는 직원으로 지속 참여 의사가 99.3%, 97.5%로 높은 편이나, 설립 前 협동조합 교육을 받은 조합원(58.6%), 보수(114만원~177만원), 4대 보험 가입률(정규직 약 60% 수준)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연대·협력) 연대의 구심점 부재로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

\* 연합회에 가입한 곳이 9.2%에 불과하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연합회 부재(38.9%), 관련 정보 부족(32.4%) 등으로 조사

□ **[시사점]**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시장 진입)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 (자금 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
- (인력 양성)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육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인적 역량을 강화
- (연대·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 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기본계획 방향]**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인력 양성, 연대·협력의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을 달성\*

\* 추진기제(메커니즘)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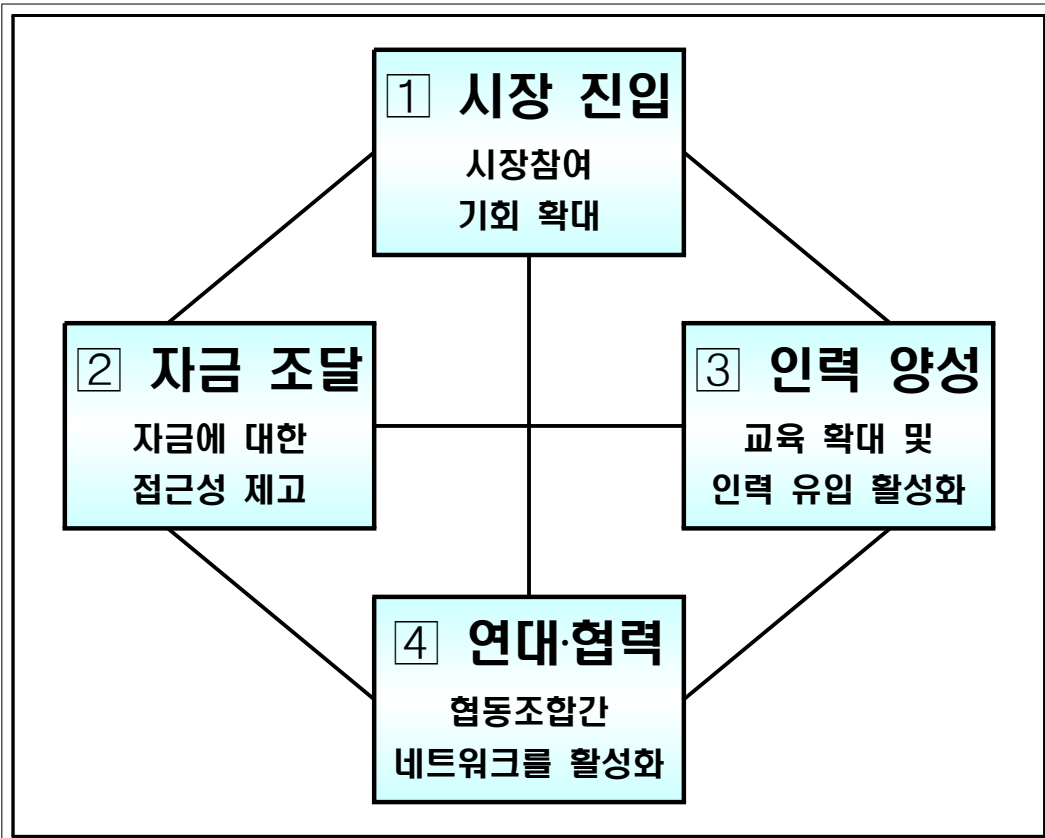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4대  
핵심  
분야**



**추진  
기제**

- ▷ 민간이 자주·자립·자치의 원칙 하에 주도적 역할
- ▷ 정부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 Ⅲ. 4대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 1 시장 진입 : 시장참여 기회 확대

##### 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 신생 법인인 협동조합에 대한 진입장벽 등 기존 법인\*만을 위한 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으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특별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 등

- 일반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 소득세·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일반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 연도별 추세를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등 주사업(비영리)을 하고, 60% 이하는 부사업(영리)을 한다는 점을 고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 조달 매뉴얼에 협동조합을 명기

-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중소기업 구매실적에 포함하여 공개\*

\* 공공기관에게 배부되는 DB 리스트에 협동조합 포함 및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조달 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개정



- 타 법령상 법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에 협동조합도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관련 개선과제 지속 발굴·개선

-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 허용

\* 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기본법상 협동조합에도 적용 검토

- 중·고등학교 매점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검토

- 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 시 조합원이 가진 인·허가 등을 유사·동일 업종에 한해 조합에게 인정 가능\*한지를 검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득하고 참여하는 경우 조합에게 이를 인정하여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



## 나.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활성화

◇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제고\*

\* 1970년대 중반 이후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

□ 사회적협동조합이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복지·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인증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강화

\* (예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시 일부요건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포함 등

□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 확대

○ 신규서비스제공자로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제공기관 지정제\*\* 등 진입장벽 제거

\* (예시) 현재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종류에 협동조합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법인격을 가진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 기초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인 희망리본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등

○ 부모협동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 지역자활센터를 취약계층 고용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등



## ② 자금 조달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가.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 ◇ 협동조합이 자금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통로로 정책자금 활용
- ◇ 대내외적 위기 발생 시 대응력 제고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성 완화를 위하여 자금원천의 다양성 확보

#### □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 대학생·은퇴자·경력단절여성\*·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을 포함

\*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성 친화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소상공인협업화사업,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등 정책 자금 활용 매뉴얼(온·오프라인)의 홍보 강화

#### □ 일반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내부자금 확충 검토

\* 내부 유보되어 향후 손실 대비나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조합원 사이에 분배될 수 없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Unallocated Collective capital)으로 배당이 금지되고, 청산 시 다른 협동조합 등의 비분할 적립금으로 승계

\*\*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

#### □ 자금 공급 및 사업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을 유도

\* 협동조합 매출액 일정비율, 특별법상 협동조합, 대기업 등의 매칭방식 검토



## 나. 금융자원 활용

◇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차이,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존 자금시장 이용에 불리한 여건 보완

□ 지역신보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실시하는 특례보증의 업종 및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 지역신보는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천만원 이내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도매업 등 업종을 한정하여 1억원 이내 지원

□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을 이용하는 방안\* 검토

\* (예시) 현재 수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10등급 등 취약계층이 조합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등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이용 확대

○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익숙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차별 없는 자금 조달 추진

○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활용

□ SIB,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원천의 다원화 검토

○ SIB\*(사회성과연계채권)와 사회적협동조합간 연계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등 사회환경 문제를 해소

\* (Social Impact Bond) 투자자 자금으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성과를 낼 경우 원금과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

○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크라우드 펀딩\* 등의 금융자원 활용 유도

\*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하여 익명의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화, 공연, 음악, IT 등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



### ③ 인력 양성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 가.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 협동조합의 가치·철학을 공유하면서 협동조합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형 인력 양성

□ 협동조합 임직원별\* 창업단계별\*\* 교육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내실화

\* (실무자) 재무회계, 마케팅 등 (임원) 리더십, 의사결정, 인사 등

\*\* (창업전) 정관작성,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후) 경영원리·노하우 등

○ 표준교육교재에 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상 필요한 내용을 보완

○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협동조합 관련 기관\* 활용으로 시간·장소 상의 제약을 줄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 등

○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과목 신설 등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 협동조합의 사업수익모델 구축, 회계·인사운영 등 전문적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

○ 중간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여, 중간지원기관 및 연합회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진 검토

\* 은퇴 전문인력,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영·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풀을 구성,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인력으로 활용



- 학생, 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협동조합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 각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 신설 추진
  - KAIST 등 국내 우수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과정을 도입하는 등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
  - 시범적으로 교수, 교직원, 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협동조합 대학원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 나. 對국민 교육·홍보 강화

◇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협동조합의 설립·가입·이용을 활성화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유도

-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
  - \* 협동조합형 중·고등학교 매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생활 체험 유도
- 협동조합의 대표적 비즈니스 사업모델\*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 분야\*\*를 인큐베이팅하고, 성공사례 홍보
  - \* 주택, 에너지, 지역재생 등
  -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 등
  -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국제 공모전 개최, 유형별 성공 모델 책자 발간
-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와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실시\*
    - \* 우수사례는 관련 매체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성공 비즈니스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후발 협동조합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 지자체가 주관하는 협동조합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 아이템 홍보 및 조합원 추가모집의 기회 마련



## 4 연대·협력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 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협동조합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지원

□ 협동조합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해산 절차, 교육·홍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 신속한 정보 전달·공유를 위한 문자서비스(SMS)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시스템 등 추가 구축

○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구매 정보 제공을 통한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 실시·결과 공표

○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설립 절차 효율화

\* 협동조합연합회 수리·인가 시 회원 협동조합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 협동조합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 나.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 ◇ 중간지원기관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민간의 협동조합 설립·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기관으로서 연합회의 구축 기반을 마련

### □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및 내실화

- 현재 설립상담 위주의 컨설팅에서 설립 후 판로개척, 회계·노무·법무\* 등 경영컨설팅으로 역할 확대

\* 특별 분야 전문가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

- 중간지원기관이 지역기반의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원연계\* 및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

\* 중간지원기관을 지역내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대기업 사회공헌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인 중간지원기관 설립기반 마련

-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는 통로마련

- 일반협동조합은 연합회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역별로 중간지원기관을 상설 기구화하는 방안 검토

### □ 소규모 연합회 난립 방지\* 등 연합회 설립기준 개선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추이, 타 법상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마련

\* 연합회라는 대표명칭을 선점하기 위하여 연합회 설립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 연합회 설립 후 실제 사업운영이 없는 사례 등



## 다.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국내외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

□ 민간·지자체·각 부처 등과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협력 체계를 확대·발전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지자체 협의회, 한국사회경제연대회의 등

○ 대학 및 연구기관, 종교기관,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동조합간 사업 연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상생협약 유도 등

○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연대·협력을 위한 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지원\*\*

\* 현제도 협의회 구성·운영 가능(법 제8조 제2항)

\*\* 단계별 지원(교육, 판로, 금융 협력 등 지원)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CSR)의 일환인 사회 공헌활동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

\* 민간기업의 성공경험 및 경영노하우, 사업개발, 판로개척 등 민간의 전문성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내 협동조합국) 등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협동조합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 모색

\* 협동조합기본법 제·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등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 경험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안 검토



## IV. 추진 체계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최고 기구로 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환경 조성

\* 중요사항 심의, 부처협력 등 필요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기재부 차관보 주재)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 애로사항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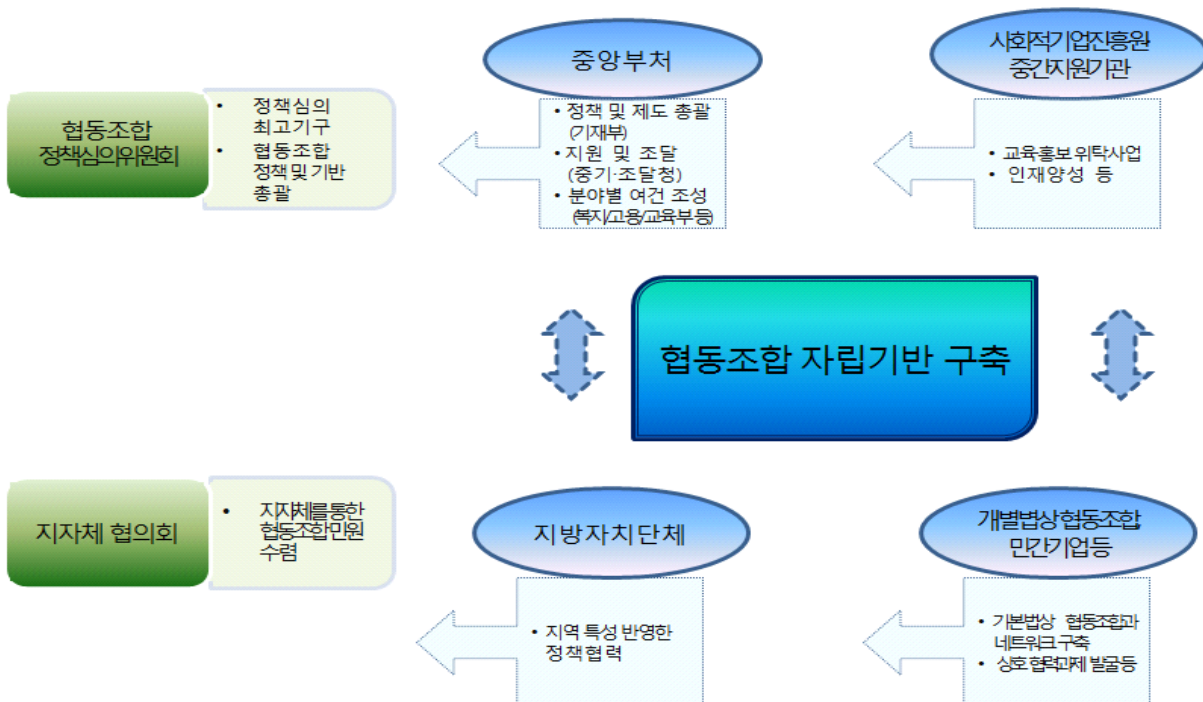
### □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 위탁으로 인재 양성 및 대국민 홍보
- 중간지원기관은 설립·운영 컨설팅, 설립 희망자 교육 등 지원

### □ 농협, 수협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8개), 민간 기업 등















-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 추진체계 》












































## V. 실천 과제별 소관 기관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1. 시장 진입 : 시장참여 기회 확대					
1-가.	공정 한 경쟁 여건 조성				
1-가-1.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혜택을 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중기청 지자체
	○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 검토				기재부 중기청
1-가-2.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및 조달 매뉴얼에 협동조합 명기				기재부 조달청
	○ 일반협동조합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중소 기업 구매실적에 포함 공개				기재부 중기청 지자체 공공기관
1-가-3.	타 법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에 협동조합도 진입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정위 등
1-가-4.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 허용				기재부 법무부
1-가-5.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을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적용 검토				기재부
1-가-6.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검토				기재부 안행부 지자체
1-가-7.	조합원이 인·허가 보유 시 협동조합의 경쟁입찰 참가 가능 여부 검토				기재부
1-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나-1.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운영				기재부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인증범위 확대 등				고용부
1-나-2.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 확대				복지부 등
	○ 법적 규제, 지정기관제 등 진입장벽 제거				기재부 등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복지부 등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2. 자금 조달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2-가.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2-가-1.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각 부처 지자체
	○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 포함				고용부
	○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기재부 등
2-가-2.	비분할 적립금 세제혜택,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등 내부자금 확충 검토				기재부
2-가-3.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 유도				기재부 금융위
2-나.	금융자원 활용				
2-나-1.	특례 보증의 업종 및 기간의 점진적 확대				중기청 지자체
2-나-2.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 이용방안 검토				금융위
2-나-3.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이용 확대				금융위 등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기재부 농림부 등
	○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활용				기재부 금융위
2-나-4.	자금 원천의 다원화 검토				기재부 금융위 등
	○ SIB와 사회적협동조합간 연계				기재부 등
	○ Crowd Fund 등 금융자원 활용 유도				안행부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3. 인적 자본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3-가.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3-가-1. 협동조합 기본교육 내실화					기재부 안행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 표준교육교재에 세무·회계 등 경영상 필요한 내용 보완					기재부
○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재부 중기청 등
○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과목 신설 등					안행부
3-가-2. 전문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기재부
○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기재부
○ 전문가 인력 풀 구성으로 지원인력에 활용,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진 검토					기재부
3-가-3. 사회적경제 책임 대상에 교육체계 강화					기재부 교육부
○ 거점 국립대학에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 신설					기재부
○ 우수 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 도입					기재부
○ 협동조합 대학원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교육부 등
3-나. 對국민 교육·홍보 강화					
3-나-1. 초·중등 교육과정,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					기재부 교육부
3-나-2. 비즈니스 사업모델 등을 인큐베이팅하고 성공 사례 홍보					기재부
○ 공모전 개최, 유형별 성공모델 책자 발간					기재부
3-나-3.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와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 추진					기재부 고용부
○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실시					기재부 안행부
○ 협동조합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아이템 홍보 및 조합원 추가모집의 기회 마련					기재부 지자체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4. 연대·협력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4-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가-1.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재부 법무부 등
○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기재부
○ 온라인 상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 (B2B) 구축					기재부
○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기재부 지자체
○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설립절차 효율화					기재부 법무부 등
4-가-2. 협동조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기재부
4-나.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4-나-1.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내실화					기재부
○ 설립 상담에서 경영컨설팅으로 역할 확대					기재부
○ 중간지원기관의 내부직원 역량 강화					기재부
4-나-2.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 중간지원기관 설립 기반 마련					기재부
○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연대 통로 마련					기재부 등
○ 연합회, 중간지원기관을 상설기구화					기재부 등
4-나-3. 연합회의 설립기준 개선					기재부
○ 협동조합연합회, 다른 연합회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개선 방안 마련					기재부
4-다.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4-다-1. 민간·지자체·각 부처 등 네트워크 확대					기재부 등
○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동조합의 사업 연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재부 지자체
○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연대·협력체계 구축·지원					기재부 소관 부처
4-다-2.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					기재부 등
4-다-3.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기재부
○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을 모색					기재부



□ **목적** (법 제11조의2 제1항)

-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둔

□ **구성** (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의2)

-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위원) 공무원인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정부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등
  - 위촉위원은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임기는 2년

□ **심의사항** (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와 관련된 사항
- 협동조합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사항
-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 등

□ **운영** (시행령 제3조의3)

-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일정 조정 가능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목적** (시행령 제4조 제1항)

-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둔다

□ **구성**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위원)** 각 시·도 협동조합 담당 국장 또는 본부장 등 20명 이내
- **(간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 **협의·조정 사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6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가능
-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참석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함



## □ 목적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마다 실시(법 제11조제6항)

※ 2013년(제1회), 2015년(제2회)에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 □ 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1조제7항)
- 이사장(경영자료 등), 조합원(의사결정구조 등), 임금근로자(근무현황) 등이 설문지 작성
- 우편, 전화, e-mail 등을 통해 조사 실시
- 결과 공표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법 제11조제6항)

## □ 주요조사항목

- 설립현황 : 설립소요기간, 신생설립여부, 법인등기 여부 등
- 사업현황 : 사업시행여부, 수익창출방식, 사업목표 달성도 등
- 구성원현황 : 이사장 특성, 근로자 특성, 조합원 특성 등
- 재무상황 : 총자산 현황, 운영자금 구성현황 등
- 정책활용 : 현행정책에 대한 이용률 및 향후 필요정책 등



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비중은 55.5%

○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92.1%가 일반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7.3%

\* 지역주민 권익·복리증진 관련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비영리법인)

○ 주로 영위하는 업종은 도소매업(22.6%), 교육서비스업(16.1%), 농림어업(11.5%) 順

○ 총 조합원수는 106,020명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는 47.3명

② 협동조합 종사자는 조합당 평균 13.2명

○ 임원 6.0명, 자원봉사자 5.0명, 직원 2.2명

○ 1차 조사(7.7명)에 비해 자원봉사자, 직원을 중심으로 증가

\* 임원 +0.2명, 직원 +0.9명, 자원봉사자 +4.4명(유급 △0.2, 무급 +4.6)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보수(급여 또는 배당)를 받는 취업자수는 조합당 평균 4.3명(직원 2.2명, 임원 1.9명, 자원봉사자 0.2명)

○ 협동조합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정규직 143만원, 비정규직 98만원 수준이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율은 81.9%

③ 협동조합당 평균 자산은 5,744만원, 출자금은 4,069만원이며, 부채는 1,675만원

○ 조합당 평균 매출액은 2억 1,402만원이며, 영업외수입은 2,469만원, 당기순이익은 평균 1,923만원

\* (1차 조사) 평균 자산 3,956만원, 출자금 2,938만원, 부채 1,018만원



④ 협동조합의 49.4%가 자원봉사 등 노동력 제공, 생산물품 및 현금 기부 등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을 전개

- '14년 1년간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헌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0억 7,795만원 수준(보사연 추정)
- 협동조합 취업자의 14.1%는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에서 고용

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 사회적기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합은 전체 조합의 32.7%

\*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장비 · 브랜드개발 비용 등 지원(중소기업청)

- 16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해 교육 · 컨설팅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 비중은 48.1%
- 판로지원(40.7%), 금융인프라 확보(17.7%), 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16.7%), 협동조합간 연대(10.0%) 순으로 정책 지원을 희망



- (설립) 신생설립이 97.7%(739개)이고 설립기간은 약 2.6개월  
업종은 도소매(28.2%), 농·수·임업(14.2%)이 많고, 법인등기를  
마친 곳은 87.1%(651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406개)
  - (사업) 협동조합들은 기존사업영역을 기반(91%)으로 조합원을  
주요고객(35%)으로 한 공동판매(51.4%)가 주 수익창출방식
    - 사업시행 협동조합의 목표 매출액 평균은 1억 8,641만원, 목표  
이윤은 3,991만원이나, 2분기달성도는 각각 26.6%, 15.5% 수준
    - 목표달성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판로 미확보(29.3%), 정부지원  
부족(18.2%), 조합원 부족(15.2%) 순
  - (구성원) 이사장은 대졸학력·50대·남성·중소기업 출신이  
다수이고, 평균 조합원 수는 58.7\*명, 평균 취업자 수는 5.83명  
이고 이중 신규 창출된 인원은 3.5명
    - 직원을 고용한 협동조합은 416개(55.7%)로 임원과 직원의 평균  
급여는 114만원~177만원 수준, 4대 보험가입률은 정규직은  
61%~64%정도이지만 비정규직은 약 21% 정도
- \* 1,100명이 넘는 대규모 협동조합(7개) 제외시 평균 조합원 수는 30.6명
- (재무) 7월 기준 협동조합 총자산은 약 293억원이고 조합원  
출자금은 약 218억원(74.4%), 운영자금은 출자금(72.2%)을 주로  
이용
  - (정책) 현행정책 중에는 중간지원기관 설립상담을 많이 이용,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공 조달시장  
우선권 부여(31.5%), 금융시스템 구축(23.8%)을 제시



□ **기본원칙** (법 제10조제1항)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못함

□ **자금지원** (법 제10조제2항)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가능

□ **경영지원** (법 제10조의2)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 **교육훈련지원** (법 제10조의3)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법 제95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

□ **다른 법령 개선을 통한 주요 지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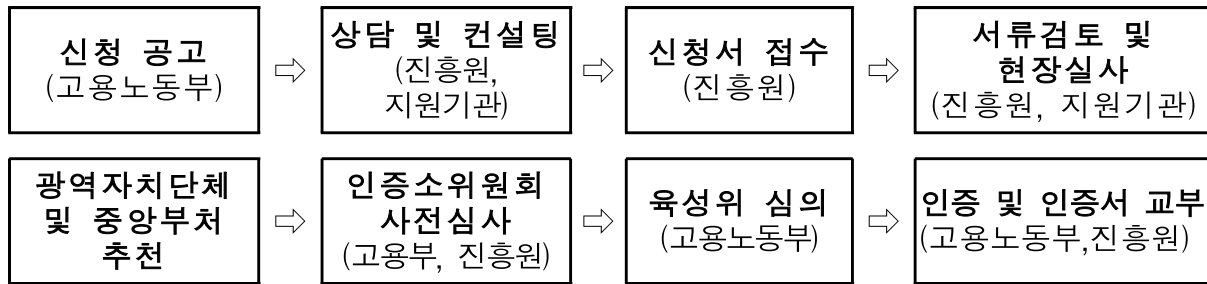
- ‘중소기업’에 일정 조건\*을 갖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업종별로 매출액이 기준금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등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8조)
-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구분	인증요건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항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b>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b>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유형의 <b>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b> 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임원을 구성해야만 법인 설립이 인가 되므로 <b>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b> (단, 회의 개최 실적은 현장 실사 시 확인)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변경사항 없음
⑥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협동조합은 <b>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b> (정관은 확인하되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불필요)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 합자 조합일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은 <b>증빙서류 제출 불필요</b>



## □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지정 (법 제12조)

-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 정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기념식, 박람회, 학술행사(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간담회), 영화상영 등 개최 가능

## □ 협동조합 로고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으로 소유함을 표현

## □ 협동조합 슬로건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며  
협동조합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의미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법 제13조제1항)
  - 농협·수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음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법 제13조제2항)
-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법 제45조제2항)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직법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 운수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거쳐야 함
-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법 제13조제3항)
  - 공정위 예규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대상인 안전지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건전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일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

-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적용

구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협동조합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 제외(법 제13조제4항)

-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 내부통제기준, 모집관련 준수사항, 자산운용 원칙, 감독 등 적용 제외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간주

※ 상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상법 제1편 총칙’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협동조합등이라 함
제21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 사용,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 표시
제23조	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제23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 청구 가능
제29조	협동조합등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제33조	협동조합등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
제37조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상법 제2편 상행위’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함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87조의7	조합원등의 책임은 이 법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제287조의32	협동조합등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름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간주

※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
제51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52조의2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제61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
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제65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 Ⅲ . 협동조합

<b>1. 개요</b> .....	<b>101</b>	<b>5. 사업</b> .....	<b>149</b>
<b>2. 설립</b> .....	<b>102</b>	가. 사업의 내용 .....	149
가. 설립신고 절차 .....	102	나. 사업의 이용 .....	152
나. 설립신고 서류 .....	111	<b>6. 회계</b> .....	<b>154</b>
다. 성립 및 설립무효 .....	119	가. 회계 .....	154
라. 변경신고 .....	120	나. 경영공시 .....	161
<b>3. 조합원</b> .....	<b>125</b>	<b>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b> ..	<b>238</b>
가. 자격 및 가입 .....	125	가. 합병 및 분할 .....	238
나. 출자 및 책임 .....	127	나. 타 법인 흡수합병 .....	242
다. 의결권 및 선거권 .....	129	다. 해산 및 청산 .....	247
라. 탈퇴 .....	130	라. 조직변경 .....	251
마. 제명 .....	132	<b>8. 등기</b> .....	<b>256</b>
바.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133		
<b>4. 기관</b> .....	<b>135</b>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	135		
나. 임원 .....	139		
다. 선거운동의 제한 .....	147		







# 1. 개요

## □ 정의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 특징

구분	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관련 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 설립현황

- ‘16.12월말 기준 전체 협동조합은 10,640개가 설립되었으며, 이중 일반협동조합은 9,979개로 약 94%를 차지
-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http://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 2. 설립

### 가

### 설립신고 절차

####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법 제15조제1항)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 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법 제20조)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진행,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 파기

##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기본법 제16조(정관)제1항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 포함



#### 4. 창립총회 공고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시·도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 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5. 창립총회 개최

- 필수 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이사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 6. 설립신고

###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고
  -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 설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이로써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통보를 갈음



시행령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 신고확인증(시행규칙 제8호 서식)'** 발급

-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장 명의로 신고확인증 발급

○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시행령 제8조제1항)



## ○ 보완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 반려가능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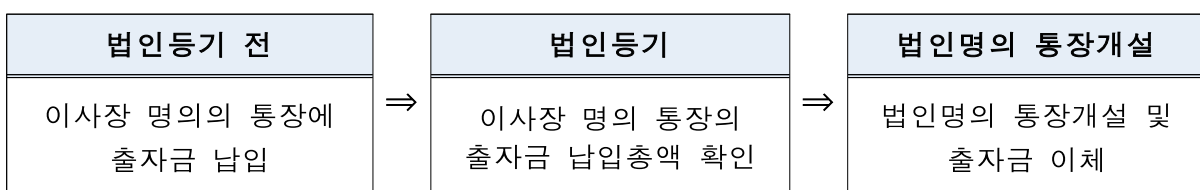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 출자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제출(설립신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 10. 설립등기

### 기본법 제61조(설립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하며, 협동조합은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출자금의 납입”이란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제1호)

##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본인은 「○○○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협동조합(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하며,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번호는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제24조의2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구분	신고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 1.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발기인 중 1인이 설립신고인이 됨

## 2. 정관

### 기본법 제16조(정관)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하되,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기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 ○ 주요 확인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45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또는 서명 하여야 함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게시사진, 전자우편 화면캡처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회원 자격이 있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 4. 창립총회 의사록

###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선출된 임원이 모두 설립동의자인 경우)
-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 ○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하여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협동조합이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공증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이사장의 진술서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조합원의 인감증명

## 5. 임원명부 및 이력서

### ○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3x4 사이즈) 포함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기재
-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기재



### ○ 주요 확인사항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의사록에서 확인)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이력서 제출

## 6. 사업계획서

### ○ 서식 :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서식 중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산출근거 기재
- 다만,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로서 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만 기재

### ○ 주요 확인사항

- 정관상 사업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45조에 규정된 필수사업이 포함되어야 함

## 7. 수입지출예산서

### ○ 서식 : ‘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5호 서식)’

### ○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출자 1좌당 금액,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 ○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않은 협동조합은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협동조합기본법 부칙<제12272호, 2014.1.21> 제7조)
-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면 안 됨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 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발기인으로, 발기인이 아닌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설립동의자로 구분하여 기재

## 10. 합병 또는 분합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 ○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합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법 제56조제1항·제2항(합병 및 분합)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합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 참고사항

- 설립신고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간인 불필요
  - ‘간인’이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여야 하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협동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조합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협동조합 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상법 제186조-193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협동조합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2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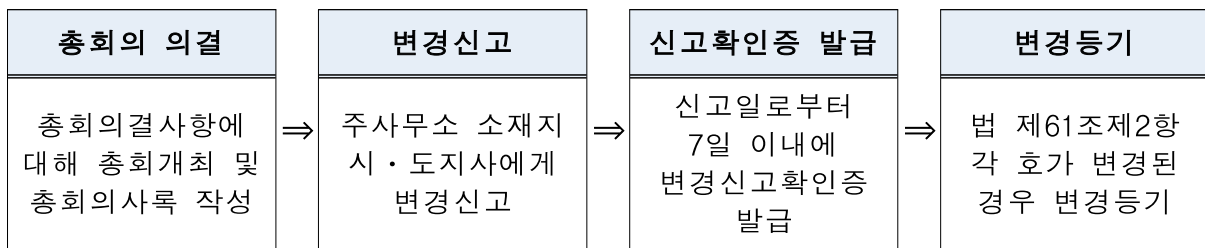


## 변경신고 관련 법령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변경신고 절차



※ 협동조합 설립 신고·수리 후 등기전 협동조합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신고

- 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개최 및 의사록 작성
- ② 이사장이 신고인이 되며, '협동조합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14일 이내 신고
  -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 발생(법 제16조제3항)
  - 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신고 후 서류 일체가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이송된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관변경 신고



③ 명칭, 이사장, 주사무소 변경시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하며, 그 외의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 변경신고확인증은 변경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공휴일 제외)
- 변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 시스템”에 반영

④ 협동조합은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

-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등기 (대법원 등기국 확인사항)
- 다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연번	법 제61조제2항	비 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 변경신고 서류

###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시행규칙 제6조제2항)’를 첨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고확인증	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1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 신고확인증 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이사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2	임원 변경	가. 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나.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등) ③** 협동조합등은 다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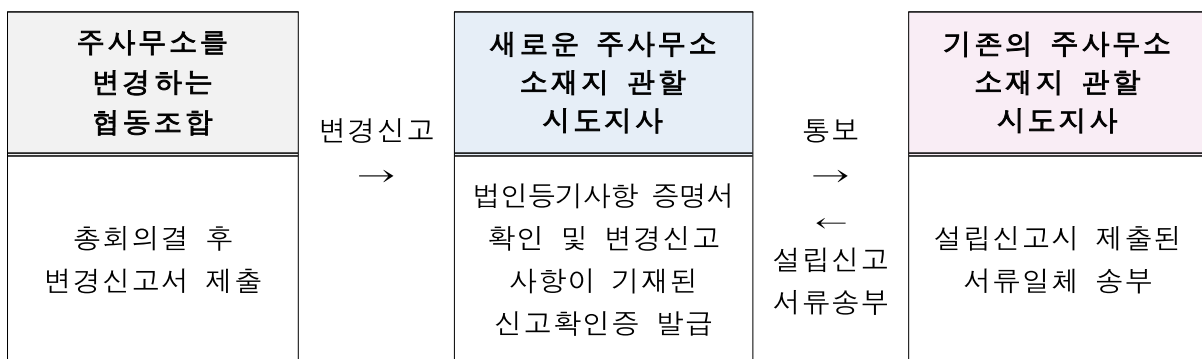
○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기초자치단체로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이관 시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신고

○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공문에 변경신고서 사본 첨부)

-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등재하고 변경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발급





### 3. 조합원

#### 가 자격 및 가입

#####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관련 법령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

#### □ 조합원의 가입

-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 가능
- (법인)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가능
  -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미성년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필요



-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 공무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 기본법 제16조(정관) 및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16조(정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 출자

-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됨
  - 조합원 1인이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은 출자금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119조제2항제1호)

## □ 현물출자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 가능
  -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정관에 객관적인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방식(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시가 등) 기재 가능
  - 설립등기 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조합 명의로 발급 가능) 첨부



## □ 출자금의 사용

- 출자금은 사업운영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개인명의로 사용 금지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

## □ 출자금과 질권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일반기업의 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님
-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 □ 출자금과 채권

-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債權)과 상계하지 못함
- 협동조합에 가입할 설립동의자가 협동조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출자금 납입을 갈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출자금 납입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 □ 출자금과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므로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외에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기본법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소유,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

## □ 대리인의 선임

-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대리인을 특정하여 지정하며,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의 의결권 및 선거권 무효
  -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을 협동조합에 제출
- 대리인의 범위는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함



## 기본법 제24조(탈퇴)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음

## □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유로 탈퇴
  - 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② 사망한 경우
  - ③ 파산한 경우
  -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연탈퇴



## □ 조합원 지위·지분 양도에 대한 총회의 의결

-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법 제29조)’, ‘조합원의 지위 및 지분의 양도(법 제24조)’는 총회에서 의결
  - 총회의 의결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
-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는 탈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분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

##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기본법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 청구 가능
  - 예시)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 가능

### ※ 참고사항

- 협동조합 운영중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인 되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정관에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함
  - 다만, 출자금(법 제2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 법 제14조는 법에 규정한 사항 외는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없게 된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함



기본법 제25조(제명)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명"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

☐ 제명사유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자,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명절차

-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제명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는 효력이 없음



##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 지분환급청구권

-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총회의 의결을 필요
  -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등으로 구성
  -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
- 지분은 탈퇴 및 제명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함
-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 환급정지

-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환급청구권 정지 가능
  - “채무”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선금금, 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



## □ 지분 산정방법의 종류

- 협동조합 지분의 산정방법으로는 개산(균등)식 지분산정방법과 가산(차등)식 지분산정방법이 있음
- 각종 적립금 지분 산정에 따른 어려움이 적은 가산식 지분산정방법 권장

## □ 지분 산정방법

### ○ 가산(차등)식 지분산정 방법

출자지분 =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 ② 총회가 정한 사업준비금 지분

####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 협동조합의 재산이 납입출자금 총액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감액

#### ② 사업준비금 등 지분에 포함할 임의적립금의 종류는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정하며, 각 조합원의 지분은 이용고배당 방식으로 계산

#### ③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해산 시에만 계산

### ○ 개산(균등)식 지분산정 방법

- 순재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총 출자좌수로 나눈 금액을 1좌당 지분으로 계산

출자지분 = 순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 총출자좌수 × 납입출자좌수



## 4. 기관

### 가

### 총회 및 대의원총회

#### □ 총회

#### 기본법 제28조(총회)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 및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정기총회)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시행령 제12조제3항)
  - (임시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 □ 총회의 의결사항

### 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총회 의결정족수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li> <li>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li> <li>3. 조합원의 제명</li> <li>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li> <li>2. 임원의 선출과 해임</li> <li>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li> <li>4. 결산보고서의 승인</li> <li>5. 감사보고서의 승인</li> <li>6.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li> <li>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대의원총회

### 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 구성 가능(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됨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기본법 제32조(이사회) 및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 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란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사항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정관에 법 제33조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명시



## □ 임원

## 기본법 제34조(임원)

-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가능하며,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
  - 다만, 법인세법 109조에서 법인 설립 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의사 및 능력이 필요



## □ 임원의 임기

### 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 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

\* 임원의 임기가 4년이고, 2차에 걸쳐 연임하는 경우 한번에 최대 12년까지 재임 가능

##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기본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기능)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자격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 등
  -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촉기간, 자격상실 규정
  - (운영)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등



## □ 임원 등의 결격사유

###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http://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를 통해 조회

-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된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 '결격사유 유무'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찰청으로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의뢰

## □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

○ 퇴직된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기본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 수행해야 함

#### ○ 임원의 책임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봄



## □ 임원의 해임

### 기본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위반 시 해임

#### ○ 해임절차

-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요구
- 협동조합은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 결의

##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기본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이사장)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 집행

○ (이사)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대행

- 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음



## □ 감사의 직무 및 감사의 대표권

### 기본법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서,

- 회계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 ○ 감사의 직무

-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 대조·확인 가능

- 이사장 및 이사가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 감사의 대표권

-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함



## □ 임직원의 겸직금지

### 기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겸직금지 사항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이사장, 이사 및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금지 원칙
-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 ○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0조)

구분	내용	비고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직원협동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결격사유 조회 방법

-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을 통해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에 대한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후, 열람하고자 하는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뒤 조회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로는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만 조회가능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의뢰하여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확인
- ② (공문으로 확인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요청
  - 등록기준지 최소단위구역이 '읍·면'인 경우 읍·면장에게, '동'인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에게 의뢰

##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신원조회는 불가하나,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속한 지방경찰청으로 범죄경력조회 의뢰(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조회 의뢰)

## ※ 신원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협동조합 수리에 필요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범죄경력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불임과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의 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선거운동 제한은 협동조합의 임직원,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



## ☐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

### ○ 금품 등의 제공금지 등

-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금품 등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팩스·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법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



## 5. 사업

### 가

### 사업의 내용

#### 기본법 제45조(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정관상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 협동조합의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 필수 포함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 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이 불가능, 「의료법」에 따라 안마원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타당한지 우선 확인
  - 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므로 협동조합이 상조업을 수행할 수 없음
- ※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 저축기관
		투자기관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금융지주회사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투자 자문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전문개정 2014.12.30.)

**법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사업의 이용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조합의 유형 및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이용이 나타남

※예시) 소비자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사업자협동조합은 공동판매, 공동 자재구매 등이,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사업의 이용이 될 수 있음

- ☐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잉여금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함(법 제51조제3항)



## □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유형	구분	내용
소비자 협동조합	정의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표준 정 관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사업자 협동조합	정의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표준 정 관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업(혹은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 이용, 자전거협동조합 조합원의 자전거 부품 공동구매
직원 협동조합	정의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표준 정 관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청소협동조합이 청소부를 직원으로 고용,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정의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표준 정 관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도시락 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고(사업자 또는 자원봉사)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후원자)하는 사업



## 6. 회계

### 가 회계

#### □ 회계연도

##### 기본법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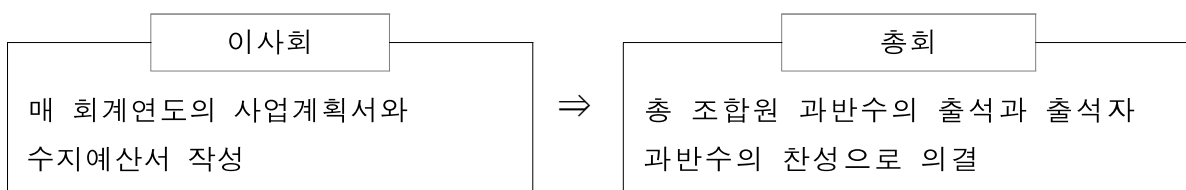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 “회계”란 재산의 증감·변동·수입과 지출·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함
-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함
  - (일반회계) 협동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처리
  -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사용 가능

####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기본법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운영의 공개

### 기본법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 운영의 공개 사항

- ①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②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 ③ 조합원 명부
- ④ 회계장부
- ⑤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 운영의 공개 사항 중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제2,3호)



## □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구분	내용
잉여금	순재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
순재산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이라고도 함
법정자본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
  -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 □ 손실금의 보전

###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
-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 □ 잉여금의 배당

###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 가능
  -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 배당세율은 배당소득의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잉여금의 배당은 총회나 이사회가 필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되, 모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약에 일부를 정할 수 있음



## □ 결산보고서의 승인

### 기본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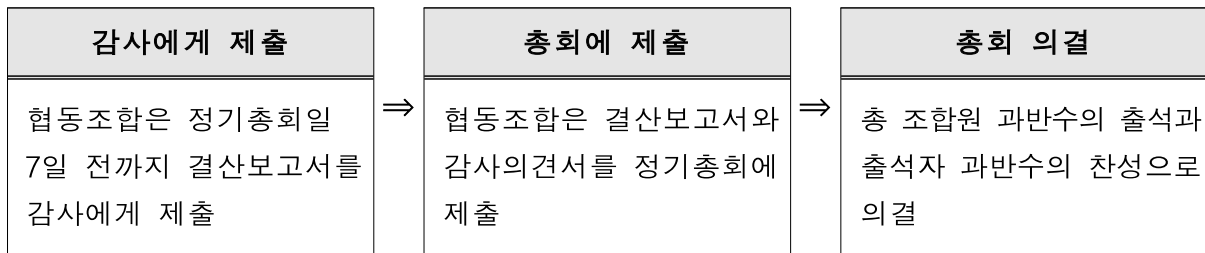
**제 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결산보고서의 종류

- 사업결산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

#### ○ 결산보고서 승인 과정





## □ 출자감소의 의결

###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총회의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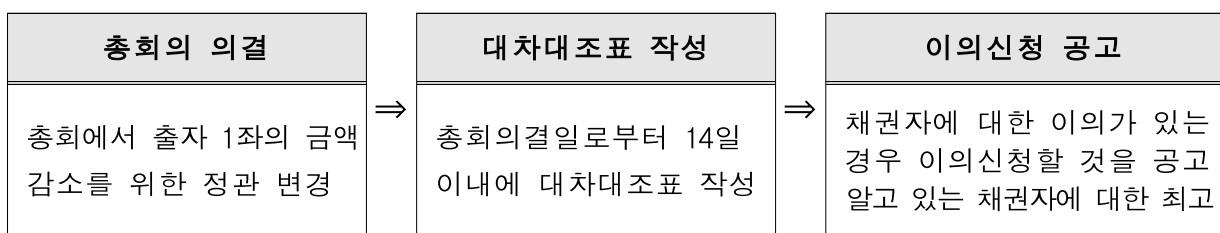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대차대조표의 작성

- 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 ○ 이의신청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 대차대조표 작성기간(14일)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최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민법 제111조제1항)





##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봄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 기본법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조합원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는 등)으로 하여서는 안됨



##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및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 □ 경영공시 대상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결산 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도 경영공시 대상

- 단,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받은 협동조합 제외



## □ 경영공시 자료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li> <li>•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li> </ul>
사업결산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li> <li>•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예산과 '사업결산 보고서' 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li> <li>•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li> </ul>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li> <li>• 창립총회 포함</li> </ul>
사업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li> <li>•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li> </ul>

## □ 경영공시 방법

-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각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시행령 제12조제3항)

\* '16년까지 기재부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통합공시 하였으나, '17년부터 소관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하도록 의결(제1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15.10.20))

### <참고>제1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15.10.20) 안건中

#### 경영공시 책임성 강화

#### □ 현황

- 협동조합이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협동조합별로 **개별 공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하여, 기재부장관이 공시대상 협동조합('14년 142개, '15년 227개) 전체를 일괄하여 **통합공시**
  - \* 시·도의 경영공시 홈페이지 미구축,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이해 부족, 공시자료 작성의 통일성 확보 등

#### □ 문제점

- 기재부장관이 경영공시의 최종적인 주체가 됨에 따라 공시자료의 1차 작성기관인 협동조합의 책임성 부족으로 부실자료\*가 많이 발생
  - \* 결산데이터 불일치, 첨부서류 누락, 개인정보 노출, 오탈자 등
- 부실공시 또는 공시 지연 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의 주체는 시·도 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 그러나, 경영공시의 경우 기재부가 통합공시 함에 따라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 □ 개선방안

- '17년부터는 기재부가 통합공시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별로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 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책임성 제고
  - 협동조합은 개별 공시 이전에 중간지원기관, 진흥원 등에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공시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은 공시지연, 부실공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경영공시 절차

### ○ 협동조합

-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
-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 지방자치단체

- 관할 협동조합 중 경영공시 대상(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 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
- 관할 협동조합에서 등록한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의 첨부 여부 확인
- 경영공시 첨부자료와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일치여부 확인
- 경영공시 자료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통보하여 보완
- 관할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공시기한, 허위사실 게재 등) 준수 여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명령, 과태료 및 벌칙 부과 등 조치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 각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한 경영공시 자료를 취합하여,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게재

### ○ 기획재정부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등 경영공시 총괄
-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관리 및 제도 개선



협동조합	소관 지자체	진흥원	기획재정부
각 지자체 사이트에 경영공시자료 업로드	경영공시 자료 검토 및 최종확인	경영공시 자료 취합, 협동조합 포털에 게재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교육 등 총괄

- ☐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 경영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고,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



#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검토자용]

2017. 2.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목 차

I. 경영공시 소개 .....	167
II. 공시시스템 접속·사용 방법 .....	171
III. 자료 검토·작성방법 .....	179
(1) 협동조합(연합회)검토사항(기관 담당자) .....	180
작성방법(협동조합원) .....	181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검토사항(기관 담당자) ...	192
작성방법(협동조합원) .....	193
<참고>	
협동조합 시스템 관련 자주하는 질문(협동조합용) .....	216
주요 경영공시 자료 서식 .....	220
관련 기관 연락처 .....	234



# **I . 경영공시 소개**



## 「협동조합 경영공시」 소개

### 1 목 적

-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조합원 및 일반 국민에 공개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의 공개를 통해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지역민의 조합원 참여 계기를 마련

### 2 협동조합 시행 관련 규정

- 경영공시 대상, 내용, 시기 관련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및 제96조의2(경영공시)
  -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 시행규칙 제8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 제49조의2(경영공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 제96조의2(경영공시) ①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 ○ 위반시 처벌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 제119조(과태료)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 ③ 공시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기 때문에 2017년 3월말까지 경영공시 자료 게재

Q.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규정한 협동조합은 2017년 5월말까지 경영공시 자료 게재

### ④ 공시 대상

구분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도 말 기준, 조합원 수 200인 이상</li> <li>○ 16년도 말 기준,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li> <li>* 16년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은 제외</li> </ul>
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도 말 기준,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 200인 이상</li> <li>○ 16년도 말 기준,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li> <li>* 16년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은 제외</li> </ul>
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 경영공시 대상</li> <li>* 16년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은 제외</li> </ul>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 경영공시 대상</li> <li>* 16년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은 제외</li> </ul>

### ⑤ 공시 방법 및 절차

대상	교육	입력/보고	검토/승인
협동조합	지역내 권역별 지원기관	시도 홈페이지	시도 담당 공무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관할부처 홈페이지	관할부처 담당 공무원



## 6 공시 내용

- 정관, 규약 또는 규정
- 사업결산 보고서
-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 사업결과 보고서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해당 경우만)
- \* 경영공시 자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작성



## Ⅱ. 경영공시 시스템 접속 · 사용방법



## L 로그인

- 로그인 화면에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개의 IP주소당 1개의 아이디 생성됨**

**\*\* 연동신청서 미제출 기관 또는 IP주소 미입력기관 진흥원 담당자 연락(031-697-7731)**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록

인증서 로그인

## U 경영공시 목록

- 해당연도 선택 → 해당 연도에 등록된 경영공시 정보가 출력
- 경영공시 정보가 제출되면 1차 대기상태로 설정 → 제출 서류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합계	임시저장	1차검토중	1차검토반려	완료
1	0	0	1	0

현재까지 총 1 개의 경영공시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 로그아웃

전체 협동조합 ▼ 전체 소관부처 ▼ 전체 지역 ▼ 상태 선택 ▼  
협동조합명 ▼ 검색

번호	협동조합명	조합원	출자금	자산	지역	소관
1	<span>1차반려</span>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15 명	123, 123	246,246	세종시	기획재정부

- 승인 시 아래와 같이 완료로 변경됩니다.

1	<span>완료</span>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15 명	123, 123	246,246	세종시	기획재정부
---	---------------------------------	------	----------	---------	-----	-------

- 반려 시 아래와 같이 1차 대기로 변경됩니다.

1	<span>1차대기</span>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15 명	123, 123	246,246	세종시	기획재정부
---	-----------------------------------	------	----------	---------	-----	-------

- 반려 후 재 반려 시 아래와 같이 1차 반려로 변경됩니다.

1	<span>1차반려</span>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32 명	123, 123	246,246	세종시	기획재정부
---	-----------------------------------	------	----------	---------	-----	-------



○ 상세정보 화면에서 승인과 반려가 가능합니다. 승인 시 완료 상태로 변경되고 경영공시 메뉴에 공개됩니다.

173



$\{$ 

○ 상세정보 화면에서 승인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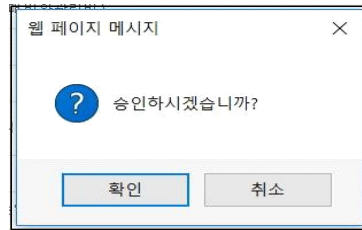
* 협동조합명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 회계연도	2016		
			* 회계연도기간	2016.01.01 ~ 2016.12.31		
* 주소	11111 기본 주소1 상세 주소2					
* 연락처	02 - 1234 - 1234					
홈페이지	http://					
* 임원	이사장	1 명	* 조합원	사업자(생산자)	1 명	
	이사	2 명		소비자	23 명	
	감사	3 명		직원	4 명	
				자원봉사자	3 명	
				후원자	1 명	
직원 (조합원+비조합원)	6 명	상세내역	남성	3 명	여성	3 명
			정규직	4 명	비정규직	2 명
			취약계층	1 명	비취약계층	5 명
출자금 총액	123,123 원	배당금	123,123 원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자산	246,246 원 (자산 = 부채 + 자본)					
* 부채	123,123 원					
* 자본	123,123 원	* 자본 상세내역	조합원출자금	123,123 원		
			법정적립금	123,123 원		
			임의적립금	123,123 원		
			미처리결손금	123,123 원		
			이월결손금	123,123 원		
②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 매출액	123,123 원					
* 매출원가	1,111 원					
매출총손익	122,012 원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1,111 원					
영업손익	120,901 원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	1,111 원					
* 영업외비용	1,111 원					
법인세차감전 손익	120,901 원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 등	1,111 원					
당기순손익	119,790 원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 등)					
첨부파일	1.정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test.pdf (81,385)				
	2.사업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pdf (81,385)				
	3.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전문컨설팅 수행계획서 - test.pdf (81,385)				
	4.사업결과 보고서	사업보고서.pdf (81,385)				
	4-1.사업결과 보고서(첨부서류)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5.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리자대기상태
승인
반려

수정
목록



- 승인여부를 묻는 메시지창이 뜨고 확인을 하면 승인됩니다.



- 승인 완료 후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합계	입시저장	1차검토중	1차검토반려	완료
1	0	0	0	1

현재까지 총 1 개의 경영공시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로그아웃

전체 협동조합  전체 소관부처  전체 지역  상태 선택

협동조합명

번호	협동조합명	조합원	출자금	자산	지역	소관
1	<span>완료</span>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32 명	123,123	246,246	세종시	기획재정부

## { 경영공시 반려

- 상세정보 화면에서 반려를 클릭합니다. 반려를 클릭하면 반려 사유를 넣는 팝업이 출력되고 사유를 입력하면 반려됩니다.

경영공시 반려사유 - Internet Explorer

**ccop 협동조합**

반려 사유

반려자 운영자 반려일 2017-0-3

110%

- 반려 완료 후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합계	입시저장	1차검토중	1차검토반려	완료
1	0	1	0	0

현재까지 총 1 개의 경영공시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로그아웃

전체 협동조합  전체 소관부처  전체 지역  상태 선택

협동조합명

번호	협동조합명	조합원	출자금	자산	지역	소관
1	<span>1차대기</span>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32 명	123,123	246,246	세종시	기획재정부



- 사용자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승인 상태에서는 2번 반려해야 하고, 1차 대기 상태에서는 한번만 반려하면 됩니다.
- 반려된 경영공시의 상세정보를 보면 아래와 같이 반려된 사유와 일시가 표시됩니다.

번호	반려사유		반려자	반려일
1	테스트 반려		운영자	2017.01.31

<b>* 협동조합명</b>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b>* 회계연도</b> 2016	<b>* 회계연도기간</b> 2016.01.01 ~ 2016.12.31	
<b>* 주소</b> 11111 기본 주소1 상세 주소2			
<b>* 연락처</b> 02 - 1234 - 1234			
<b>홈페이지</b> http://			
<b>* 임원</b>	<b>이사장</b> 1 명 <b>이사</b> 2 명 <b>감사</b> 3 명	<b>* 조합원</b>	<b>사업자(생산자)</b> 1 명 <b>소비자</b> 23 명 <b>직원</b> 4 명 <b>자원봉사자</b> 3 명 <b>후원자</b> 1 명
<b>직원 (조합원+비조합원)</b> 6 명	<b>상세내역</b>	<b>남성</b> 3 명 <b>정규직</b> 4 명 <b>취약계층</b> 1 명	<b>여성</b> 3 명 <b>비정규직</b> 2 명 <b>비취약계층</b> 5 명
<b>출자금 총액</b> 123,123 원	<b>배당금</b>	123,123 원	
<b>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b>			
<b>자산</b>	246,246 원 (자산 = 부채 + 자본)		
<b>* 부채</b>	123,123 원		
<b>* 자본</b>	123,123 원	<b>* 자본 상세내역</b>	<b>조합원출자금</b> 123,123 원 <b>법정적립금</b> 123,123 원 <b>임의적립금</b> 123,123 원 <b>미처리결손금</b> 123,123 원 <b>미월결손금</b> 123,123 원
<b>②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b>			
<b>* 매출액</b>	123,123 원		
<b>* 매출원가</b>	1,111 원		
<b>매출총손익</b>	122,012 원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b>* 판매비와 관리비</b>	1,111 원		
<b>영업손익</b>	120,901 원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b>* 영업외수익</b>	1,111 원		
<b>* 영업외비용</b>	1,111 원		
<b>법인세차감전 손익</b>	120,901 원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b>* 법인세 등</b>	1,111 원		
<b>당기순손익</b>	119,790 원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 등)		
<b>첨부파일</b>	1.정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test.pdf (81,385) 2.사업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pdf (81,385) 3.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전문컨설팅 수행 계획서 - test.pdf (81,385) 4.사업결과 보고서  사업보고서.pdf (81,385) 4-1.사업결과 보고서(첨부서류)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5.소액매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리자반려상태](#)  
[수정](#) [목록](#)



## ▼ 경영공시 수정

○ 상세정보 화면에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 협동조합명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 회계연도		2016		
			* 회계연도기간		2016.01.01 ~ 2016.12.31		
* 주소	11111 기본 주소1 상세 주소2						
* 연락처	02 - 1234 - 1234						
홈페이지	http://						
* 인원	이사장		1 명		사업자(생산자)		1 명
	이사		2 명		소비자		23 명
	감사		3 명		직원		4 명
					자원봉사자		3 명
					후원자		1 명
직원 (조합원+비조합원)	6 명	상세내역	남성	3 명	여성	3 명	
			정규직	4 명	비정규직	2 명	
			취약계층	1 명	비취약계층	5 명	
출자금 총액	123,123 원	배당금	123,123 원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자산	246,246 원 (자산 = 부채 + 자본)						
* 부채	123,123 원						
* 자본	123,123 원	* 자본 상세내역	조합원출자금	123,123 원			
			법정적립금	123,123 원			
			임의적립금	123,123 원			
			미처리결손금	123,123 원			
			이월결손금	123,123 원			
②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 매출액	123,123 원						
* 매출원가	1,111 원						
매출총손익	122,012 원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1,111 원						
영업손익	120,901 원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	1,111 원						
* 영업외비용	1,111 원						
법인세차감전 손익	120,901 원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등	1,111 원						
당기순손익	119,790 원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첨부파일	1.정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test.pdf (81,385)				
	2.사업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pdf (81,385)				
	3.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전문컨설팅 수행계획서 - test.pdf (81,385)				
	4.사업결과 보고서		사업보고서.pdf (81,385)				
	4-1.사업결과 보고서(첨부서류)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5.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리자대기상태
승인
반려

수정
목록



○ 수정화면에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 협동조합명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 회계연도	2016	
				* 회계연도기간	2016.01.01 ~ 2016.12.31 ▼	
* 주소	<input type="text"/> 11111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찾기"/> <input type="text"/> 기본주소1 <input type="text"/> 상세주소2					
* 연락처	<input type="text"/> 02 - <input type="text"/> 1234 - <input type="text"/> 1234					
홈페이지	<input type="text"/> http://					
* 임원	* 이사장 <input type="text"/> 명 * 이사 <input type="text"/> 명 * 감사 <input type="text"/> 명		* 조합원	* 사업자(생산자) <input type="text"/> 명 * 소비자 <input type="text"/> 명 * 직원 <input type="text"/> 명 * 자원봉사자 <input type="text"/> 명 * 후원자 <input type="text"/> 명		
* 직원 (조합원+비조합원)	<input type="text"/> 6 명	* 상세내역	남성	<input type="text"/> 3 명	여성	<input type="text"/> 3 명
			정규직	<input type="text"/> 4 명	비정규직	<input type="text"/> 2 명
			위약계충	<input type="text"/> 1 명	비위약계충	<input type="text"/> 5 명
	직원=남성+여성=정규직+비정규직=위약계충+비위약계충					
출자금 총액	<input type="text"/> 123,123 원	배당금	<input type="text"/> 123,123 원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자산	<input type="text"/> 246,246 원 (자산 = 부채 + 자본)					
* 부채	<input type="text"/> 123,123 원					
* 자본	<input type="text"/> 123,123 원	* 자본 상세내역	조합원출자금	<input type="text"/> 123,123 원		
			법정적립금	<input type="text"/> 123,123 원		
			임의적립금	<input type="text"/> 123,123 원		
			미처리결손금	<input type="text"/> 123,123 원		
			이월결손금	<input type="text"/> 123,123 원		
②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 매출액	<input type="text"/> 123,123 원					
* 매출원가	<input type="text"/> 1,111 원					
매출총손익	<input type="text"/> 122,012 원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input type="text"/> 1,111 원					
영업손익	<input type="text"/> 120,901 원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	<input type="text"/> 1,111 원					
* 영업외비용	<input type="text"/> 1,111 원					
법인세차감전 손익	<input type="text"/> 120,901 원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등	<input type="text"/> 1,111 원					
당기순손익	<input type="text"/> 119,790 원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총합 최대 100MB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업로드한 파일의 총합이 100MB 이상인 경우,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1.정관	<div>+ 파일첨부</div> <div>pdf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test.pdf (81,385) DATE : 2017-01-31 15:01:350 [x]</div>					
*2.사업결산보고서	<div>+ 파일첨부</div> <div>pdf 사업보고서.pdf (81,385) DATE : 2017-01-31 15:01:357 [x]</div>					
*3.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div>+ 파일첨부</div> <div>pdf 전문컨설팅 수행 계획서 - test.pdf (81,385) DATE : 2017-01-31 15:01:360 [x]</div>					
*4.사업결과보고서	<div>+ 파일첨부</div> <div>pdf 사업보고서.pdf (81,385) DATE : 2017-01-31 15:01:362 [x]</div>					
4-1.사업결과 보고서(첨부서류)	<div>+ 파일첨부</div> <div>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div>					
5.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div>+ 파일첨부</div> <div>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div>					



## Ⅲ. 자료 검토 · 작성 방법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경우

### <주요 검토 사항>

확인 사항	상세 내용
필수 제출서류 첨부 여부	<p>○아래 필수서류 첨부 여부 확인</p> <p>-①정관·규약·규정, ②사업결산보고서, ③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의 활동상황, ④사업결과보고서</p>
입력정보, 제출 서류 데이터 일치 여부	<p>○수기로 입력한 정보와 첨부된 서류의 정보 일치 확인</p> <p>-①임원, ②조합원 수, ③직원 총수 및 상세 내역, ④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숫자</p>



## <자료 작성 방법>

### 1 정관

- 정관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수리된 유효한 정관을 게재
  - 정관이 변경된 경우 지자체에 정관변경 신고/수리된 정관 게재
- 정관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개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삭제 후 게재

Q. 정관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시행령 제7조2항 의거,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별지 제7호 서식 1부, ②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③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 ②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30.>

### 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 회계연도 :      년도

㉡ 조직  
  
㉢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당좌자산		- 미지급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금금		- .....	
- .....		II.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b>부 채 합 계</b>	
II.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I. 자본금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II.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III. 자본조정	
- 비품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입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 산 합 계</b>		<b>자 본 합 계</b>	
		<b>부 채 및 자본 합 계</b>	

작성방법

1. 출자금: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 [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급한 출자금은 제외합니다.]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원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② 손익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I. 매출액		VI. 영업외수익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II. 매출원가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III. 매출총손익		VII. 영업외비용	
IV. 판매비와관리비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VIII. 법인세차감전손익	
- 여비교통비		IX. 법인세등	
- 통신비		X. 당기순손익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V. 영업손익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210mmX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회계연도

- “2016”년도로 기재

㉡ 조직개요

- 조합명(연합회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출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조합원 수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를 조합원 유형별로 기재,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 조합수를 합계에만 기재  
\* (확인해주세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의 총 합과 ‘합계’의 숫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차대조표

-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의 세부항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확인해주세요!) 자산의 총 계 = 부채 총 계 + 자본 총 계

㉣ 대차대조표

-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의 세부항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확인해주세요!) ①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②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③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④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 등

Q. 고유번호증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대차대조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협동조합 지원기관(☎1800-2012)으로 문의하셔서 작성에 대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회계 교육 정보: [www.coop.go.kr](http://www.coop.go.kr) → “교육” → “협동조합 회계” 메뉴 클릭

\*\*재무제표 관련 상세 내용 [참조 1] 참고



### ③ 총회 · 대의원총회 ·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 회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 ㉦ 조직개요

- 조합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업종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대분류 코드(A~S) 기재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주된 업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신고번호 : 설립신고확인증 상단의 ‘신고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주소 :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지사무소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 지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기재, 2개까지만 작성 (3개이상 작성 불필요)  
\*\* 신고서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시도지사 변경 신고서 제출
- 출자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확인해주세요!) 경영공시 제출자료 ‘사업결산보고서’ 내 출자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㉔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기타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 총회 : 총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 (확인해주세요!) 대의원 총회 개최 실적은 '대의원 총회' 항목에 기재

- 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이사회 : 이사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기본법 제32조5항 의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기타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할 경우 기재



#### 4 사업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	-----	------

㉢

설립 목적	
----------	--

㉣

의사결정 기구	[ ] 조합원 총회 [ ] 대의원 총회 [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

조직도	
-----	--

#### ㉠ 조직개요

- 조합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업종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대분류 코드(A~S) 기재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기재
  -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주된 업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신고번호 : 설립신고확인증 상단의 '신고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연합회 가입 현황 : 연합회 가입한 경우, “연합회 명” 작성
- 주소 :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지사무소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 \* 지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기재, 2개까지만 작성 (3개이상 작성 불필요)
  - \*\* 신고서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시도지사 변경 신고서 제출
- 출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 (확인해주세요!) 경영공시 제출자료 '사업결산보고서' 내 출자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 ㉠ 조직연혁

- 협동조합 설립 이후 **주요 활동** 연혁을 기재
  -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은 별도 서식에 기재하므로 제외

#### ㉡ 설립목적

- 정관 '목적' 조항 기재

#### ㉢ 의사결정기구

- 경영공시 게시 자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과 일치하도록 표시
- '조합원 총회', '이사회'는 필수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
  - \* 연합회의 경우, '회원총회' 운영시 '조합원총회'에 표시
  - \* 기본법 제32조5항 의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 조직도

- 협동조합 조직 현황을 작성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 직원 현황	명
---------------	---

### ㉠ 임원 현황

- 협동조합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직위, 성명, 주요 경력, 직원 겸직여부를 기재(연합회의 직위는 회장, 이사, 감사 등)
- 직원 겸직여부 : 임원이 협동조합(연합회) 직원 겸직여부 표시

### ㉡ 조합원 현황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현황을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분하여 기재

\* (확인해주세요!) 조합원이 아닌 자 중, 직원과 혼동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연합회 경우, 전체 회원조합수를 “계”에만 기재

Q. 조합원 유형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조합원 유형의 개념

1. 생산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협동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협동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 직원현황

- 조합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협동조합에서 고용한 인원의 총합을 기재(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가능

Q. 근로자자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A.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됨



㉠	해당연도 사업결과
㉡	해당연도 사업결과

### ㉠ 해당연도 사업계획

- 2017년도의 사업 계획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 사업의 목적은 정관 '사업의 종류'를 참고하여 작성, 세부 추진 계획·지출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 필수사업 수행 계획 반드시 기재 필요
- \*\* 필수사업: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②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 해당연도 사업결과

- 2016년도 사업 수행 결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 참고하여 작성
- 사업의 목적은 정관 '사업의 종류'를 참고하여 작성, 세부 추진 내용·지출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 필수사업 수행 여부 반드시 기재 필요
- \*\* 필수사업: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②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우

### <주요 검토 사항>

확인 사항	상세 내용
필수 제출서류 첨부 여부	<p>○아래 필수서류 첨부 여부 확인</p> <p>-①정관·규약·규정, ②사업결산보고서, ③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상황, ④사업결과보고서</p>
입력정보, 제출 서류 데이터 일치 여부	<p>○수기로 입력한 정보와 첨부된 서류의 정보 일치 확인</p> <p>-①임원, ②조합원 수, ③직원 총수 및 상세 내역, ④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숫자</p>
주사업 이행 여부 확인	<p>○주사업 유형에 맞게 사업결과 기입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p> <p>○주사업 수행 실적 40%미만인 기관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비율 기재 내용 오기 여부 확인</li> <li>- 실제 미수행인 경우 향후 관리감독 필요</li> </ul>



## <자료 작성 방법>

### 1 정관

- 정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인가된 유효한 정관을 게재
  - 정관이 변경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정관변경 인가 받은 정관 게재
- 정관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개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삭제 후 게재

Q. 정관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별지 제7호 서식 1부, ②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③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 없음



## 2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12.30.>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

회계연도 :      년도

㉡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합원 수 <div> <div>생산자(    )</div> <div>소비자(    )</div> <div>직원(    )</div> <div>자원봉사자(    )</div> <div>후원자(    )</div> <div>합계(    ) 명</div> </div>			
	주 사업 유형	<div> <div>[    ]지역사업형</div> <div>[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div> <div>[    ]취약계층 고용형</div> <div>[    ]위탁사업형</div> <div>[    ]기타 공익증진형</div> </div>		

㉢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달착자산		- 단기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미지급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II.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II.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I. 자본금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II.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III. 자본조정	
- 비품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입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자 본 증 계	
자 산 증 계		부 채 및 자 본 증 계	



② 손익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I. 매출액		VI. 영업외수익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II. 매출원가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III. 매출총손익		VII. 영업외비용	
IV. 판매비와관리비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VIII. 법인세차감전손익	
- 여비교통비		IX. 법인세등	
- 통신비		X. 당기순손익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V. 영업손익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210mmX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회계연도

- “2016”년도로 기재

㉡ 조직개요

- 조합명(연합회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출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조합원 수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를 조합원 유형별로 기재,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 조합수를 합계에만 기재  
\* (확인해주세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의 총 합과 ‘합계’의 숫자 일치 여부 확인
- 주사업유형 : 설립인가를 받은 주 사업유형에 표시  
\* 주사업 유형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표시

Q. 우리 기관의 주사업 유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정관 내 ‘사업의 종류’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차대조표

-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의 세부항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확인해주세요!) 자산의 총 계 = 부채 총 계 + 자본 총 계

㉣ 대차대조표

-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의 세부항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확인해주세요!) ①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②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③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④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 등

Q. 고유번호증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대차대조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협동조합 지원기관(☎1800-2012)으로 문의하셔서 작성에 대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회계 교육 정보: [www.coop.go.kr](http://www.coop.go.kr) → “교육” → “협동조합 회계” 메뉴 클릭

\*\*재무제표 관련 상세 내용 [참조 1] 참고



### ③ 총회 · 대의원총회 ·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 회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 ㉦ 조직개요

- 조합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기관명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업종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대분류 코드(A~S) 기재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주된 업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신고(인가)번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증 상단의 ‘인가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주소 :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지사무소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 지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기재, 2개까지만 작성 (3개이상 작성 불필요)
- 출자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확인해주세요!) 경영공시 제출자료 ‘사업결산보고서’ 내 출자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㉔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기타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 총회 : 총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 (확인해주세요!) 대의원 총회 개최 실적은 '대의원 총회' 항목에 기재

- 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이사회 : 이사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기본법 제32조5항 의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기타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할 경우 기재



#### 4 사업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 정관·규약	변경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 내용			

#### ㉠ 조직개요

- 조합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업종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대분류 코드(A~S) 기재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기재
  -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주된 업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인가번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증 상단의 '인가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주소 :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지사무소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 \* 지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기재, 2개까지만 작성 (3개이상 작성 불필요)
- 출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 (확인해주세요!) 경영공시 제출자료 '사업결산보고서' 내 출자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 주사업유형 : 설립인가를 받은 주 사업유형에 표시
  - \* 주사업 유형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표시

#### ㉠ 조직연혁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이후 주요 활동 연혁을 기재
  -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은 별도 서식에 기재하므로 제외

#### ㉡ 정관·규약

- 2016년 1~12월 내 정관 변경 인가 여부 표시
- 변경한 경우, 변경된 조항과 제목 기재



㉠	설립 목적				
㉡	의사결정 기구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총회 <input type="checkbox"/> 대의원 총회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small>* 중복 표시 가능</small>			
㉢	조직도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 ㉠ 설립목적

- 정관 '목적' 조항 기재

### ㉡ 의사결정기구

- 경영공시 게시 자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과 일치하도록 표시
- '조합원 총회', '이사회'는 필수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
  - \* 연합회의 경우, '회원총회' 운영시 '조합원총회'에 표시
  - \* 기본법 제32조5항 의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 조직도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 현황을 작성

### ㉣ 임원 현황

- 협동조합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직위, 성명, 주요 경력, 직원 겸직여부를 기재(연합회의 직위는 회장, 이사, 감사 등)
- 직원 겸직여부: 임원이 협동조합(연합회) 직원 겸직여부 표시



㉠ 조합원 현황 ※ 해당 유형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 지역사회 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 인가 부처 감독사항과 그 조치 결과	연월일	주요 내용

### ㉠ 조합원 현황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현황을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분하여 기재
- \* (확인해주세요!) 조합원이 아닌 자 중, 직원과 혼동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연합회 경우, 전체 회원조합수를 “계”에만 기재

Q. 조합원 유형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조합원 유형의 개념

1. 생산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협동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협동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 직원현황

- 2016년 말 기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조합이 고용한 근로자 내용 기재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기재)
- 비정규직은 ①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봄
-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Q. 근로자자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A.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됨

○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취약계층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갹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확인해주세요!) “성별”, “고용형태”, “취약계층 고용” 항목의 합 모두 일치하도록 작성



㉔ 지역사회 기여실적

- 2016회계연도 내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은 요약하여 기재
- 신청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기여 실적
- 주사업 이외 별도 기여한 사항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㉕ 인가부처 감독상황과 그 조치 결과

- 2016회계연도 동안 인가부처의 감독사항과 그 조치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 ○ 해당연도 사업 결과

- 해당연도 사업 결과를 판단기준에 따라 작성
- 혼합형은 해당내용 모두 작성

### [1] 지역사업형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 (1단계) 정관 상 사업의 종류, 사업결과 판단기준 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 참고)
  - 사업결과 판단기준 : 사업비, 서비스 공급 비율
- (2단계) 주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정관의 '사업의 종류' 참고)
  - 지역사업(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 사업명은 정관에 규정된 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사업명과 일치하도록 작성
- (3단계) 판단기준(사업비 또는 서비스 공급 비율)에 따라 2016회계 연도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재
  - 판단기준이 '사업비'인 경우
    - ① '해당연도 예산'은 사업계획 예산액을 참고하여 기재
    - ② '해당연도 결산'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기재 (손익계산서 상 원재료비, 판매비와 관리비 내 주사업 관련 지출금액 기재)



- 판단기준이 ‘서비스 공급 비율’인 경우

- ① ‘해당연도 계획’은 사업계획의 서비스 공급량 기재
- ② ‘해당연도 실적’은 사업 수행 실적을 기재

#### ○ 사업비 개념

- 사업비란 조직의 일반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의 매출원가, 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건비 등이 사업비에 해당
  - \*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는 사업에 직접 투입된 인력과 간접 투입된 인력을 구분하여 직접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나 간접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불포함
  - \* 예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의료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조합 사무국 운영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 불가

- (4단계) 전체 사업 중에서 지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 사업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begin{aligned}
 \text{지역사업 비율} &= \text{지역사업 소계(B)}/\text{총계(A)} \\
 &= \text{지역사업 소계(B)}/(\text{지역사업 소계(B)}+\text{기타사업})
 \end{aligned}$$

- (5단계) 사업수행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
  - 판단기준이 ‘사업비’인 경우 : 손익계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서류 첨부
  - 판단기준이 ‘서비스 공급 비율’인 경우 :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비율 (C=B/A(%))		

- (1단계) 정관 상 사업결과 판단기준 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 참고)
  - 사업결과 판단기준: 인원수, 시간, 횟수
- (2단계) 2016회계연도 계획, 실적 구분하여 기재
  - 주사업, 기타사업 수행 사업 포함, 서비스를 공급받은 대상 구분(취약계층, 비취약계층)하여 작성
  - '해당연도 계획'은 사업계획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연도 실적'은 사회서비스 공급 실적을 취약계층과 기타 (비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전체 실적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비율을 “취약계층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 취약계층비율 = 취약계층(B)/총계(A)  
= 취약계층(B)/(취약계층(B)+기타)
- (3단계)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취약계층 고용형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 (1단계) 정관 상 사업결과 판단기준 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 참고)
  - 사업결과 판단기준 : 인건비, 직원수
- (2단계) 판단기준(인건비 또는 직원수)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재
  - ‘인건비’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① ‘해당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의 인건비를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로 구분하여 기재
    - ② ‘해당연도 결산’은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로 구분하여 기재
  - ‘직원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① ‘해당연도 계획’은 사업계획의 고용 인원을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로 구분하여 기재
    - ② ‘해당연도 결산’은 2016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실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로 구분하여 기재
- (3단계) 전체 실적 중에서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취약계층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 취약계층 비율 =  $\frac{\text{취약계층(B)}}{\text{총계(A)}}$   
 $= \frac{\text{취약계층(B)}}{(\text{취약계층(B)} + \text{기타})}$
- (4단계) 취약계층 고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①전체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2016년 말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와 ② 취약계층 증명서류를 첨부



#### [4] 위탁사업형

구 분		사업비 (원)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사업(위탁기관)		
	□□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 (1단계)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기재(정관의 '사업의 종류' 참고)

- 위탁사업, 자체사업 구분 기준 : 위탁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만 해당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 위탁사업 : “자체사업” 해당)

- 위탁기관 : 사업명 뒤에 위탁기관을 기재

\* (예) 구립어린이집위탁사업(00구청)

- (2단계) 2016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 ‘해당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의 예산액을 참고하여 기재
- ‘해당연도 결산’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수입기준으로 기재

- (3단계) 전체 사업수입 중 위탁사업 비율을 “위탁사업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 위탁사업 비율 =  $\frac{\text{위탁사업 소계(B)}}{\text{총계(A)}}$   
 $= \frac{\text{위탁사업 소계(B)}}{\text{위탁사업 소계(B)} + \text{자체사업 소계}}$

- (4단계) 위탁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① 위탁사업 계약서 ② 위탁사업 지출내역서 ③ 손익계산서 ④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5] 기타 공익증진형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공익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 (1단계) 정관 상 사업결과 판단기준 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 참고)
  - 사업결과 판단기준 : 사업비, 서비스 공급
- (2단계) 판단기준(사업비 또는 서비스 공급 비중)에 따라 공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정관의 '사업의 종류' 참고)
  - 공익사업(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 사업명은 정관에 규정한 세부사업명과 일치하게 작성
- (2단계) 판단기준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재
  - '사업비'가 기준인 경우
    - ① '해당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의 예산액을 참고하여 기재
    - ② '해당연도 결산'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공익사업(주사업)과 기타사업의 사업비를 구분 기재
  - '서비스 공급 비중'이 기준인 경우 (인원, 시간, 횟수 택 1)
    - ① '해당연도 계획'은 사업계획의 서비스 공급량 기재
    - ② '해당연도 실적'은 사업 수행 실적을 공익사업(주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실적 기재



- (3단계) 전체 실적 중에서 공익사업 수행 비율을 “공익사업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 공익사업 비율 = 공익사업 소계(B)/총계(A)
  - = 공익사업 소계(B)/(공익사업 소계(B)+기타사업 소계)
- (4단계) 사업수행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
  - 판단기준이 ‘사업비’인 경우 : 손익계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서류 첨부
  - 판단기준이 ‘서비스 공급 비율’인 경우 :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사업유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혼합형)

- 해당 유형에 모두 기재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중, 정관 내 “소액대출”, “상호부조” 조항 있는 경우 작성

※ 관련 조항 있으나 회계연도(2016년)내 수행 내역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기재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0000년 12월 31일 현재)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취약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 회계연도 : 2016년으로 기재 (예: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조직개요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서식 24호)”  
동일하게 기재 (\* 27페이지 참고)



# 1. 소액대출 사업 현황

㉠

대출조건	소액대출 이자율	연 00.00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연 00.00 (%)
	소액대출 연체 이자율	연 00.00 (%)	1인당 대출한도	원

㉡

대출현황	총 대출금액(B)	원	총 상환액(C)	원
	총 대출잔액(D=B-C)	원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D/A)	(%)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원

분기별 소액대출 추이(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총출자금액(A)					
총대출금액(B)					
총상환액(C)					
총대출잔액(D)					
출자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E)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 ㉠ 대출조건

- 소액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 1인당 대출한도 : 정관 “소액대출” 조항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25%
  - \* 「이자제한법」 제2조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

## ㉡ 대출현황

- 총 대출금액 : 설립 이후 소액대출 금액 총 계 기재
- 총 상환액 : 소액대출 금액 중 상환 액 기재
- 총 대출잔액 : (총 대출 - 총 상환) 금액 기재
-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 : “(대출 잔액 / 출자금) X 100” 기재
  - \* 출자금 : 2016년도 말 기준으로 기재
-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소액 대출 이용자 수, 16년도 말 기준 조합원 총 수 기재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 잔액 : 2016년도 말 기준,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의 잔액 기재
- 분기별 소액대출 추이 :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작성
  - \* “직전연도 4/4분기” = 2015년도 4/4분기, “해당연도” = 2016년도
  - \*\* 해당연도 4/4분기 내용과 상위 「대출현황」 과 일치하도록 기재



## 2. 상호부조 사업 현황

㉠	상호부조 계약 현황	월별 납부액	(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 규약·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지급사유별 지급액	혼례(본인)	원
			혼례(자녀)	원
			사망(본인)	원
			사망(배우자)	원
			000	원
			△△△	원

㉡	상호부조 기금 현황	전년도 기금 잔액(가)	원
		해당 연도 수입(하)	원
		해당 연도 지출(나)	원
		해당 연도 기금 잔액 (J=가+하-나)	원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J/가)	(%)

㉢	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전기 잔액(가)					
	당기 수입(하)					
	당기 지출(나)					
	당기 잔액(다)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라)					

### ㉠ 상호부조 계약 현황

- 월별 납부액 : 정관 “상호부조” 조항 참고하여 작성
- 지급사유별 지급액 : 2016년 지급 목록, 금액 기준으로 작성

### ㉡ 상호부조 기금 현황

- 전년도 기금 잔액 : 전년도 이월된 ‘상호부조 기금’ 잔액 기재
- 해당 연도 수입 : 2016년 상호부조 회비 총액 기재
- 해당 연도 지출 : “지급 사유별 지급액” 총계 기재
-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 : 16년도 말 기준, 출자금·잔액 비율 기재

### ㉢ 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

-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작성

\* “직전연도 4/4분기” = 2015년도 4/4분기, “해당연도” = 2016년도

\*\* 해당연도 4/4분기 내용과 상위 「상호부조기금현황」과 일치하도록 기재



**Q. 경영공시 신규 기관입니다. 기관 아이디, 비밀번호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경영공시 입력을 위하여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절차 안내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약관 동의, 본인인증, 정보입력 실시
- “본인 인증”은 시도지사 신고, 중앙부처 인가 된, “이사장”만 회원 가입 가능 (이사장 인증서, 법인 인증서 필요)
-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및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에 ID가 중복하여 들어갈 수 없음
  - \* 예) ID가 “abcd” 인 경우 비밀번호를 “abcd1237\*”와 같이 ID를 비밀번호에 포함시켜 설정할 수 없음
- 조합원 정보 등록 : 등록된 조합원 정보로 로그인하여 경영공시 자료 등록 가능
-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및 회원가입시 오류사항은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 : 044-215-1620 또는 031-697-7731



**Q. 회원가입된 아이디, 비밀번호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이용하세요.**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COOP 협동조합

홈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 통합검색

제도소개 | 설립·운영 | 협동조합현황 | 알림마당 | 협동조합 상품물 | 교육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회원서비스 > 로그인

로그인

협동조합 소개, 경영공시 자료 등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D/PW로 로그인

☒ 이사장 ☐ 조합원

아이디 :

비밀번호 :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인증서

법인인증서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클릭
- “공인인증서”는 이전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만 유효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안되는 경우 :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31)로 문의



## Q. 인증서 갱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로그인 완료 후, “회원정보수정” 에서 인증서 갱신 신청하세요.

### □ 인증서 갱신하기

회원서비스 > 회원정보수정

협동조합 회원서비스입니다.

#### 회원정보수정

이사장 정보	
이사장명	허운
비밀번호 변경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변경안함 <input type="radio"/> 변경
현재 비밀번호 입력	<input type="password"/>
새 비밀번호 입력	<input type="password"/> ※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9~20자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새 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password"/>
이메일 주소	dasdf@naver.com
휴대폰 번호	010 <input type="text"/> -1111-2222

조합원 정보 (조합원 정보를 수정하면 기존의 조합원 정보를 삭제하고 다시 저장됩니다.)	
조합원 변경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변경안함 <input type="radio"/> 변경
첫번째 조합원	아이디 : <input type="text"/> 인증번호 : <input type="text"/>
두번째 조합원	아이디 : <input type="text"/> 인증번호 : <input type="text"/>
세번째 조합원	아이디 : <input type="text"/> 인증번호 : <input type="text"/>

#### 인증서 갱신

인증서 정보	<input type="button" value="개인인증서 갱신"/>
인증서 등록	<input type="button" value="법인인증서 등록"/>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로그인 완료 → “인증서 갱신” 클릭
- 인증서 갱신이 안되거나 이후에도 오류가 생기는 경우 :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31)로 문의



## Q.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관할 기관 신고하여 이사장 정보 업데이트 후 로그인 하세요.

○ 관할 기관(지자체/중앙행정기관) 이사장(임원) 변경 신고 → 로그인 → 인증서 갱신 등 기타 정보 수정

-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기관(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사장 정보를 업데이트 하세요.

#### 〈변경신고 방법〉

구분	변경신고 절차
협동조합	○ 신고대상 : 관할 시도지사 ○ (절차) 총회 의결 →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변경등기 ○ (제출서류)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총회 의사록, 임원명부, 임원 이력서 *일부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로 위임
사회적 협동조합	○ 신고대상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 (절차) 총회 의결 → 변경등기 → 관할 소관부처 신고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 신고대상 : 기획재정부장관 ○ (절차) 총회 의결 → 변경등기 → 관할 소관부처 신고

○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및 회원가입시 오류사항은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 : 044-215-1620



## 1.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결산 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개요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원

####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자산</b>		<b>부채</b>	
<b>I. 유동자산</b>		<b>I. 유동부채</b>	
(1) 당좌자산		- 미지급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b>II. 비유동부채</b>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b>부 채 총 계</b>	
<b>II. 비유동자산</b>		<b>자본</b>	
(1) 투자자산		<b>I. 자본금</b>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b>II. 자본잉여금</b>	
(2) 유형자산		<b>III. 자본조정</b>	
- 비품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 시설장치		<b>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b>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 본 총 계</b>	
<b>자 산 총 계</b>		<b>부 채 및 자 본 총 계</b>	

#### 작성방법

1. 출자금 :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금한 출자금 제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I. 매출액</b>		<b>VI. 영업외수익</b>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b>II. 매출원가</b>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b>III. 매출총손익</b>		<b>VII. 영업외비용</b>	
<b>IV. 판매비와관리비</b>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b>VIII. 법인세차감전손익</b>	
- 여비교통비		<b>IX. 법인세등</b>	
- 통신비		<b>X. 당기순손익</b>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b>V. 영업손익</b>			

###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자산</b>		<b>부채</b>	
<b>I. 유동자산</b>		<b>I. 유동부채</b>	
(1) 당좌자산		- 단기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미지급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b>II. 비유동부채</b>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b>부 채 총 계</b>	
<b>II. 비유동자산</b>		<b>자본</b>	
(1) 투자자산		<b>I. 자본금</b>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b>II. 자본잉여금</b>	
(2) 유형자산		<b>III. 자본조정</b>	
- 비품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 시설장치		<b>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b>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 본 총 계</b>	
<b>자 산 총 계</b>		<b>부 채 및 자 본 총 계</b>	

### 작성방법

1. 출자금 :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금한 출자금 제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I. 매출액</b>		<b>VI. 영업외수익</b>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b>II. 매출원가</b>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b>III. 매출총손익</b>		<b>VII. 영업외비용</b>	
<b>IV. 판매비와관리비</b>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b>VIII. 법인세차감전손익</b>	
- 여비교통비		<b>IX. 법인세등</b>	
- 통신비		<b>X. 당기순손익</b>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b>V. 영업손익</b>			

###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 회원(명)	참석자 (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 (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 (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 (명)	결정사항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 3. 협동조합 등 사업결과 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	--	--	--	--	--	--

의사결 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	--	--	--	--

조직도						
-----	--	--	--	--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 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명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당  
연도  
사업  
계획



해당  
연도  
사업  
결과



4.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결과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정관·규약	변경 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변경 내용		

설립 목적			
-------	--	--	--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	--

조직도			
-----	--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지역사회 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인가 부처 감독사항과 그 조치 결과	연월일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사업 결과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 계층비율 (C=B/A)(%)		

- 첨부서류
-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 첨부서류
- 전체 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생년월일 포함),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
  -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사업(위탁기관)		
	□□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위탁사업 비율( $C=B/A$ )(%)			

첨부서류

1. 위탁사업 계약서
2. 위탁사업 지출명세서
3.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중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대상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공익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공익사업 비율( $C=B/A$ )(%)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0000년 12월 31일 현재)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1. 소액대출 사업 현황

대출조건	소액대출 이자율	연 00.00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연 00.00 (%)
	소액대출 연체 이자율	연 00.00 (%)	1인당 대출한도	원
대출현황	총 대출금액(B)	원	총 상환액(C)	원
	총 대출잔액(D=B-C)	원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D/A)	(%)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원

분기별 소액대출 추이(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총출자금액(A)					
총대출금액(B)					
총상환액(C)					
총대출잔액(D)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 상호부조 사업 현황

상호부조 계약 현황	월별 납부액	(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규약·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지급사유별 지급액	혼례(본인)	원
		혼례(자녀)	원
		사망(본인)	원
		사망(배우자)	원
		○○○	원
		△△△	원
상호부조 기금 현황	전년도 기금 잔액(G)		원
	해당 연도 수입(H)		원
	해당 연도 지출(I)		원
	해당 연도 기금 잔액 (J=G+H-I)		원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J/A)		(%)

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전기 잔액(G)					
당기 수입(H)					
당기 지출(I)					
당기 잔액(J)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경영공시 추진 및 시스템 운영 등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오조은 대리 (☎031-697-7731)
- ☐ (시스템 설치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홍보팀 이해진 대리  
(☎031-697-7855)
- ☐ (제도 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운영과 김유이 사무관  
(☎044-215-5932)



## □ 경영공시 교육기관 연락처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본관 200호(우편번호: 03740) (전자우편) jfcoop@daum.net	070-7600-5101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www.pns.or.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우편번호: 16203) (전자우편) pns@pns.or.kr	070-4763-0133
인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www.sidaeyeon.net	인천광역시 부평대로51번길 26 성원빌딩 5층(우편번호: 21388) (전자우편) simin2014@daum.net	032-715-5616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 터 www.gwcs.or.kr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우편번호: 26336) (전자우편) gwcs0524@naver.com	033-749-3930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www.cne.or.kr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우편번호: 41921) (전자우편) dgcoop@hanmail.net	070-7862-1981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www.sebiz.or.kr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2502호(우편번호: 38542) (전자우편) coop@sebiz.or.kr	053-942-8002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www.rise.or.kr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우편번호: 46233) (전자우편) coop@rise.or.kr	051-517-0270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sescoop.or.kr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우편번호: 44457) (전자우편) ulsan@sescoop.or.kr	052-222-6176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www.moducoop.com/	경남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 (상남동, 토토스빌딩)(우편번호: 51496) (전자우편) moducoop@naver.com	070-4149-1803
광주	사회적협동조합살림 www.socialcenter.kr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우편번호: 61962) (전자우편) coop@socialcenter.kr	062-383-1136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www.jbse.or.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우편번호: 54946) (전자우편) masterjse@gmail.com	063-251-3619
전남	(사)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 홈페이지: 제작 중	전라남도 무안군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우편번호: 58564) (전자우편) sstreetree@naver.com	061-282-9588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jejusen.or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57 5층 (우편번호: 63182) (전자우편) jejusen2015@daum.net	064-722-4844
대전 세종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www.djse.org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 집 3층(우편번호: 34862) (전자우편) c-cmail@daum.net	042-382-9924
충북	(사)사람과경제 www.cbse.c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빌딩 5층(우편번호: 28468) (전자우편) cbse@hanmail.net	043-267-9010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www.sechungnam.org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우편번호: 31499) (전자우편) cnsecoop@gmail.com	070-4632-0652



총칙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함
	기록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 다만,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전결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제정 가능
예산	예산총계주의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의 변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 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 지출 가능.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음
	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침
결산	결산서의 작성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계정이월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말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수입과 지출	수입금 징수	수입은 출자금 등으로서,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함
	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함
장부	장부의 종류	주요부(전표, 총계정 원장), 보조부(각 계정 보조부)
	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전표에는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제증빙 서류 첨부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1호와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이사장이 날인
출자 및 자본	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출자금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하며,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자본잉여금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 포함 자산재평가차액은 결손에 보존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배당금, 이월금 등에 사용
	지분의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납입출자금 및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 가

### 합병 및 분할

#### 합병 및 분할 관련 법령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9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등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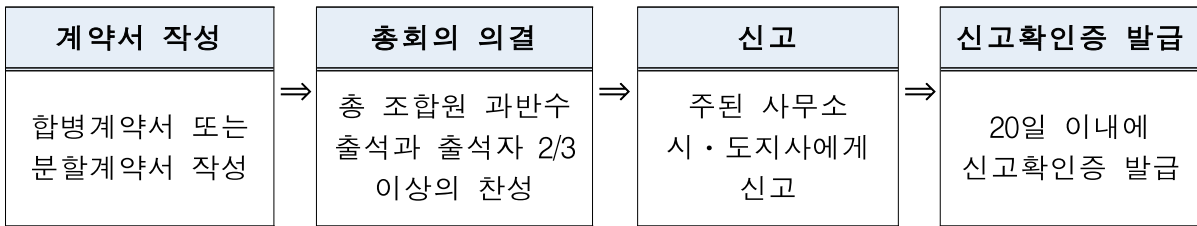
#### □ 합병 및 분할의 정의

-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소멸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이고( $A+B=C$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이 소멸되고 하나의 협동조합이 존속( $A+B=A$ )
- “분할”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

## □ 합병 및 분할 절차



### ① 합병 및 분할 계약서 작성

- 합병 및 분할당사자 협동조합 간의 합병 또는 분할 계약의 주된 내용(신설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증가할 출자금 총액,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임원의 변경사항 등) 기재

### ② 합병 및 분할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회의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③ 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④ 신고확인증 발급

-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 □ 합병신고 서류

- ‘협동조합 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신고서류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6	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5호 서식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합병 및 분할 관련 신고

구분	협동조합 유형	신고의 종류	시행규칙 서식
합병	존속하는 협동조합	합병신고	별지 제12호 서식
	소멸하는 협동조합	해산신고	별지 제14호 서식
분할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별지 제2호 서식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신고	별지 제7호 서식

## □ 권리·의무 승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 □ 준용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준용규정
  - 제15조(설립신고 등)
  -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16조(정관),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준용규정(채권자 보호절차)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 ① 합병에 따라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 ② 이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 ③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봄,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 제공

## □ 합병 관련 사항

-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분할하지 못함
- 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하는 협동조합과 존속하는 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상법 제527조의4제1항)
-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탈퇴하여야 함



## 흡수합병 관련 법령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흡수합병 대상

-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흡수합병 가능

## □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시행령 제13조제1항)

구분	흡수합병 인가 기준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①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②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등을 흡수합병 할 때 존속하는 협동조합에는 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등에는 상법이 적용

흡수합병 절차	상법 규정	협동조합기본법 규정
합병계약서의 작성	제522조제1항, 제523조	제56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제354조	
합병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제374조제2항, 제635조제1항 제23호	제28조제5항
합병승인 총회	제522조제3항, 제434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 제2항, 제32조제4항
채권자 보호절차	제527조의5, 제232조, 제530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6조제8항,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6항, 제54조
구 주권 제출(주식회사)	제440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제530조제2항, 제374조의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제530조, 제374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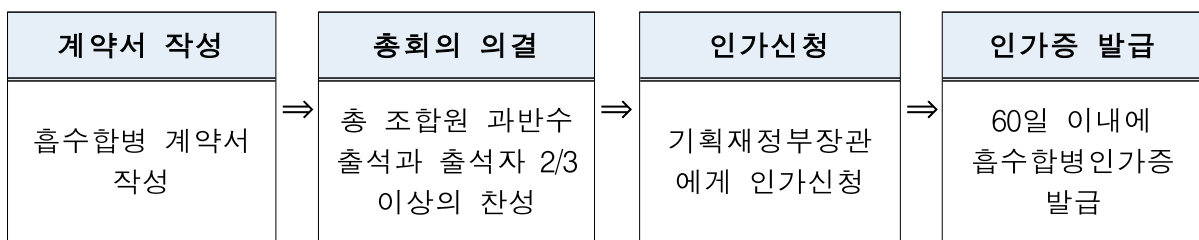


- 흡수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법인과 존속 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및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준용

### ③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은 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
- 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중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시 주식양도계약, 교부금 합병 등을 통해 지분 정리
- 협동조합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사주 소각
- 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담보 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 소멸
-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 □ 흡수합병 인가 절차(시행령 제13조제2-4항)



### ① 흡수합병승인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흡수합병계약서, 소멸법인 주주에게 배정하는 출자좌수에 관한 서류 등 주요서류를 합병일 이후 6월간 본점에 비치



-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함(상법 제434조)

## ② 흡수합병 계약서 작성

- 흡수합병 계약의 주된 내용(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증가할 출자금 총액,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등) 기재

## ③ 흡수합병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회의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④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흡수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인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흡수합병 인가신청서 첨부서류**(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구분	신청서류
1	정관 사본
2	(흡수)합병계약서 사본
3	(흡수)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흡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6	흡수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5호 서식)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해산 및 청산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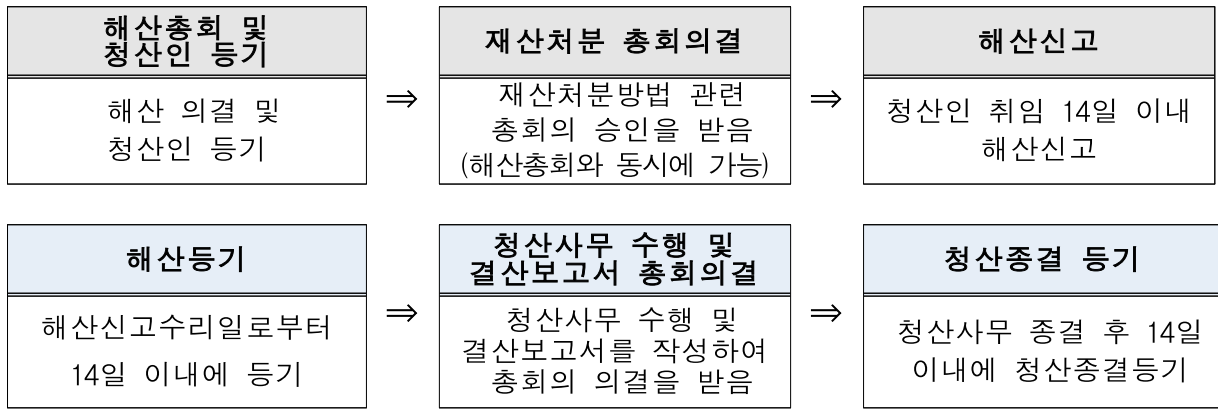
-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 상실
  -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 □ 해산사유

- 정 관 으 로 정 한 해 산 사 유 의 발 생
- 총 회 의 의 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 병 · 분 할 또 는 파 산



## □ 해산 절차



※ 협동조합 설립 신고·수리 후 미등기 협동조합은 해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해산신고

###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등기

- 총회에서 해산 의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

### ②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의결

- 청산인 취임 후 →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반드시 해산신고 전에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후 의결하는 것도 가능(청산사무 수행 시작 전까지 의결하면 됨)

※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총회 전 미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해산 총회에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의결하는 것도 가능

### ③ 해산신고

-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파산의 경우 제외)



- '해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해당 지자체는 해산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산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 ④ 해산등기

- 협동조합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 다만, 상법등기법 제60조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에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법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 시·도지사는 해산신고서를 받은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미등기 협동조합의 경우 제외)
  - 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www.share.go.kr](http://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
  -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을 득한 후 이용 가능

#### ⑤ 청산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 ⑥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준용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함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 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조직변경 관련 법령

**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조직변경 개요

-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
-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 다만, 부칙 제3조에 의해 ‘12.12.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비법인)가 ‘16.11.30일 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 기한 경과로 부칙에 의한 사업자(비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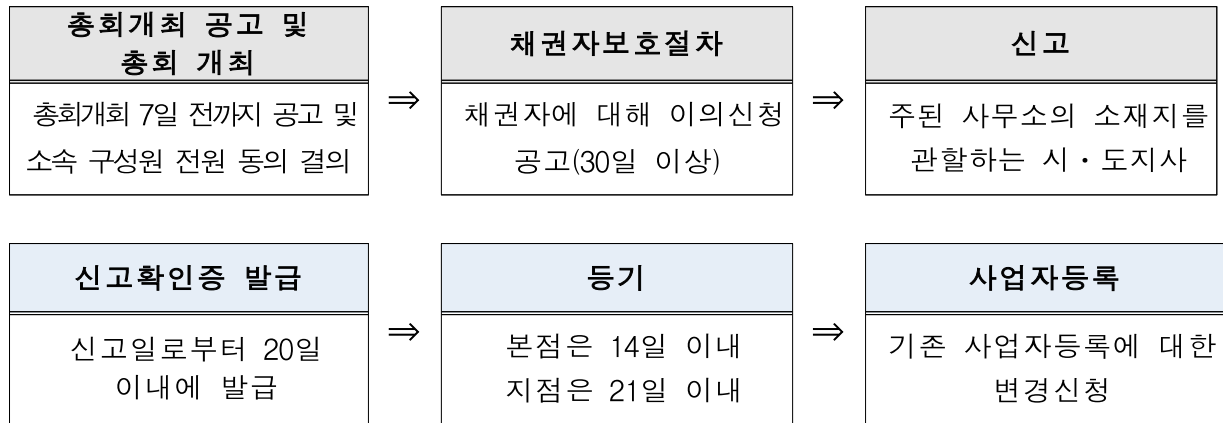
## □ 조직변경의 효과

-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

구분	조직변경의 효과
세금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근로관계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업력인정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 □ 조직변경 절차



### ①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
- 창립총회 관련 안건을 조직변경 총회에서 결의
-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구분	조직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정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금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지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 필요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지분정리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주식양도계약
자사주 보유	협동조합은 자사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자기주식처분 주주배분, 소각
질권 설정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3항	피담보채무 상환



- (사내유보금)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총회의 결의(일반정족수로 의결)를 통하여 법정 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음
- (사채상환)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 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

-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30일 이상)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함

\* 최고(催告)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③ '조직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④ 조직변경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 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신고서를 요하는 경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조직변경 관련 해산등기의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필요 없으며, 해산등기와 동시에 등기기록 폐쇄)

## ⑥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며,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 조직변경신고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6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5호서식)
7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조직변경 관련 사항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0호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 조직변경 관련 채권자보호절차는 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 법인등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함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수리한 시·도지사는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 8. 등기

### □ 설립등기

#### 기본법 제61조(설립등기)

-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비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은 이사로도 등기하여야 함)



○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간인 날인 필요)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확인증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익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 62조(지 사무소의 설 치 등 기)** 협동조합이 지 사무소를 설 치 하였으면 주 된 사 무 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 기 하 여 야 한 다.

○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

- 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통합등기 가능

○ 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등기신청서	지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설 치 연월일 기재
2	이사회 의사록	공증 받은 의사록 제출필요 의사록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 치 연월일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4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첨부
5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 □ 이전등기

### 기본법 제63조(이전등기)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사장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

- 구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가능

○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비치
2	정관	정관 사본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하여 제출
3	이사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4	조합원총회의사록, <u>변경신고확인증</u>	정관에 주사무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신소재지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와 구소재지의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
7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 □ 변경등기

### 기본법 제64조(변경등기) 준용

-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변경등기 대상에 따른 등기내용

변경등기대상	등기기한	신청인	비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사장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
설립신고 연월일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 ○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신청서류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합병등기

### 기본법 제65조(합병등기)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의 등기사항

구분	등기사항	비고
1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 변경등기	
2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 → 해산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 설립등기	

## □ 해산등기

### 기본법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청산인등기

### 기본법 제67조(청산인등기)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과 법인인감을 등기
- 첨부서류
  -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
  -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

## □ 청산종결등기

### 기본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조직변경등기

### 기본법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부터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또는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신고
-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함(상업등기법 제66조)
  -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 변경 전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상업등기법 제65조)
- ※ 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는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설립등기시 기존 법인의 업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의 말소등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
- 신규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대하여 정정(변경)신청
  -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

< 협동조합 등기 관련 준용사항 >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1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3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4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구분	관련조항	관할 등기소	등기기한	신청인
설립	제61조	주사무소 소재지	출자 납입 완료 후 14일	이사장
지사사무소 설치	제62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28일 지사무소 21일	이사장
이전	제63조	전·현소재지	전·현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변경	제64조①	각 사무소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출자금 변경	제64조②	각 사무소 소재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사장
합병	제65조	각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사장
해산	제66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청산인	제67조	주사무소	취임일부터 14일	청산인
청산종결	제6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조직변경	제68조의2	본점 및 지점 소재지	본점 14일, 지점 21일	이사장







## IV. 협동조합연합회

<b>1. 개요</b>	<b>269</b>
<b>2. 설립</b>	<b>270</b>
가. 설립신고 절차	270
나. 설립신고 서류	277
다. 성립 및 설립무효	285
라. 변경신고	286
마.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290
<b>3. 회원</b>	<b>291</b>
가. 자격 및 가입	291
나. 탈퇴	292
다. 의결권 및 선거권	293
라. 회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294
<b>4. 기관</b>	<b>295</b>
가. 총회	295
나. 임원	296
다.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297
<b>5. 사업</b>	<b>301</b>
가. 사업의 내용	301
나. 공제사업	302
다. 사업의 이용	309
<b>6.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b>	<b>310</b>
<b>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관련 준용규정</b>	<b>312</b>
<b>8. 등기 관련 준용규정</b>	<b>314</b>







# 1. 개요

## □ 개념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법 제2조제2호)

## □ 특징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발기인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 회원의 자격제한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의결권·선거권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대리인이 행사 불가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사업의 이용	공제사업을 제외하고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관련내용 없음(상법 등에서 준용)

## □ 설립현황

- ‘16.12월말 기준 52개의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http://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 2. 설립

### 가

### 설립신고 절차

####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의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기획재정부 장관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회장
9	출자금 납입	회원 → 회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법 제71조제1항)
  - “회원자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 제한 가능

##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기본법 제16조(정관) 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협동조합)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시·도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 ○ 창립총회 공고 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5. 창립총회 개최

### ○ 창립총회 필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임원은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 6. 설립신고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연합회의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동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합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 설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신고내용 등 재



### 시행령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 신고확인증(시행규칙 제8호 서식)’ 발급**

○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보완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 반려가능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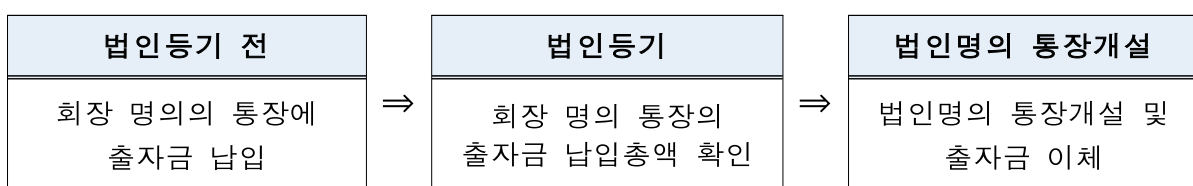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

## 9. 출자금 납입

- 회장이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회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설립신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내에 출자목적의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 10. 설립등기

### 법 제61조(설립등기) 준용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하며, 연합회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출자금의 납입”이란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제1호)

##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등) 준용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구분	신고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법정 서식 없음



## 1.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설립신고인’란에는 설립신고를 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협동조합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
  - ‘신고내용’란의 ‘설립동의자 수’에는 회원의 개수 기재
  - ‘신고인’란에는 신고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협동조합의 법인인감도장 날인

## 2. 정관

### 기본법 제16조(정관) 준용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를 참고하되, 연합회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기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 ○ 주요 확인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연합회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연합회의 설립목적, 명칭, 회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 3개 이상의 발기인 협동조합이 정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 사항 포함
-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게시사진, 전자우편 화면캡처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회원 자격이 있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 4. 창립총회 의사록

#####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법인)인감도장 날인(의장과 회장이 다른 경우 모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
- 공증을 위해 (법인)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 ○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 ○ 기타사항

- 핵심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회원인 협동조합의 대표로 이사가 창립총회 의결에 참석한 경우 이사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이사가 아닌 조합원이 참석할 경우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하여 작성 시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연합회가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공증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회장의 진술서
4. 회원 명부
5. 회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회원의 법인인감증명



## 5. 임원명부 및 이력서

### ○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3x4 사이즈) 포함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기재

### ○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의사록에서 확인)
- 임원이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조합원인 법인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이력서 제출

## 6. 사업계획서

### ○ 서식

-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서식 중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산출근거 기재

- 다만,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로서 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만 기재



## ○ 주요 확인사항

- 정관상 사업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7. 수입지출예산서

### ○ 서식

- ‘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5호 서식)’

## ○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출자 1좌당 금액,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 ○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않은 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협동조합기본법 부칙<제12272호, 2014.1.21> 제7조)
- 모든 회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한 회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재



## 10. 합병 또는 분합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 ○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합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연합회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법 제56조제1항·제2항(합병 및 분합)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합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 참고사항

- 설립신고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간인 불필요
  - ‘간인’이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여야 하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준용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 협동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조합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협동조합 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상법 제186조-193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협동조합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2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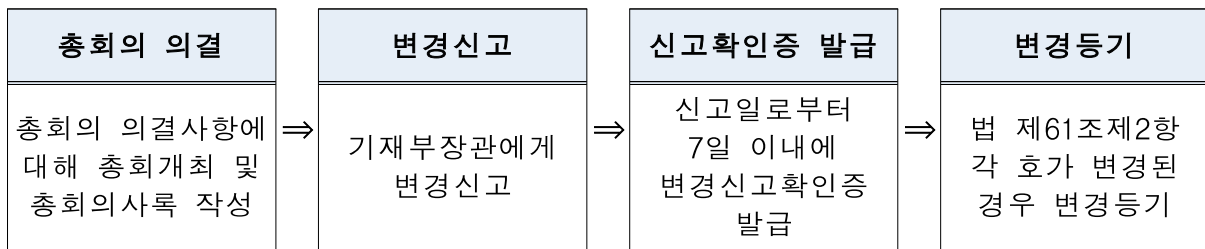
## 변경신고 관련 법령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변경신고 절차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수리 후 등기전 협동조합연합회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신고

- 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개최 및 의사록 작성
- ② ‘협동조합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4일 이내 신고
- ③ 명칭, 회장, 주사무소 변경시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하며, 그 외의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 변경신고확인증은 7일 이내에 발급(공휴일 제외)



- 변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 시스템”에 반영
- ④ 연합회는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
  -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등기 (대법원 등기국 확인사항)
  - 다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연번	법 제61조제2항	비 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 변경신고 서류

###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준용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시행규칙 제6조제2항)’를 첨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고확인증	연합회의 명칭,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1	명칭,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 신고확인증 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회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2	임원 변경	가. 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나.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기본법 제72조(준용규정)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16조(정관)**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71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19조(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①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연합회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3. 회원

#### 가

#### 자격 및 가입

##### 기본법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 회원의 자격

- “회원”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 □ 회원의 가입

-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만 회원으로 가입 가능
  - 자연인, 기본법 외의 개별법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



## 기본법 제74조(탈퇴)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탈퇴

- “탈퇴”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음

## □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회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유로 당연탈퇴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법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 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 ☐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 ☐ 회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연합회의 경우 법 제2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에 허용된 것과 같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집행기관인 회원 조합의 이사로 하여금 관련 권한 행사 가능



## 기본법 제76조(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21조(가입)** ①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연합회에 납입한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연합회는 연합회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4. 기관

### 가

### 총회

#### 기본법 제77조(총회)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 필수기관 및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
  -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
  -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정기총회)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시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



## □ 임원

## 기본법 제78조(임원)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임원은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 회원에 속한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가능,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
  - 다만, 현재 법인세법 109조에서 법인 설립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의사 및 능력이 필요

## □ 임원의 임기

## 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 기본법 제79조(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28조(총회)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 8의2.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회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10인 미만인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조합원인 법인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합회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원에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로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연합회,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연합회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5. 사업

### 가

### 사업의 내용

#### 기본법 제80조(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

☐ 필수 포함 사업

-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 공제사업 관련 법령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 사업 제외
- 공제료를 납입한 회원 협동조합만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에 속한 조합원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님

□ **공제사업 인가 및 인가요건**

-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회원 수가 10인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시행령 제16조제1항)



□ **공제사업 인가 절차**(시행령 제16조제2-8항)

①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개최**

- 총회개최 전 7일 이상 총회개최 공고
- 총회에서 공제규정 의결(일반정족수)

구분	공제규정 포함사항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② **공제사업인가 신청서 제출**

-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구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지출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인가여부결정 및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 (보완) 필수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인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회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및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외에는 인가

□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

-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
-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인가는 공제사업 인가절차 준용

구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2	공제 규정 사본
3	공제 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 사업 계획서
5	공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제1조(목적)** 00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및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제회는 00협동조합연합회공제회(이하 “00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00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주소:00시 00구 00로 00)에 둔다.

※ 주된 사무소가 연합회의 사무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00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로 규정할 수 있음

**제4조(회원)** 00공제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회원 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취득)**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따라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공제계약과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공제회로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납부한 공제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제계약의 해지
2. 연합회의 탈퇴
3. 협동조합의 해산
4. 제명
5.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8조(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을 자저오게 한 회원
3. 그 밖에 연합회 정관이나 공제규정을 위반한 회원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1명
  2. 연합회 총회에서 추천한 위원 0명
- ※ 조직의 규모 등을 생각하여 적정한 위원으로 구성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2-3년의 임기를 정하도록 함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족수는 각 공제회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공제회 임원의 선출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각 연합회와 공제회의 특성에 맞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제10조(임원)**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0명 이내
3. 감 사 2명 이내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연합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③ 이사는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④ 감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⑤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⑥ 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분장업무를 처리한다.

⑦ 감사는 연 1회 이상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⑧ 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새로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임기는 일반적으로 2-3년으로 함.

⑩ 임원의 결격사유는 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⑪ 임원은 공제회 이외의 다른 영리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⑫ 임원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은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그 밖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각 연합회와 공제회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무부서)** ① 공제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부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한다.

② 공제회 사무부서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긴급)금융 지원사업
2.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제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공제회는 회원 소속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조(자산운용기준)** 공제회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산 운용업무 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 14조(공제계약)** ① 공제회는 공제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는 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제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은 각각의 공제회의 특성에 따라 공제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하여질 것임

**제 15조(공제료)** ① 회원은 공제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공제료는 좌수제로 하며, 1구좌당 00만원으로 한다.

**제 16조(회계)**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② 공제회의 경비는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회원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시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비금의 보전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7조(규정의 변경)** 공제회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8조(해산)** ①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는 그 남은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인가를 받아 처리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제회 설립을 인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전문개정 2014.12.30.)

**법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사업의 이용이란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원 협동조합이 연합회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회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 이용 불가



## 6.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기본법 제82조(준용규정)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에산서)**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에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회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합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연합회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합회는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연합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총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연합회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관련 준용규정

### 기본법 제83조(준용규정)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연합회가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연합회는 해산신고를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에 대하여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⑤ 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연합회 이외의 법인, 단체 및 연합회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연합회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합회가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 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8. 등기 관련 준용규정

### 기본법 제84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61조(설립등기)** ① 연합회는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연합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사무소의 설치등기)** 연합회가 지사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연합회는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연합회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연합회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연합회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연합회의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회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연합회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1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3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4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 V. 사회적협동조합

<b>1. 개요</b>	<b>319</b>	<b>6. 회계</b>	<b>377</b>
<b>2. 설립</b>	<b>320</b>	가. 회계	377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320	나. 경영공시	381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331	다.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385
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340	<b>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b>	<b>388</b>
라. 정관변경	342	가. 합병 및 분할	388
마.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343	나. 타 법인 흡수합병	393
<b>3. 조합원</b>	<b>344</b>	다. 해산 및 청산	398
가.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344	라. 조직변경	403
나.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345	<b>8. 등기</b>	<b>409</b>
다. 조합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346	<b>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b>	<b>419</b>
<b>4. 기관</b>	<b>349</b>	가. 감독	419
가. 임직원의 겸직	349	나. 설립인가 취소	421
나.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350	<b>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b>	<b>423</b>
<b>5. 사업</b>	<b>354</b>	<b>11.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b>	<b>428</b>
가. 주사업	354		
나. 사업 관련 준용규정	364		
다. 소액대출	367		
라. 상호부조	369		
마. 사업의 이용	371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73		







# 1. 개요

## □ 개념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법 제2조제3호)

## □ 특징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설립동의자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법 제93조제1항의 주사업 40% 이상 수행
사업의 이용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의 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불가
감독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 □ 설립현황

- ‘16.12월말 기준 604개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전체 협동조합의 약 6% 차지)
-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http://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 2. 설립

### 가

### 설립인가신청 절차

####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 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진행,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 파기

##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기본법 제86조(정관)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 포함

### 4. 창립총회 공고

####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소관부처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공고



## 5. 창립총회 개최

###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5조(설립인가 등)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필수 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이사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 6. 설립인가 신청

###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
  - 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에 따라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 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을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b>지역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b>
수입지출예산서상 주사업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b>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고용형</b>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b>위탁사업형</b>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b>혼합형</b>
수입지출예산서 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예시) 지역사업형 30%, 취약계층고용형 20%의 혼합형으로 인가신청한 경우, 지역사업형으로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지출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담당

○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즉시 등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 사항

-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 추가 요구 금지(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되며,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조)
-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와 구두협의 후 공문으로 이송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없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지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인가업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법 1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은 인가신청서 접수 즉시,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첨부하여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 요청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주 이내에 인가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첨부하여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검토보고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결과가 통보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가능
-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시행령 제8조제1항)
-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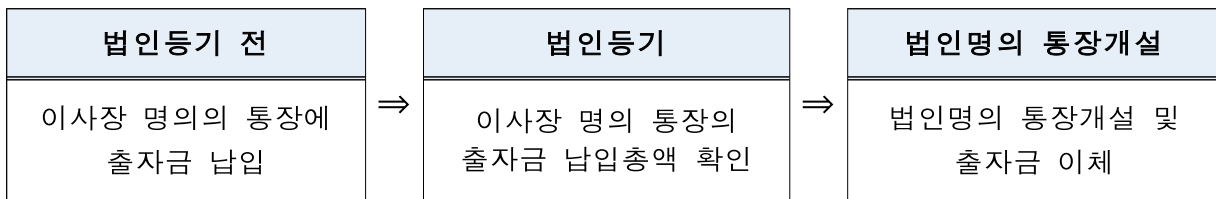


##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설립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10. 설립등기

### 법 제106조(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 (법 제109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인가의 효력 상실

##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본인은 「○○○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인가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하며,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번호는 설립신청 등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인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인가 관련 : 중앙행정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연번	인가신청서류	비고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서식 없음



## 1. 설립인가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 혼합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을 모두 표기

## 2. 정관

### 기본법 제86조(정관)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제출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하되, 사회적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기본법 제8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준용)



### ○ 주요 확인사항

-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45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야 함
-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하여야 함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7일(공휴일 포함,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벽보게시 사진, 전자우편 화면캡처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 4. 창립총회 의사록

###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선출된 임원이 모두 설립동의자인 경우)
-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 ○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하여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협동조합이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공증 준비서류(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이사장의 진술서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조합원의 인감증명

## 5. 임원명부 및 이력서

### ○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3x4 사이즈) 포함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 ○ 주요 확인사항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의사록에서 확인)
- 임원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6. 사업계획서

### ○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해당 주사업 유형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기재하며, 혼합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모두 기재
- 해당연도의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 주요 확인사항

- 정관에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45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7. 수입지출예산서

### ○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20호 서식)’

### ○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출자 1좌당 금액,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 ○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협동조합기본법 부칙<제12272호, 2014.1.21> 제7조)
-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면 안 됨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 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재

### ○ 주요 확인사항

####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이여야 함
- 설립동의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함



※ 설립 동의자 유형

유형	내용
생산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소비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직원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자
자원봉사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후원자	조합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10. 합병 또는 분합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합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는지 여부
- 법 제101조제1,2항(합병 및 분합)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합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주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출
- 그 밖의 입증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주요 확인사항

- 각 주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시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시



- 예시)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 사업”에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출한 주사업이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을 통해 기본법에서 정한 주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

#### ※ 참고사항

- 설립인가 신청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간인 불필요
  - ‘간인’이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사업계획서 상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있으나, 수지예산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령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 1억원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감독	소관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최소 조합원수	5인	500인
최저 출자금	제한 없음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제한 없음	5만원
1인당 최고출자금	출자금납입총액의 30% 이내	출자금납입총액의 10% 이내
비조합원 이용	제한 없음(예외 있음)	총 공급고의 50% 이내
이용공급고 산정	기준 없음	매출액 또는 이용인원



## □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는 500인 이상일 것
-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
-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이 50% 미만일 수 있음

## □ 의료기관 추가개설

-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설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추가로 개설 가능



## 정관변경 관련 법령

**법 제86조(정관)**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규칙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 발생

-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등 설립 인가후 등기전 사회적협동조합등도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정관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 없음



기본법 제88조(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3. 조합원

#### 가

####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기본법 제89조(출자금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89조(출자금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 출자금환급청구권

-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 청구 가능

※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배당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각 조합원의 “지분” 개념으로 표현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배당이 금지된 구조이므로 각 조합원의 지분 개념은 성립할 수 없고, “출자금”으로 표현

- 출자금환급청구권은 청구권 발생시점(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 환급정지

-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채무”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선금금, 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



## 기본법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 □ 손실액 납입 청구

-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 청구 가능
- 예시)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 가능



## 기본법 제91조(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예시)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 가능
  - 다만,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 필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 (공공기관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예시)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
  -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기관장의 사전허가 필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기관

### 가

### 임직원의 겸직

#### 임원의 겸직 관련 법령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행령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법 제44조 제3항 준용),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frac{1}{3}$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frac{1}{3}$ 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 조합원의  $\frac{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frac{2}{3}$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기본법 제92조(준용규정)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 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28조(총회)** ① 사회적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사회적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결을 준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5. 사업

### 가

### 주사업

#### 주사업 관련 법령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주사업 관련 법령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9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 ☐ 주사업 유형

구분	유형	내용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 주사업 판단기준 및 방법

### ○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판단방법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 :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 판단방법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취약계층 고용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 판단방법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위탁사업형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업무협약 등으로 위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 판단방법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기타 공익증진형

###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위의 네 가지 유형 이외의 사업으로서 현저히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

#### ※ 판단방법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혼합형

###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 수행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 수행

#### ※ 판단방법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정의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 취약계층의 판단방법

### 제1호. 저소득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제2호.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 제4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 확인서

###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고용부 고시 제2012-22호, '12.2.1)】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 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②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③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또는 F-6

##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 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법 제45조(사업) 준용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
- 정관상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 필수 포함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 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 불가능, 「의료법」에 따라 안마원 운영 불가능,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한지 우선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므로 협동조합이 상조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 저축기관
		투자기관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금융지주회사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투자 자문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 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소액대출 관련 법령

**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 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

- 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2 한도에서 소액대출 가능



## ☐ 소액대출 한도

-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 ☐ 소액대출 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 소액대출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
  -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연 25%)을 넘을 수 없음

## ☐ 소액대출 회계

- 소액대출사업은 주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특별회계 등으로 따로 회계처리

## ☐ 정관 기재 사항

- 대출자격, 1인당 대출한도, 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 대출 위험관리,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
  - 대출을 받고 협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무분별한 대출신청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출자격 명시
  - 소액대출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의무가 필요하며 대출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 명시

- ☐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액대출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 제2항제4호)



## 상호부조 관련 법령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상호부조”란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조합원이 낸 회비로 운영하여야 하며, 출자금 또는 차입금 등을 기금으로 운영해서는 안 됨
- 소액대출은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반면, 상호부조는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음



## □ 상호부조 정관 기재사항

-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적립금 운용) 적립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이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함
  - (대손위험관리) 상호부조 사업의 대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적절한 대손위험 관리방안이 있는지 확인
  - (제3자 계약금지) 상호부조 계약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 등 제3의 판매 조직을 통한 계약 불가

## □ 상호부조 회계

-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특별회계 등으로 따로 회계처리

- 사회적협동조합이 상호부조의 총사업 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제4호)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

**법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 "사업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소비자, 사업자, 직원의 지위에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
    -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 적용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관련 법령

**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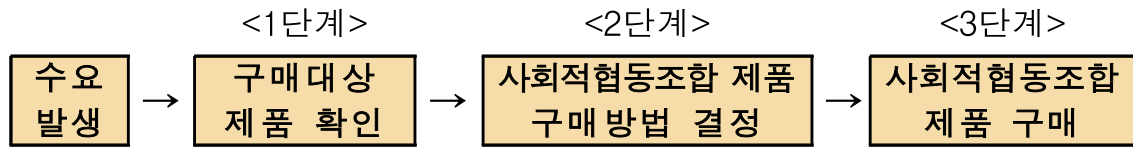


##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통보

-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의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절차】



## ① 1단계 : 구매대상 제품 확인

- (온라인)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협동조합 상품물  
→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 (통합검색으로 찾기)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 정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보 검색 가능
- (상품 찾기)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메뉴바 하단의 분류별 또는 카테고리 전체보기를 통해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찾기)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협동조합현황'- '협동조합 설립현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분류로 검색(지역별, 소관부처별, 업종별, 조합명 등으로 확인)

## &lt;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gt;



## &lt;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gt;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을 통하여 구매상담(전화 : 031-697-7745~6)



## ② 2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 ○ 직접구매/간접구매

- (직접구매) 해당기관이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용역·물품구매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 \*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계약수행과 무관한 구매는 불인정)
  - \* 단,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 ○ (계약방법)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 ③ 3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 내 ‘협동조합 상품몰’에 소개된 상품 등을 구매
- 제품 특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매 상담 및 주문



## 6. 회계

### 가 회계

#### □ 운영의 공개

##### 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 운영의 공개 사항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 조합원 명부
- 회계장부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 운영의 공개 사항 중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3호)



## □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기본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구분	내용
잉여금	순재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
순재산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이라고도 함
법정자본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
  -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 □ 손실금의 보전

### 기본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 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
-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 □ 잉여금의 배당

### 기본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



## □ 부과금의 면제

### 기본법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부과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 법 제99조의 조항에 근거하여 모든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면제 가능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부담금 부과요건등)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경영공시 관련 법령

**법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 경영공시 대상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 단,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 경영공시 자료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li> <li>•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li> </ul>
사업결산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li> <li>•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예산과 ‘사업결산 보고서’ 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li> <li>•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li> </ul>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li> <li>• 창립총회 포함</li> </ul>
사업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li> <li>•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li> </ul>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li> <li>• 해당연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기재</li> </ul>

## □ 경영공시 방법

-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각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시행령 제 27조)

\* ‘16년까지 기재부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통합공시하였으나, ’17년부터 소관 기관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하도록 의결(제1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15.10.20))

### <참고>제1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15.10.20) 안건 중

#### 경영공시 책임성 강화

##### □ 현황

- 협동조합이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협동조합별로 **개별** 공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하여, 기재부장관이 공시대상 협동조합(‘14년 142개, ’15년 227개) 전체를 일괄하여 **통합공시**
  - \* 시·도의 경영공시 홈페이지 미구축,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이해 부족, 공시자료 작성의 통일성 확보 등

##### □ 문제점

- 기재부장관이 경영공시의 최종적인 주체가 됨에 따라 공시자료의 1차 작성기관인 협동조합의 책임성 부족으로 부실자료\*가 많이 발생
  - \* 결산데이터 불일치, 첨부서류 누락, 개인정보 노출, 오탈자 등
- 부실공시 또는 공시 지연 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의 주체는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 그러나, 경영공시의 경우 기재부가 통합공시 함에 따라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 □ 개선방안

- ’17년부터는 기재부가 통합공시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별로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 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책임성 제고
  - 협동조합은 개별 공시 이전에 중간지원기관, 진흥원 등에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공시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은 공시지연, 부실공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경영공시 절차

### ○ 협동조합

- 설립인가를 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
-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 중앙행정기관

- 소관 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
- 소관 협동조합에서 등록한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의 첨부 여부 확인
- 경영공시 첨부자료와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일치여부 확인
- 경영공시 자료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통보하여 보완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공시기한, 허위사실 게재 등) 준수 여부, 주사업 수행(전체 사업의 40% 이상) 여부 등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감독, 시정명령, 과태료 및 벌칙 등 조치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경영공시 자료를 취합하여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게재

### ○ 기획재정부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등 경영공시 총괄
-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관리 및 제도 개선

협동조합	소관 부처	진흥원	기획재정부
각 부처 사이트에 경영공시자료 업로드	경영공시 자료 검토 및 최종확인	경영공시 자료 취합, 협동조합 포털에 게재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교육 등 총괄



- ☐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 경영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고,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

※ 자세한 사항은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p.165)을 참고



## 기본법 100조(준용규정)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에산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에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칙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함
	기록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 다만,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전결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제정 가능
예산	예산총계주의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처리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의 변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 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 지출 가능.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음
	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침
결산	결산서의 작성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계정이월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말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수입 과 지출	수입금 징수	수입은 출자금, 회비 등으로서,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함
	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함
장부	장부의 종류	주요부(전표, 총계정 원장), 보조부(각 계정 보조부)
	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전표에는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제증빙 서류 첨부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1호와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이사장이 날인
출자 및 자본	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출자금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하며,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자본잉여금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 포함 자산재평가차액은 결손에 보존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배당금, 이월금 등에 사용
	지분의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납입출자금 및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 가

### 합병 및 분할

#### 합병 및 분할 관련 법령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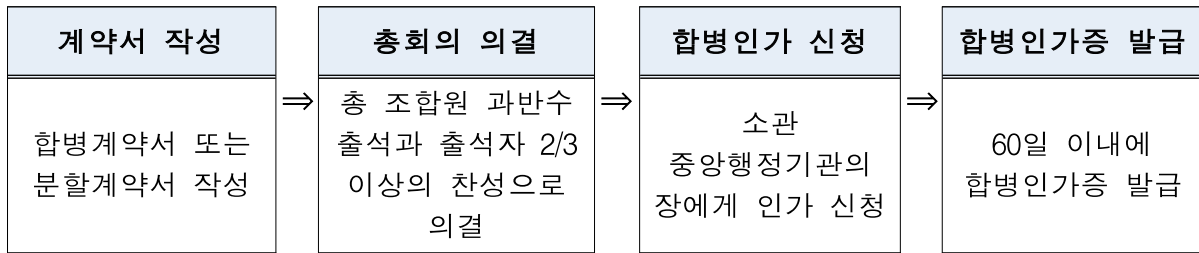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분할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분할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과 사진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 합병 및 분할의 정의

-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행위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소멸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이고( $A+B=C$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이 소멸되고 하나의 협동조합이 존속( $A+B=A$ )
- “분할”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행위



## □ 합병 및 분할 절차



### ① 합병 및 분할 계약서 작성

- 합병 및 분할당사자 협동조합 간의 합병 또는 분할 계약의 주된 내용(신설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증가할 출자금 총액,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임원의 변경사항 등) 기재

### ② 합병 및 분할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③ 인가신청

- 주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신청
- 합병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분할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④ 인가증 발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합병인가증 또는 분할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 □ 합병신고 서류

- ‘협동조합 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신고서류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6	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 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 합병 및 분할 관련 신고(법 제56조제2항 준용)

구분	협동조합 유형	신고·인가의 종류	시행규칙 서식
합병	존속하는 협동조합	합병인가	별지 제26호 서식
	소멸하는 협동조합	해산신고	별지 제28호 서식
분할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설립인가	별지 제18호 서식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신고	별지 제22호 서식

## □ 권리·의무 승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 □ 준용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준용 규정
  -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6조(정관), 제88조(준용규정) :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및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준용규정 (채권자 보호절차)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 ① 합병에 따라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 ② 이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 ③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봄,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 제공

## □ 합병 관련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없음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동조합 흡수합병 가능
- 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상법 제527조의4제1항)
-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환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자금환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탈퇴하여야 함



## 흡수합병 관련 법령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 흡수합병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동조합 흡수합병 가능

## □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시행령 제28조)

구분	흡수합병 인가 기준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①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 ②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식회사등을 흡수합병 할 때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등에는 상법이 적용

흡수합병 절차	상법 규정	협동조합기본법 규정
합병계약서의 작성	제522조제1항, 제523조	제56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제354조	-
합병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제374조제2항, 제635조제1항 제23호	제28조제5항
합병승인 총회	제522조제3항, 제434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 제2항, 제32조제4항
채권자 보호절차	제527조의5, 제232조, 제530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6조제8항,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6항, 제54조
구 주권 제출 (주식회사의 경우)	제440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제530조제2항, 제374조의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제530조, 제374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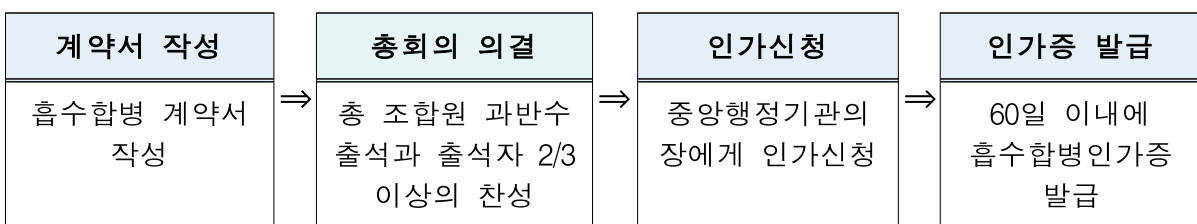
○ 흡수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법인과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및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준용

### ③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중 상장 법인은 상장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시 주식양도계약, 교부금 합병 등을 통해 지분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사주 소각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 소멸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 □ 흡수합병 인가 절차



### ① 흡수합병승인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흡수합병계약서, 소멸법인 주주에게 배정하는 출자좌수에 관한 서류 등 주요서류를 합병일 이후 6월간 본점에 비치



-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반대의사를 서명으로 통보
-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함(상법 제434조)

## ② 흡수합병 계약서 작성

- 흡수합병 계약의 주된 내용(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증가할 출자금 총액,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등) 기재

## ③ 흡수합병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④ 흡수합병인가 신청서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 ⑤ 흡수합병인가증 발급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흡수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인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흡수합병 인가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정관 사본
2	(흡수)합병계약서 사본
3	(흡수)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흡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6	흡수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 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해산 관련 법령

**법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가 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법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법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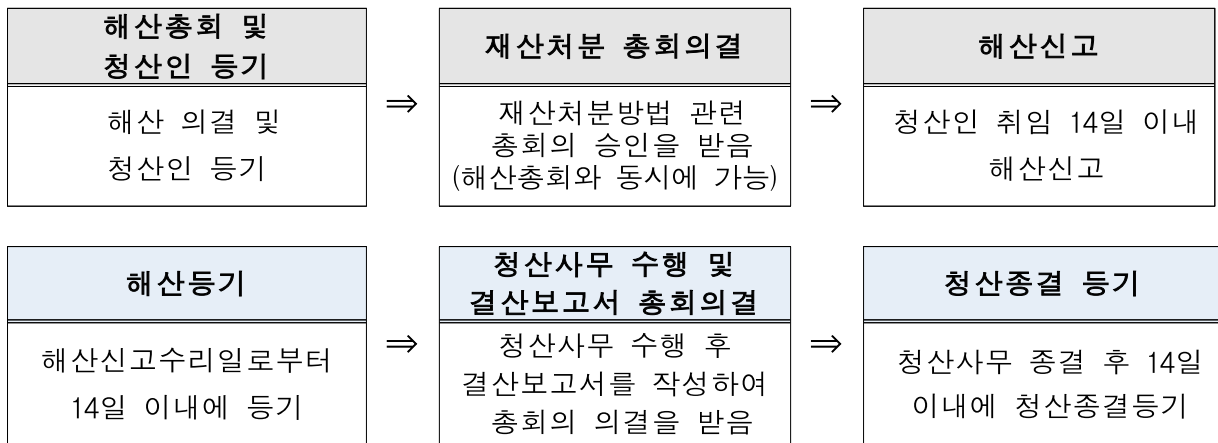
## □ 해산 및 청산

- “해산”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권리능력 상실
  -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산 사무 감독

## □ 해산 사유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 설립인가의 취소

## □ 해산 절차



※ 미등기 협동조합은 해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해산신고

###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등기

- 총회에서 해산 의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

## ②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의결

- 청산인 취임 →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총회 전 미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해산 총회에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의결하는 것도 가능

## ③ 해산신고

-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산신고(파산의 경우 제외)
- ‘해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 해산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산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 ④ 해산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 다만, 상법등기법 제60조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 110조 및 제70조에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법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는 해산신고서를 받은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미등기 협동조합의 경우 제외)

→ 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 ([www.share.go.kr](http://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을 득한 후 이용 가능

## ⑤ 청산사무의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 ⑥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잔여재산의 처리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귀속
-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④ 국고



-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준용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가 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조직변경 관련 법령

**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자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및 법인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 조직변경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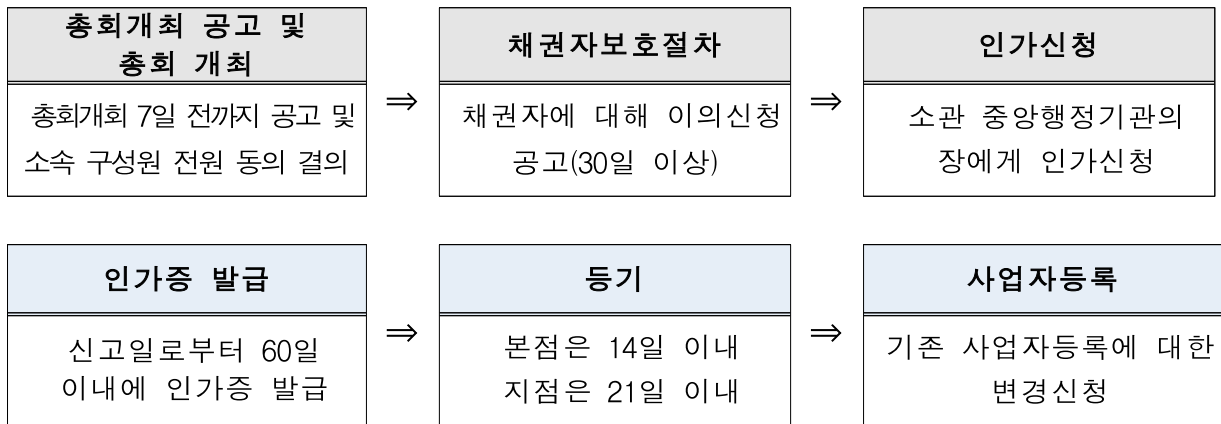
-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i)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ii)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i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iv) 법인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 다만, 부칙 제3조에 의해 ‘12.12.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비법인)가 ‘16.11.30일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 기한 경과로 부칙에 의한 사업자(비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 □ 조직변경의 효과

-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
  -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및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는 납부
  -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 □ 조직변경 절차



### ①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

※ 단, i)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 가능

- 창립총회 관련 안건을 조직변경총회에서 결의
-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구분	조직변경 시 결의사항
정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금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사내유보금의 정리 등

- (사내유보금)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총회의 결의(일반정족수로 의결)를 통하여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음



## 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

-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30일 이상)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함

\* 최고(催告)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③ ‘조직변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④ 조직변경인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직변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조직변경 관련 해산등기의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필요없으며, 해산등기와 동시에 등기기록 폐쇄)

⑥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며,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 조직변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조직변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6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서식)
7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조직변경 관련 사항

-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0호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 조직변경 관련 채권자보호절차는 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 법 제85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 법인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인가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 8. 등기

### □ 설립등기

#### 기본법 제106조(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이사장은 이사로도 등기하여야 함



○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간인 날인 필요)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인가증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익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준용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

- 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통합등기 가능

○ 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등기신청서	지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설치 연월일 기재
2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의사록 제출필요 의사록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4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첨부
5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 □ 이전등기

### 기본법 제63조(이전등기) 준용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사장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하나, 구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으로도 가능

○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비치
2	정관	정관 사본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하여 제출
3	이사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4	조합원총회의사록, 정관변경인가확인증	정관에 주사무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신소재지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와 구소재지의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
7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 □ 변경등기

### 기본법 제64조(변경등기) 준용

-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변경사항에 따른 등기사항

변경등기대상	등기기한	신청인	비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사장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
설립인가 연월일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 ○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 서류

구분	신청서류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합병등기

### 기본법 제107조(합병등기)

-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의 등기사항

구분	등기사항	비고
1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변경등기	
2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해산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등기	

## □ 해산등기

### 기본법 제108조(해산등기)

-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촉탁(대등한 지위의 행정청간에 행하여지는 위임)

## □ 청산인등기

### 기본법 제67조(청산인등기) 준용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과 법인인감을 등기
-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과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를 첨부하여 신청

## □ 청산종결등기

### 기본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준용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조직변경등기

### 기본법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또는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함(상업등기법 제66조)
  -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 변경 전 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상업등기법 제65조)
- ※ 협동조합기본법 제110조 및 제70조는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설립등기시 기존 법인의 업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의 말소등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
- 신규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정정(변경)신청
  -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 □ 등기의 기산일

-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 계산



-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

<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관련 준용사항 >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1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3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4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구분	관련조항	관할 등기소	등기기한	신청인
설립	제106조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사장
지사무소 설치	제62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28일 지사무소 21일	이사장
이전	제63조	전·현소재지	전·현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변경	제64조①	각 사무소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출자금 변경	제64조②	각 사무소 소재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사장
합병	제107조	각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사장
해산	제10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청산인	제67조	주사무소	취임일부터 14일	청산인
청산종결	제6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조직변경	제108조의2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 부터 본점 14일, 지점 21일	이사장



##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 가 감독

#### 기본법 제111조(감독)

-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 ⑥ 삭제

-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 포함)이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음



## □ 감독사유

-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본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감독방법

### ① 감독대상 선정 및 감독계획 수립

- 감독개요, 감독대상, 감독시기, 감독방법, 감독사항, 감독점검표 서식, 감독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감독조치계획, 행정사항 등 기재

### ② 감독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에 통보

- 감독시행일 7일 전까지 공문이 도달되도록 하여, 피감독자가 미리 감독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③ 감독시행

- 감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인에게 제시
- '감독점검표'에 감독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적고, 하단에 피감독자의 확인서명을 받음

### ④ 감독결과보고서 작성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본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관부처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⑤ 결과조치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설립인가 취소 등 감독에 따른 결과조치

- 감독기관에 대하여 거짓 진술·보고, 사실은폐 또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립인가 취소 관련 법령

**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설립인가 취소 사유

구분	취소사유
재량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 설립인가 취소 절차

### ① 시정조치

-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사업미개시, 설립인가기준 미달)에는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 ② 청문 실시

-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
- 청문 주재자는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설명,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결과 반영

### ③ 설립인가 취소(서면으로 통보)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



## 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 추천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추천요건
1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3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할 것
5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2·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①의 요건 적용 배제

##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기부금단체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주무관청이 작성
2	법인설립허가서(설립인가증) 사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정관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2년이 안된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7	선관위의 유권해석 문서(정치활동을 했던 단체를 추천할 경우 선관위에서 그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말함)



## □ 추천방법

- ①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제출

\* 추천기한 : 2.28 / 5.31 / 8.31 / 11.30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예외 불인정)

## □ 지정기간

-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② 기부자 손비인정(2014.9월 현재)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 인정

## □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 ○ 기부금 단체

- ①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②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③ 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④ 관할세무서장이 ③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⑤ ②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주무관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말(5·6년차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 재지정

- **신청절차**
  - 신규신청 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 재지정 추천 시 요건충족여부 등 점검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 제출
-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 종료 후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구분	재지정 배제사유
1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lt;개정 2013.2.23&gt;

## 기부금단체 추천서

##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 3. 기부금 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작성 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의3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무부의 공증 면제 승인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됨

- (추천 신청)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
- (면제 추천)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함

#### ☞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1. 소관부처 추천 공문
2.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3. 설립인가증 사본
4. 정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기타 참고자료

-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 고시함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



## 참고

##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사회서비스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협 <input type="checkbox"/> 기타공익증진형			

## 사업의 공익성

※ 사업의 공익성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

위와 같이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00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의 공익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 공증면제 신청과 관련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위의 서식은 참고서식임







## VI.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	433
2. 설립 .....	434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	434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	440
3. 준용규정 .....	448
가. 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449
나. 협동조합연합회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455
다. 사회적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	457







# 1. 개요

## □ 개념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 (법 제2조제4호)

## □ 특징

구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발기인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의 자격 제한 가능
출자한도	한 회원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의결권·선거권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대리인이 행사 불가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회원에게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필수, 공제사업 가능
사업의 이용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봄(공제사업 제외)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불가
감독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 □ 설립현황

- ‘16.12월말 기준 5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http://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 2. 설립

### 가

### 설립인가신청 절차

#### 기본법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신청	발기인 → 기획재정부장관
7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 후 6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회장
9	출자금 납입	회원 → 회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 “회원자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 제한 가능 (법 제73조제2항 준용)

##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법정서식은 없으나, 기본법 제86조(정관)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사회적협동조합)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 포함

##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소관부처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창립총회 공고 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5.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필수 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 6. 설립인가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
-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즉시 등재



## 7. 설립인가증 발급

###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준용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가능
-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처리기간의 계산
  - 설립인가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시행령 제8조제1항)



##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 인계

## 9. 출자금 납입

- 회장이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내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 회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설립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10. 설립등기

### 법 제106조(설립등기) 준용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법 제109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법 제115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5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1호)



##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준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하는 서류

구분	인가신청서류	비고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 서식 없음



## 1. 설립인가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 ‘설립신청인’란에는 설립신고를 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
  - ‘설립신청내용’란의 ‘설립동의자 수’에는 회원의 개수 기재
  - ‘신청인’란에는 신고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협동조합의 법인인감도장 날인

## 2. 정관

### 기본법 제86조(정관) 준용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정관”이란 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를 참고하되, 연합회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연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준용)

#### ○ 주요 확인사항

-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연합회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연합회의 설립목적, 명칭, 회원의 구성 등과 관계 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 3개 이상의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음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포함



## ○ 주요 확인사항

- 창립 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게시 사진, 전자우편 화면캡처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 4. 창립총회 의사록

###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핵심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법인)인감도장 날인
  - ※ 의장과 회장이 다른 경우 의장과 회장 모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공증을 위해 (법인)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 ○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하여 작성 시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연합회가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공증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회장의 진술서
4. 회원 명부
5. 회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회원의 법인인감증명

## 5. 임원명부 및 이력서

### ○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3x4 사이즈) 포함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 ○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이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의사록에서 확인)
- 임원이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6. 사업계획서

### ○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기본법 제93조(사업),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방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유형은 모두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기재
- 해당연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기재
- 해당연도의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 주요 확인사항

-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7. 수입지출예산서

-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20호 서식)’
-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출자 1좌당 금액,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12272호, 2014.1.21> 제7조)
  - 모든 회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한 회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재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 법 제101조제1,2항(합병 및 분할)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

####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주사업(기타 공익증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 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그 밖의 입증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 참고사항

- 인가신청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간인 불필요
  - ‘간인’이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있으나, 수지예산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 준용규정

#### 기본법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제1절 설립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제2절 회원

**제21조(가입)**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제명)**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8의2.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회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을 준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절 등기

**제62조(지사사무소의 설치등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사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회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절 설립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 제2절 회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회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와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미적용)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 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VII. 보칙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65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67
3. 규제의 재검토 ..... 468







#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 시·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

- 기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위탁

- 기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가능
-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
  - 주사업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주사업 비중이 가장 많은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인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직제 시행규칙(ex.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을 관장하거나 가장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



##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

###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탁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 가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

###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제1항에 따라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1항에서 같다)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 3. 규제의 재검토

#### 시행령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 시행령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서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제한
  -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VIII. 벌칙 및 과태료

-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 471
- 2. 벌칙 ..... 473
- 3. 과태료 ..... 477







#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도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도가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식을 규정할 필요
- 시·도는 조합원·피해자의 제보, 언론보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협조요청(자료제출, 면담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 및 법령 위반사항을 파악하여 처리

## □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피해자의 제보,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부처는 기본법 제111조(감독) 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시행
- 감독결과 파악된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처리

##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과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리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115조제3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리



## □ 위반사항에 따른 처리절차

- 사실관계 파악 및 감독을 통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관련 개별법률 위반, 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부처의 장이, 연합회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 (벌칙)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의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협동조합의 경우 시·도지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합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어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협동조합기본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을 준용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하여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감경처분하되,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 관련 개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주무부처에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 「형법」을 위반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 2. 벌칙

### 법 제117조(벌칙) 및 제118조(양벌규정)

**법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벌칙의 경중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 위반)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사회적협동조합등은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 위반)
-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 법정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법 제50조제3항 위반)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 위반)
- 협동조합이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법 제51조제2항 위반)
- 잉여금 배당시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거나 출자배당이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법 제51조제3항 위반)
-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위반)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 위반)
- 출자감소 의결 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3항 위반)



-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법 제55조 위반)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 위반)
-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 위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 양벌규정의 적용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협동조합에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다만, 협동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법 제9조제2항 위반)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 위반)
  - ①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②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위의 사항에 대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법 제37조제3항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법 제37조제4항 위반)



### 3. 과태료

#### 법 제119조(과태료)

**법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과태료의 경중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 사용 (법 제3조제2항 위반)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조제3항 위반)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5항 위반)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위반)
  -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법 제23조제1항 위반)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에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위반)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한 경우(법 제94조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4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위반)
  -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49조, 제49조의2, 제96조의2 위반)
  -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 IX.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b>1. 개요</b>	<b>483</b>
가. 구축배경	483
나. 구축현황	483
다. 기대효과	486
<b>2. 협동조합 업무처리 방법</b>	<b>487</b>
가. 중앙부처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487
나. 자치단체 - 협동조합	492
<b>3. 종합정보시스템 활용</b>	<b>519</b>
가. 협동조합 관련 정보 공유	519
나.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주요통계	519
다. 협동조합 상품물	521
라. 사이버교육	522
마. 모바일 홍보포탈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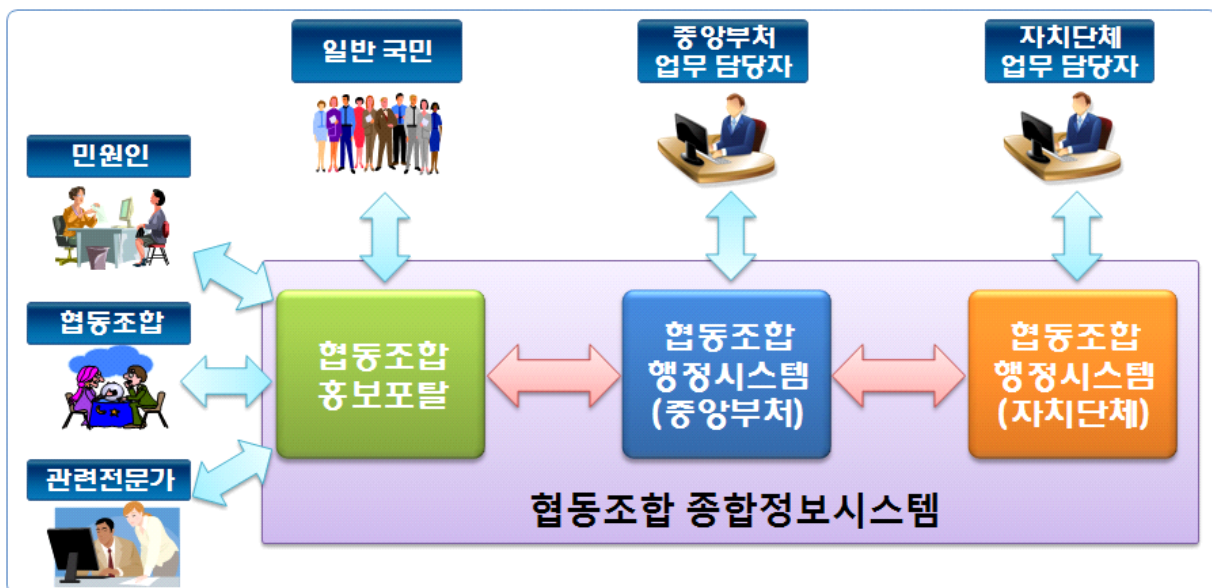
# 1. 개요

## 가 구축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2.12.1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 관련 업무 처리와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민원처리, 통계 및 현황관리 등을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협동조합 및 일반 국민 등이 협동조합 관련 다양한 정보에 대해 쉽게 확인이 가능도록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필요

## 나 구축현황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은 대국민 홍보서비스를 위한 “협동조합 홍보포털”과 협동조합 관련 행정처리를 위한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중앙부처·자치단체)”으로 구성
  - 행정시스템에서 처리된 협동조합 신고·수리 정보를 대국민 홍보포털과 실시간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 협동조합 홍보포탈 구성 내용

- (제도소개) 협동조합의 정의, 7대원칙, 기본법 소개,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정보 제공
- (설립·운영) 중간지원기관 현황, 협동조합 설립·운영·변경·해산 절차 등의 정보 제공
- (협동조합현황) 협동조합 설립현황, 개별 협동조합 소개정보, 협동조합 사례, 경영공지 자료, 주요통계 정보 제공
-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료실, 자주묻는 질문, 서식자료, 동영상·사진자료 제공
- (협동조합 상품몰) 협동조합 상품 정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정보 제공
- (교육) 온라인 사이버 강좌, 오프라인 교육일정, 홍보동영상 제공


홈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제도소개](#) | [설립·운영](#) | [협동조합현황](#) | [알림마당](#) | [협동조합 상품몰](#) | [교육](#)



협동조합찾기

팝업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간소화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자료실 | FAQ

-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발간 2015-06-17
-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5-06-10
- [입찰광고] 2015년 협동조합 주간... 2015-05-29
- 2015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2015-05-08
- 2015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2015-05-08

교육일정

대전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대전 2015.04.08~12.31
[출산] 2015 출산권역 협동...	출산 2015.04.08~12.09
[경북] 04월~11월 정가설명...	경북 2015.04.22~11.18
[충남] 아산시 협동조합 협...	충남 2015.05.06~07.29
[전국] 맞춤형 아카데미 ...	서울 2015.06.19~07.16

<p>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p> <p>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p> <p>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방향</p> <p>협동조합의 특징</p> <p>협동조합의 유형</p>	<p>협동조합 설립절차</p> <p>설립 이후 행정 절차</p> <p>조합원의 책임과 권리</p> <p>협동조합의 기관</p> <p>임원의 책임과 권한</p>	<p>협동조합의 인사노무</p> <p>협동조합의 자본</p> <p>협동조합의 회계</p> <p>협동조합의 세무</p> <p>협동조합의 법인세</p>	<p>협동조합의 마케팅</p> <p>협동조합의 사회적 의무</p> <p>협동조합 간의 협동</p> <p>성공사례</p> <p>실패사례</p>
---	--	--	--



협동조합 상품몰

협동조합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의 생산물 및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우리협동조합 소개

제주공인중개사협동조합  
서울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순애순집고  
수원시청업자사회적협동조합



뉴스레터

뉴스레터를 통해 COOP 정보를 알아보세요.

선택해주세요

뉴스레터 신청



주요사례

- 협동조합온리
- 출산과과정협동조합
- 와물대학협동조합
-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복경고교육경제공동체 사회...



중간지원기관

대표전화 1800-2012

설립상담 / 경영컨설팅 / 기본-맞춤교육



바로가기 서비스

[성식작성 동영상](#)
[서식자료](#)

[주요통계](#)
[협동조합 설립현황](#)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저작권정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블로그](#)


 Copyright©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ll Contents Reserved.  
 (우)461-72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7,8층)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관련사이트](#)
[이중](#)



##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 중앙부처용

- (사회적협동조합) 소관 중앙부처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인가, 정관변경, 해산 등 업무처리
- (연합회)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신청), 수리(인가), 정관변경, 해산 등 업무처리
- (통합관리)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홍보포털과 실시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

##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 자치단체용

- 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 신고, 수리, 정관변경, 해산 등 업무처리
-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도/서울행정시스템에 협동조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 □ 대국민서비스 제고

-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 절차, 설립현황, 온라인 강의, 교육일정, 협동조합 상품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 제고 및 알권리 충족

## □ 효율적 행정처리

-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수기로 처리·관리 되던 협동조합 신고, 수리 등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 관리
- 협동조합 민원처리 업무를 전산화 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민원처리 현황을 홍보 포털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 협동조합 활성화

- 협동조합 상품(제품·서비스) 정보, 우수 협동조합 사례, 개별 협동조합의 소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홍보·판로 지원
-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협동조합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2. 협동조합 업무처리 방법

### 가

#### 중앙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 행정시스템 개요

- 협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등의 민원업무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처리
- 협동조합 처리현황, 상세정보, 변경정보 및 각종 통계자료 관리
- 행정시스템에서 등록·처리된 협동조합의 기본정보\*는 실시간으로 협동조합 홍보포털과 연계되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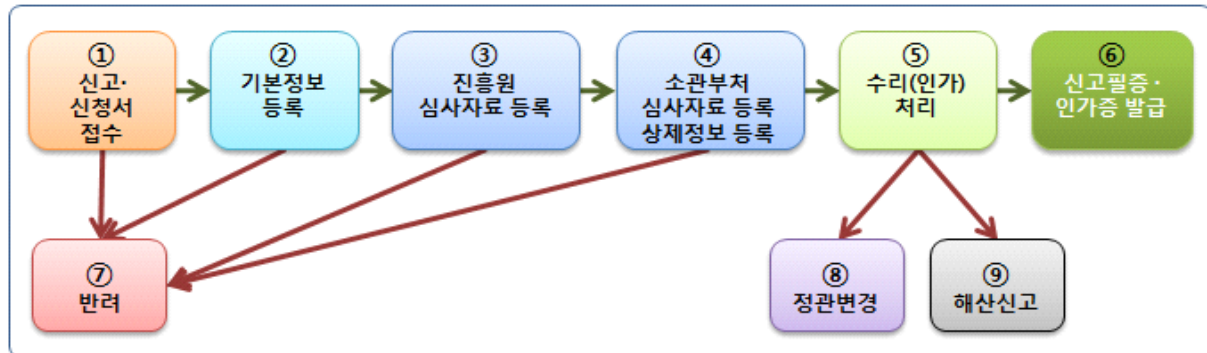
\* 협동조합명, 신고(신청)/수리(인가)일, 대표 연락처, 이사장(회장)명, 협동조합 종류, 조합유형, 업종, 품목, 주소

##### □ 시스템 사용자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며, 사용자는 부처별 중간관리자가 등록·관리
  - 부처별로 사용자 등록·수정·삭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데이터 인계·인수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중간관리자를 지정
  - 소속부처에 중관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로 중간관리자 등록 신청



## □ 업무처리 프로세스



### < 수리(인가) 프로세스 단계별 설명 >

- ① 협동조합 설립 신고(신청)서 접수
  - ② 협동조합 기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③ 진흥원 심사결과 등록
  - ④ 협동조합의 상세정보 입력 및 소관부처 심사결과 등록
  - ⑤ 수리(인가) 조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 수리(인가) 처리
  - ⑥ 수리(인가) 후 신고필증(인가증) 발급  
-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고필증(인가증) 서식 및 관인을 등록한 경우 시스템을 통한 발급 가능
  - ⑦ 수리(인가) 조건에 부적합 경우 반려사유 등록 후 반려 처리
  - ⑧ 수리(인가) 후 정관변경 처리
  - ⑨ 수리(인가) 후 해산 처리
- ➡ 단계별로 처리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행정시스템 이용

### ① 로그인

- 행정시스템 접속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주소 : <http://work.coop.go.kr>
- 최초 접속 시에는 초기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
  -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The screenshot shows the login interface of the COOP 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At the top, there is a logo for COOP (KOREA COOPERATIVES) and the text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Below this, there are two input fields: '아이디 :' (ID) and '비밀번호 :' (Password). To the right of these fields is a green button labeled 'LOGIN'.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checkbox labeled '마이디 저장' (Save MyID), which is currently checked.



## ○ 메인화면 구성

The screenshot shows the COOP system main interface. It includes a top navigation bar with a logo and a menu. A summary box at the top right displays statistics for '정기적' (Regular) and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ategories. A left sidebar contains a tree menu.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cooperation items.

**1** 트리 메뉴 : 알림마당과 협동조합 인가(수리)로 구성

**2** 정기적 : 전체 : 7, 인가: 3, 처리중: 4, 폐산: 0, 반려: 0  
 기획재정부 : 전체 : 64, 인가: 37, 처리중: 6, 폐산: 1, 반려: 2

**3** 사회적협동조합

**4** 기본정보 등록

**5** 액셀 다운로드

**6** 알림마당

No	신청일	협동조합명	이사장(회장)·설립동의자수	업종구분	설립목적	부차담당자·전종합담당자	인가일	신청경과일	진행상태
1	2016-06-30	전설로사회적협동조합	김**	1	지역사업형	관리자		21일	심사중(진행중)
2	2016-06-21	전설로사회적협동조합	김**	1	지역사업형	관리자		21일	심사중(진행중)
3	2015-05-01	테스트 사회적협동조합	김**	1	지역사업형	관리자	2015-05-02	303일	심사중(진행중)
4	2015-05-05	가오리사회적협동조합	김**	3	지역사업형	관리자	2015-05-02	313일	심사중(진행중)
5	2013-10-28	한국교육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김**	6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업형	관리자	2015-06-25	709일	심사중(소관부처)
6	2014-08-18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연구소	김**	32	사업시설관리·위탁계열·고용형	관리자	2015-12-01		정관변경(신청)
7	2014-06-18	세종정부세종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김**	37	도매 및 소매업·지역사업형	관리자			정관변경(신청)
8	2014-04-10	사회적협동조합 종은연구소	김**	8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업형	관리자			정관변경(신청)
9	2014-07-08	삼봉 소비자 사회적협동조합	김**	11	도매 및 소매업·기타공인전종합	관리자	2014-06-11		정관변경(신청)
10	2013-08-26	마을을 가꾸는 온가나플터 사	김**	9	숙박 및 음식·음주판매형	관리자	2013-11-12		정관변경(완료)
11	2013-03-12	사회적협동조합 아이돌 합동조	김**	15	사업시설관리·기타공인전종합	관리자	2013-04-15		정관변경(완료)
12	2015-07-01	나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김**	1	제조업	관리자	2015-07-13		수리(인가)
13	2014-03-24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사회적협	김**	35	건설, 과학 및 지역사업형	관리자	2014-08-04		수리(인가)
14	2014-01-20	대한학원 사회적협동조합	김**	90	교육 서비스업·위탁계열·사회서	관리자	2014-02-26		수리(인가)
15	2013-11-07	드림지향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김**	6	건설, 과학 및 종합형	관리자	2014-01-07		수리(인가)
16	2013-10-07	소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김**	7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업형	관리자	2013-11-18		수리(인가)
17	2013-08-01	아파트 생활개선 사회적협동조합	김**	50	협회 및 단체·종합형	관리자	2013-09-26		수리(인가)
18	2013-07-11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구	김**	53	사업시설관리·기타공인전종합	관리자	2013-09-23		수리(인가)
19	2013-07-11	한울사회적협동조합	김**	10	하수, 폐기물·위탁사업형	관리자	2013-09-23		수리(인가)
20	2013-07-10	대경협동조합네트워크사회적협	김**	21	사업시설관리·종합형	관리자	2013-10-11		수리(인가)
21	2013-04-30	사회적협동조합한국협동조합연	김**	59	사업시설관리·종합형	관리자	2013-06-04		수리(인가)
22	2013-03-25	마을플러스 소사이어티(MCS)	김**	11	교육 서비스업·기타공인전종합	관리자	2013-05-10		수리(인가)
23	2013-03-21	사회적협동조합 문익업농협	김**	20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업형	관리자	2013-05-30		수리(인가)
24	2013-03-04	더불어 숲 사회적협동조합	김**	23	사업시설관리·종합형	관리자	2013-04-12		수리(인가)
25	2013-01-24	보통마을공동체협동조합 사회적협	김**	14	제조업	관리자	2013-03-21		수리(인가)

### ❶ 트리 메뉴 : 알림마당과 협동조합 인가(수리)로 구성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자료실
- 협동조합 인가 및 수리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중간관리자 : 담당자 조회, 담당자 등록·수정, 담당자 인수인계

### ❷ 인가현황 통계 : 소속부처 및 본인의 인가처리 통계

### ❸ 검색조건 : 신고일, 진행상태 및 협동조합명으로 검색

### ❹ 기본정보 등록 : 최초 민원접수시 “기본정보 등록” 버튼 클릭 후 기본정보를 등록하여 접수처리

### ❺ 인가처리 현황 리스트 : 소속부처 인가처리 현황 표시

- 리스트에는 처리할 협동조합 리스트가 먼저 표시되고 처리 완료된 협동조합이 표시됨



## ② 기본정보 등록

### ○ 협동조합 설립신청 접수 시 기본정보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COOP system interface. The main window has a menu on the left and a list of cooperative applications on the right. A red box highlights the '기본정보등록' button in the top right of the main window.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기본정보 등록 \*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window, which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기본정보	
신청인	신청인 전화번호
이사장(회장)	이사장 전화번호
설립동의자수	출자금
시도	시군구
설립목적	협동조합 구분

Below the form, there is a section for '신청서 파일 등록' (Application Form File Registration) with columns for No, 선택 (Select), 첨부파일 (Attachment), and 크기 (Size).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추가' (Add), '삭제' (Delete), '다운로드' (Download), '등록 및 진흥원 검토의뢰' (Request for Review by the Promotion Center), and '종료' (End).

### ○ 협동조합 명칭 유사·중복 여부 확인

- 기본정보 등록 시 협동조합명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ex. “세종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세종”으로 검색하여 신청된 협동조합명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 후 등록

### ○ 기본정보 공개

- 협동조합의 기본정보와 처리현황은 홍보포탈과 연계되어 실시간 공개됨
-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시스템에 반영



## ○ 검토결과, 상세정보, 인가처리, 해산처리, 변경 처리

- 기본정보 등록 후 시스템 좌측 트리메뉴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인가(수리)/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클릭 → 리스트에서 처리할 협동조합 더블클릭
- 처리 단계별로 처리할 버튼이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표시

## ○ 상세정보 등록시 유의사항

- 회계연도 : 정관에 기재된 회계연도 입력
  - ※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의 공시일자 확인 등에 필요
- 품목 : 협동조합에서 생산·서비스하는 주요 정보를 키워드 형태로 입력
  - ※ 협동조합 홍보포탈에서 품목으로 조회 시 활용되며, 품목으로 협동조합 검색을 지원하여 개별 협동조합 홍보를 지원하기 위함



## □ 행정시스템 개요

- (민원처리) 협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등의 민원업무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처리
- (관리) 협동조합 처리현황, 상세정보, 변경정보 및 각종 통계자료 관리
- (대국민 서비스) 행정시스템(시도/서울행정시스템)에서 등록·처리된 협동조합의 기본정보는 실시간으로 협동조합 홍보포털과 연계되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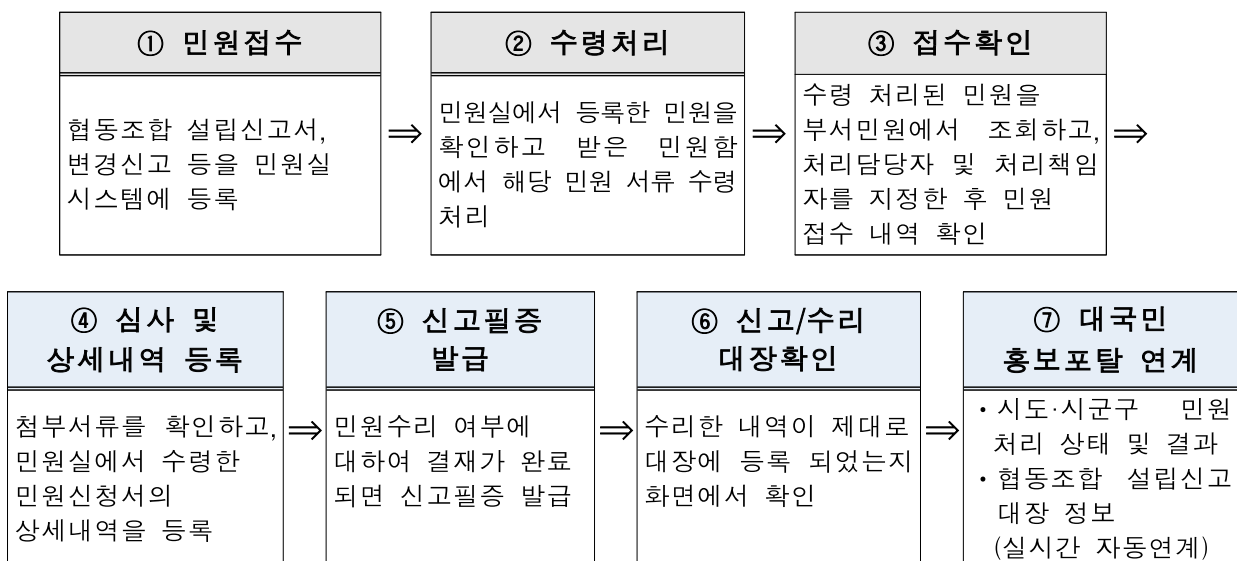
※ 기본정보 : 협동조합명, 신고(신청)/수리(인가)일, 대표 연락처, 이사장(회장)명, 협동조합 종류, 조합유형, 업종, 품목, 주소

## □ 시스템 사용자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정보화부서에 사용자 등록 신청 및 협동조합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부여 후 이용 가능함

\* 자치단체의 경우는 각 기관에서 행정포털시스템으로 사용 중인 시도행정시스템(경제통상) 및 서울행정시스템(지역산업)

## □ 업무처리 프로세스






## □ 행정시스템 이용

### ○ 로그인

- 행정시스템 접속 후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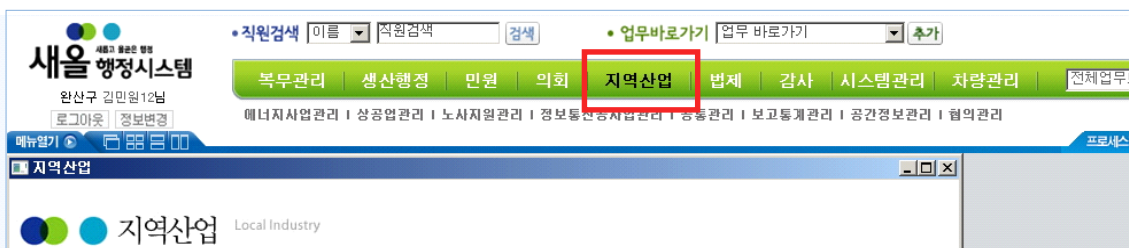
시도 행정시스템	서울 행정시스템
 <div> <p>→ 아이디로그인</p> <p>아이디 <input type="text"/></p> <p>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p> <p><input type="checkbox"/> 아이디저장 <input type="button" value="로그인"/></p> </div> <div> <p>→ 인증서로그인</p> </div>	<p>화면해상도 <input checked="" type="radio"/> 1024 * 768  <input type="radio"/> 1024 * 768 이상</p> <p>아이디 <input type="text"/></p> <p>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p> <p><input type="checkbox"/> 아이디 저장</p> <p><input type="button" value="일반 로그인"/> <input type="button" value="인증서 로그인"/></p>

### ○ 화면구성

- 시도행정시스템



- 서울행정시스템





1

시·도행정시스템 - 시·도

○ 협동조합 설립신고 민원 조회

협동조합 설립신고 민원 목록

1
3 민원신청 등록

청사구분 본청

접수기간 2013-01-01 ~ 2013-10-14

입력검색 접수번호

접수구분 전체

신청인구분 전체

검색

1/1 (총 4건)

수번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사청이	미원진행상태
1	2013-6410000-0000679	2013-11-02	서종협동조합	홍길동	해결
2	2013-6410000-0000676	2013-11-02	열린음악협동조합	홍길동	해결
3	2013-6410000-0000672	2013-11-02	열린음악협동조합	홍길동	해결
4	2013-6410000-0000670	2013-11-02	테스트 소비자협동조합	홍길동	처리중

001100

① 조회조건 입력

-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표시
- 접수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현재일로 자동 입력되며, 버튼을 클릭하여 날짜를 변경 가능

② 조회결과 확인

- 조회결과는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신청인, 민원진행 상태 순으로 표시
- 민원진행상태에서 “처리중”은 진행중인 민원으로 결과등록단계 이전상태인 민원이며, “해결”은 완결을 의미
-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접수번호의 협동조합설립신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

③ 민원신청등록

- 협동조합설립신고 등록화면으로 이동



## ○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록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cooperative registration. It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marked with orange boxes and numbers:

- Section 1 (Step 1):** Contains fields for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자' (Receipt Date), '처리기한' (Processing Deadline), and '신청인구분' (Applicant Category).
- Section 2 (Step 2):** This is the largest section, divided into several sub-sections:
  - 신청(신고)인 정보:** Fields for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성명' (Name), and '휴대폰' (Mobile Phone).
  - 설립신고 등록정보:** Includes '신고일자' (Filing Date), '관리번호' (Management Number), '조합명(연합회명)' (Cooperative Name), '조합건화번호' (Cooperative Building Number), '조합유형' (Cooperative Type), '설립동의자' (Consentors),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Inauguration and Founding General Meeting Date), '소재지 주소' (Location Address), '이사장(성명)' (Chairman Name), '이사장 전화번호' (Chairman Phone Number), '이사장 주소' (Chairman Address), '품목정보' (Product Information), and '주요사업' (Main Business).
  - 조합원현황:** Fields for '생산자' (Producers), '소비자' (Consumers), '직원' (Employees), '자원봉사자' (Volunteers), '후원자' (Sponsors), and '합계' (Total).
  - 직원현황:** Field for '직원현황' (Employee Status).
  - 임원현황:** Fields for '직위' (Position), '성명' (Name), '경력' (Experience), and '직원겸직여부' (Whether兼任).
- Section 3 (Step 3):** Contains buttons for '등록' (Registration) and '목록' (List).

### ① 민원접수번호 조회

- **민원접수검색** 버튼 클릭하여 민원접수 팝업창에서 처리할 민원 선택
- 신청인정보는 민원실에서 입력된 내용으로 자동 표시

### ② 민원신청내역 입력

-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각 항목에 입력
  - ※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임
  - ※ 협동조합명에는 반드시 "협동조합"이 포함 되어야 함
- **중복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협동조합명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
  - ※ 협동조합명이 중복일 경우 등록이 불가
- 회계연도 : 정관에 기재된 회계연도를 기입
  - ※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일자 확인 등에 필요
- 품목은 협동조합에서 생산·서비스하는 주요 정보를 키워드 형태로 입력  
ex. 딸기, 자전거, 공예품, 문화체험, 취약계층, 일자리 등



### ③ 등록

- 필수사항을 모두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설립신고 민원신청 목록으로 이동

### ○ 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 상세조회

③ 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 상세조회

2

1

민원접수번호 2013-6410000-0000670 민원접수일자 2013년 09월 27일

기안문 결과등록 신고종출력 수정 목록

※ 신청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60번지		

※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록정보

협동조합 신고번호	2013-10-23	관리번호	
•신고일자	2013-10-23	•설립구분	전환설립
•조합명(원조합명)	테스트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전화번호	02-1234-5678		
•조합유형	농업, 어업 및 임업	•업종	
•설립동의자	20명	•총 출자금액	2,000,000원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2013-10-07	•회계년도	10월 01일 ~ 09월 30일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번지		
•이사장(성명)	박민원	•주민등록번호	710411-*****
•이사장 전화번호	02-9876-5432		
•이사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60번지 도림빌딩		
•품목정보	생필품, 채소, 과일, 빵류, 음료류 등		
•주요사업	- 소비자 건강지킴이 - 소비자 안심 먹거리제공 - 소비자 만족도 향상		

※ 조합원현황

•생산자	50명	•소비자	20명	•직원	10명
•자활봉사자	9명	•후원자	30명	•합계	119명

※ 직원현황

•직원현황	10명
-------	-----

※ 임원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겸직여부
대리	김민원	2년	아니오
과장	고민원	8년	예

### ① 협동조합설립신고 신청내용 상세조회

- 선택한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상세 내용 표시

### ② 결과처리 및 버튼기능

- **신고종출력** 버튼 클릭하여 해당 민원이 처리된 후 발급 될 신고필증 표기
- **기안문작성** 버튼 클릭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결재기안 진행
- **결과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팝업화면 확인
-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설립신고 수정 화면으로 이동
  - ※ 단, 이미 결과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수정화면을 이동 불가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설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 결과등록 시 해결로 처리된 경우, 자동으로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



## ○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정

1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정
2 저장 목록

민원접수번호	2013-6410000-0000670	민원접수일자	2013년09월27일
--------	----------------------	--------	-------------

※ 신청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60번지		

※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록정보

협동조합 등록번호	2013-10-23	관리번호	
• 신고일자		• 설립구분	전환설립
• 조합명(연합회명)	테스트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전화번호	02 - 1234 - 5678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조합유형	사업자	• 출자금액	2,000,000 원
• 설립동의자	20 명	• 회계년도	10 월 01 일 ~ 09 월 30 일
•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2013-10-07		
•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번지 <span style="float: right;">주소검색</span>		
• 이사장(성명)	박민원	• 주민등록번호	710411 - ●●●●●●
• 이사장 전화번호	02 - 9876 - 5432		
• 이사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8층 (도림동,도림빌딩) <span style="float: right;">주소검색</span>		
• 등록정보	생물품, 채소, 과일, 향류, 음료류 등		
• 주요사업	- 소비자 건강지킴이 - 소비자 안전 먹거리제공 - 소비자 만족도 향상		

※ 조합원현황

• 생산자	50 명	• 소비자	20 명	• 직원	10 명
• 자원봉사자	5 명	• 후원자	30 명	• 합계	115 명

※ 직원현황

• 직원현황	10 명
--------	------

※ 임원현황

• 직위		• 성명	
• 경력		• 직원겸직여부	아니오

행추가
행삭제
수정완료

<input type="checkbox"/>	직위	성명	경력	직원겸직여부
<input type="checkbox"/>	과장	고민원	8년	예
<input type="checkbox"/>	대리	김민원	2년	아니오

저장
목록

### ❶ 협동조합설립신고 내용 수정

- 민원 결과처리 전 등록된 협동조합설립신고민원의 신고사항 수정

### ❷ 버튼 기능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을 저장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설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민원 처리 목록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민원목록

3 민원신청 등록

1

청사구분: 본청

접수기간: 2013-01-01 ~ 2013-10-14

접수구분: 전체

입력검색: 접수번호

신청인구분: 전체

검색


1/1 (총 3건)

2

순번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신청인	민원진행상태
1	2013-6410000-0000689	2013-11-02	세종협동조합	홍길동	해결
2	2013-6410000-0000688	2013-11-02	열린음악협동조합	홍길동	해결
3	2013-6410000-0000681	2013-11-02	열린음악협동조합	홍길동	해결

001100

### ① 조회조건 입력

-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표시
- 접수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현재일로 자동 입력되며,  버튼 선택 시 날짜 변경 가능

### ② 조회결과 확인

- 조회결과는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신청인, 민원진행상태 순서로 표시
- ※ 민원진행상태 구분
  - 처리중 : 진행 중인 민원으로 결과등록 단계 이전 상태
  - 해결 : 완결
-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접수번호의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상세화면으로 이동

### ③ 민원신청등록

-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등록화면으로 이동



## ○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등록

합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등록									
<b>1</b>	<input type="checkbox"/> 접수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b>인원접수정보조회</b> )		<input type="checkbox"/> 접수일자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처리기한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신청인구분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input type="button" value="목록"/>
<b>※ 신청(신고)인 정보</b>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폰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b>2</b>	<b>조합 정관변경신고 등록정보</b>								
<input type="checkbox"/> 신고번호 <input type="text"/> ( <b>신고번호검색</b> )				관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설립신고일 <input type="text"/>				설립구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checkbox"/> 조합명(연합회명) <input type="text"/>				연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checkbox"/> 조합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출자금액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checkbox"/> 조합유형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회계년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checkbox"/> 설립동의자 <input type="text"/> 명				주식금액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checkbox"/>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input type="text"/> 2013-10-14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주소 <input type="text"/>				주요사업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이사장(성명) <input type="text"/>				종목상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이사장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요사업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이사장 주소 <input type="text"/>				주요사업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품목상세 <input type="text"/>				주요사업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주요사업 <input type="text"/>				주요사업		<input type="text"/>			
<b>※ 조합현황</b>									
<input type="checkbox"/> 생산자 <input type="text"/> 0 명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input type="text"/> 0 명		직원		<input type="text"/> 0 명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자 <input type="text"/> 0 명		<input type="checkbox"/> 후원자 <input type="text"/> 0 명		입계		<input type="text"/> 명			
<b>※ 직원현황</b>									
직원현황		<input type="text"/> 0 명							
<b>※ 임원현황</b>									
직위		성명		직권결격여부		<input type="text"/>			
경력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발송하기"/> <input type="button" value="발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수정완료"/>									
<b>3</b>	<b>조합 변경내용</b>								
변경내용		<input type="text"/>							

## ① 민원접수번호 조회

- **민원접수검색** 버튼 클릭하여 민원접수 팝업창에서 처리할 민원 선택
- 신청인정보는 민원실에서 입력된 내용으로 자동 표시

## ② 변경할 협동조합 선택

- **신고번호검색** 버튼 클릭하여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설립신고정보를 화면에 표시

※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임

### ③ 민원신청내역 입력 및 버튼 기능

-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등록** 버튼 클릭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
- **중복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협동조합명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

※ 협동조합명이 중복일 경우 등록이 불가



## ○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상세조회

1
2

기안문
결과등록
신고증출력
수정
목록

민원접수번호	2013-6410000-0000689	민원접수일자	2013년 09월 27일
--------	----------------------	--------	---------------

※ 신청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60번지		

※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등록정보

협동조합 신고번호	2013-6410000-37-5-00001	관리번호	종로구-005
• 설립신고일	2013-10-04	• 설립구분	신규
• 조합명(연합회명)	세종협동조합		
• 조합전화번호	011-1111-1111		
• 조합유형	합업	• 업종	다중이해관계자
• 설립동의자	5명	• 출자금액	55,500,000원
•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2013-10-01	• 회계년도	11월 11일 ~ 11월 11일
• 소재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1번지		
• 이사장(성명)	김세종	• 주민등록번호	111111-*****
• 이사장 전화번호	011-1111-1111		
• 이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77번지		
• 품목정보	농산물, 담근, 말기		
• 주요사업	1. 농산물 유통 2. 말기 재배		

※ 조합원현황

• 생산자	2명	• 소비자	2명	• 직원	0명
• 자원봉사자	1명	• 후원자	2명	• 입계	7명

※ 직원현황

• 직원현황	14명		
--------	-----	--	--

※ 임원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겸직여부
이사장	김세종	세종농산물 이사	아니오
감사	김갑사	유통감사	아니오

※ 협동조합 변경정보

변경내용	매회연도 수정 : 1.1 => 2.1
------	----------------------

### ①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신청내용 상세조회

- 목록화면에서 선택한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상세 내용 확인
-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수정 화면으로 이동  
※ 단, 이미 결과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수정화면을 이동 불가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결과등록 시 해결로 처리된 경우, 자동으로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

### ② 결과처리 및 버튼기능

- 신고증출력 버튼 클릭하여 해당 민원이 처리된 후 발급 될 신고필증 표기
- 기안문작성 버튼 클릭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결재기안 진행
- 결과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팝업화면 확인
-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수정 화면으로 이동  
※ 단, 이미 결과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수정화면을 이동 불가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결과등록 시 해결로 처리된 경우, 자동으로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



## ○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수정

1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수정
2 저장 목록

민원접수번호	2013-6410000-0000689	민원접수일자	2013년 09월 27일
--------	----------------------	--------	---------------

**※ 신청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원동 60번지		

**※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등록정보**

협동조합 신고번호	2013-6410000-37-5-00001	관리번호	종로구-005
• 설립신고일	2013-10-04	• 설립구분	신규
• 조합명(연합회명)	세종협동조합	• 조합유형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조합전화번호	011 - 1111 - 1111	• 설립동의자	5 명
•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2013-10-01	• 출자금액	55,500,000 원
• 소제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1번지		
• 이사장(성명)	김세종	• 회계년도	11 월 11 일 ~ 11 월 11 일
• 이사장 전화번호	011 - 1111 - 1111	• 주민등록번호	111111 - ●●●●●●
• 이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77번지		
• 품목정보	농산물, 당근, 딸기		
• 주요사업	1. 농산물 유통 2. 딸기 재배		

**※ 조합원현황**

• 생산자	2 명	• 소비자	2 명	• 직원	0 명
• 자원봉사자	1 명	• 후원자	2 명	• 합계	7 명

**※ 직원현황**

• 직원현황	14 명
--------	------

**※ 임원현황**

• 직위	• 성명
• 경력	• 직원겸직여부

항추가 항삭제 수정완료

<input type="checkbox"/>	직위	성명	경력	직원겸직여부
<input type="checkbox"/>	감사	김갑사	유통감사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이사장	김세종	세종농산물 이사	아니오

**※ 협동조합 변경정보**

변경내용	매회연도 수정 : 1.1 => 2.1
------	----------------------

### ❶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신청내용 수정

- 민원 결과처리 전 정관변경신고사항 및 변경사유 내용 수정 가능

### ❷ 버튼 기능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 저장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 협동조합 해산신고 민원목록

1 협동조합 해산신고 민원목록
3 민원신청 등록

청사구분	본청	접수구분	전체	
접수기간	2013-01-01 ~ 2013-10-14	신청인구분	전체	
입력검색	접수번호	검색		

1/1 (총 1건)

2 순번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신청인	민원진행상태
1	2013-6410000-0000699	2013-11-02	세종협동조합	홍길동	해결

001100

### ① 조회조건 입력

-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표시
- 접수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현재일로 자동 입력되며,  
 버튼 선택 시 날짜 변경 가능

### ② 조회결과 확인

- 조회결과는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신청인, 민원진행 상태 순서로 표시
- ※ 민원진행상태 구분
  - 처리중 : 진행중인 민원으로 결과등록 단계 이전 상태
  - 해결 : 완결
-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접수번호의 협동조합해산신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

### ③ 민원신청등록

- 협동조합해산신고 등록화면으로 이동



## ○ 협동조합 해산신고 등록

② 협동조합 해산신고 등록

등록 목록

1

접수번호 
 민원접수정보조회

접수일자

처리기한

신청인구분

2
 동조합 해산신고 등록정보

신상(신고)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동조합 해산신고 등록정보

신고번호

설립신고일

관리번호

조합명(연합회명)

설립구분

조합전화번호

운영상태

조합유형

업종

설립동의자

출자금액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회계년도

소재지 주소

주소검색

이사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사장 전화번호

주소검색

이사장 주소

주소검색

품목정보

주요사업

3
 동조합 해산정보

해산사유

### ① 민원접수번호 조회

- 민원접수검색 버튼 클릭하여 민원접수 팝업창에서 처리할 민원 선택
- 신청인정보는 민원실에서 입력된 내용으로 자동 표시

### ② 해산할 협동조합 선택

- 신고번호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설립신고정보를 화면에 표시

### ③ 민원신청내역 입력 및 버튼 기능

- 해산사유를 기재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 해산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503



## ○ 협동조합 해산신고 상세조회

1

협동조합 해산신고 상세조회

2 (기안문) (결과등록) (수정) (목록)

민원접수번호	2013-6410000-000699		민원접수일자	2013년09월27일	
※ 신청인 정보					
주인등록번호	-*****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60번지				
※ 협동조합 해산신고 등록정보					
협동조합 신고번호	2013-6410000-37-5-00001		관리번호	종로구-005	
•설립신고일	2013-10-04		•설립구분	신규	
•조합명(연합회명)	세종협동조합		•운영상태	해산	
•조합전화번호	011-1111-1111		•업종	다중이용관계자	
•조합유형	광업		•총 출자금액	55,500,000원	
•설립동의자	5명		•회계년도	11월 11일 ~ 11월 11일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2013-10-01				
•소재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1번지				
•이사장(성명)	김세종		•주민등록번호	111111-*****	
•이사장 전화번호	011-1111-1111				
•이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77번지				
•품목정보	농산물, 당근, 딸기				
•주요사업	1. 농산물 유통 2. 딸기 재배				
※ 조합원현황					
•생산자	2명		•소비자	2명	
•자원봉사자	1명		•후원자	2명	
•직원			•입계	7명	
※ 직원현황					
•직원현황	14명				
※ 임원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겸직여부		
이사장	김세종	세종농산물 이사	아니오		
감사	김갑사	유통감사	아니오		
※ 협동조합 해산정보					
해산사유	사업자금 부족				

### ① 협동조합 해산신고 내용 상세조회

- 목록화면에서 선택한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상세 내용 확인

### ② 결과처리 및 버튼기능

- **기안문작성** 버튼 클릭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결재기안 진행
- **결과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팝업화면 확인
-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해산신고 수정 화면으로 이동  
※ 단, 이미 결과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수정화면을 이동 불가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해산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결과등록 시 해결로 처리된 경우, 자동으로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



## ○ 협동조합 해산신고 수정

1

협동조합 해산신고 수정

2

저장

목록

민원접수번호		2013-6410000-0000699		민원접수일자		2013년 09월 27일	
※ 신청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원동 60번지					
※ 협동조합 해산신고 등록정보							
협동조합 신고번호		2013-6410000-37-5-00001					
• 설립신고일		[2013-10-04]		관리번호		종로구-005	
• 조합명(연합회명)		[세종협동조합]		• 설립구분		[신규]	
• 조합전화번호		[011] - [1111] - [1111]		• 운영상버		[확산]	
• 조합유형		[소비자]		• 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설립동의자		[5] 명		• 출자금액		[55,500,000] 원	
•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2013-10-01]		• 회계년도		[11]월 [11]일 ~ [11]월 [11]일	
•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원동 11번지] <span style="float: right;">주소검색</span>					
• 이사장(성명)		[김세종]		• 주민등록번호		[111111] - [●●●●●●]	
• 이사장 전화번호		[011] - [1111] - [1111]					
• 이사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원동 77번지] <span style="float: right;">주소검색</span>					
• 품목정보		[농산물, 담근, 말기]					
• 주요사업		1. 농산물 유통 2. 말기 재배					
※ 조합원현황							
• 생산자		[2] 명		• 소비자		[2] 명	
• 자원봉사자		[1] 명		• 후원자		[2] 명	
				• 직원		[0] 명	
				• 합계		[7] 명	
※ 직원현황							
• 직원현황		[14] 명					
※ 임원현황							
• 직위				• 성명			
• 경력				• 직원검적여부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직위	성명	경력	직원검적여부			
<input type="checkbox"/>	감사	김감사	유통감사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이사장	김세종	세종농산물 이사	아니오			
※ 협동조합 해산정보							
해산사유		사업자금 부족					

### ① 협동조합 해산신고 내용 수정

- 민원 결과처리 전 이미 등록된 해산신고 내역을 수정 가능

### ② 버튼 기능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을 저장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해산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 민원접수 및 처리 [메뉴위치 : 전자민원&gt;민원처리&gt;민원신청등록]

**민원신청등록**

접수번호 2012 4650000 접수구분 직접방문 신청인구분 개인(4인 이하)

**민원내역**

민원명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유형없음 **검색** 1 분류번호 1611000005001 **기준표열람** 2

민원요지

등록일시 2012-11-21 16:22 접수일시 2012-11-21 16:22 법정일수 14 법정완료일 2012-12-06 18:00

민원구분 단순민원 민원유형 등록 처리일수 14 처리예정일 2012-12-06 18:00

수납구분 인증기 ☐ 수납구분상태저장 후견인 **검색** **삭제**

신청건수 1 건별수수료 0 수수료합계 0

접수안내사항 ☐ 접수안내사항저장

소관기관 **검색** 최초민원접수번호

등기번호 송금액 잔액반송 ☐ 문자메세지수신여부

**신청(신고)인**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검색을 하지 마시고(정보없음) 주소변경을 통해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540309-2648813 **검색** 성명(대표자) 허점단 바른민원찾기비밀번호 2256 ☐ 공개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비법인등록번호 사업자(비)법인명

주소(도로명)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01번안길 2-4, 202호 (광명동,상우주택샐) **주소변경**

주소(지번)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85호 11동 5반 상우주택샐 202호 **주소초기화**

주소구분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대리인신청 담당자지정 초기화 **등록** 수령처리 제증명발급처리

처리부서 **검색** 담당자 **검색**

**인터넷 접수정보**

- ① 민원등록은 민원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여 등록
- ② 민원상세내용은 민원사무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을 검색하여 확인 (**기준표열람** 클릭)
- ③ 민원을 접수처리할 부서와 담당공무원은 정확히 선택, 입력



○ 받은 민원 확인 [메뉴위치 : 전자민원>민원처리>민원신청접수]

The screenshot shows the '서울행정시스템' (Seoul Administrative System) web portal.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민원신청접수' (Minwon Application Reception). It features a search form with fields for '접수기간' (Application Period), '접수구분' (Application Category), '민원구분' (Minwon Category), and '처리부서' (Processing Department).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1 highlights the '검색'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form is a table of applications with columns for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접수일자' (Application Date), '접수시간' (Application Time), '접수처' (Application Place), '접수인' (Applicant), '민원명' (Minwon Name), '처리구분' (Processing Category), and '처리일자' (Processing Date). The table contains several rows of application data.

- ❶ 수령자에 수령자[김지역]을 입력후  버튼을 선택하여 등록
- ❷ 수령처리가 완료되어야 [김지역]의 부서민원으로 자동통보
- ❸ 상황조회를 선택하면 민원처리상태를 확인



○ 부서민원에서 수령민원 확인 [메뉴위치 : 전자민원>민원함>부서민원]

김포시 새울 행정시스템

서인숙 님 정보변경 Logout

내업무

민원함

- 받은민원
- 부서민원**
- 처리민원
- 민원접수업무
- 수령대기민원
- 업무처리이력

내업무 위생 | 내부행정 | 감사 | 법제 | 여성 | 의회 | 지역산업 |

직원검색 검색 업무바로가기 추가 관리메뉴

--CS업무바로가기-- 전채업무보기

부서민원 도움말

검색조건 민원명 검색 1/2 (총2건)

순번	접수번호	민원명	처리단계	받은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상환조회
1	200740900000001245	식품관련영업신고-일반음식점	접수확인	2007-02-25	2007-02-27	이상훈	Q
2	200740900000001238	식품관련영업신고-휴게음식점	접수확인	2007-02-25	2007-02-27	이상훈	Q
3	200740900000001244	식품관련영업신고-일반음식점	접수확인	2007-02-25	2007-02-27	김민원	Q
4	200740900000001235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할변경-일	접수확인	2007-02-25	2007-02-27	이상훈	Q
5	200740900000001147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	접수확인	2007-02-24	2007-02-27	김시민3	Q
6	20074090000000162	공중위생영업신고	접수확인	2007-01-29	2007-01-19	손용환	Q
7	20074090000000274	식품( )허가사할변경-유통,단란	접수확인	2007-01-24	2007-01-25	나대로	Q
8	20074090000000199	공중위생영업신고	접수확인	2007-01-16	2007-01-22	손용환	Q
9	20074090000000136	영양사선임(해임)신고	접수확인	2007-01-11	2007-01-12	위생김	Q
10	20074090000000107	영양사선임(해임)신고	접수확인	2007-01-10	2007-01-11	고도화영양	Q
11	20074090000000105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제조가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0	김동미	Q
12	20074090000000104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운반업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0	김동미	Q
13	20074090000000095	공중위생영업신고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6	손용환	Q
14	20074090000000096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운반업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0	손용환	Q
15	20074090000000097	식품관련영업신고-음기,포장류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0	손용환	Q
16	20074090000000098	식품관련영업신고-휴게음식점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0	손용환	Q
17	20074090000000099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할변경-휴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0	손용환	Q
18	20074090000000100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할변경-죽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0	손용환	Q
19	20074090000000101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할변경-식	접수확인	2007-01-09	2007-01-10	손용환	Q
20	20074090000000007	공중위생영업신고	접수확인	2007-01-02	2007-01-09	손용환	Q

내업무 받은민원 **부서민원**

김포시 새울 행정시스템

서인숙 님 정보변경 Logout

내업무

민원함

- 받은민원
- 부서민원**
- 처리민원
- 민원접수업무
- 수령대기민원
- 업무처리이력

내업무 위생 | 내부행정 | 감사 | 법제 | 여성 | 의회 | 지역산업 |

직원검색 검색 업무바로가기 추가 관리메뉴

--CS업무바로가기-- 전채업무보기

접수확인 등록

민원접수번호 2007 4090000 001245

민원명 식품관련영업신고 민원유형 신고

민원인 이상훈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2번지 2호 풍년마을건영

전화번호 03-1 핸드폰 010- 접수일자 2007-02-26

처리구분 ☒ 접수확인 ☐ 접수확인취소

접수처리자 정대규 검색 CAFDATA07 시민봉사과

처리담당자 서인숙 검색 sntdata05 위생과

처리책임자 문항용 검색 sntdata07 위생과

등록 돌아가기

내업무 받은민원 **부서민원**



○ 협동조합 등록하기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협동조합신고** 도움말

민원접수번호		2013-4650000-0002476		접수일자		2013-10-04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허점단	
민원등록번호		540309-2648813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85호 11층 5반 상주주택상 202호					

신고번호		관리번호	
운영상태		설립일자	
조합명(연합회명)		설립구분	
조합전화번호		업종구분	
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발기일 및 창립총회 개최일		조합유형	
회계년도			
소재지 (도로명/지번)		주소찾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사소재지(도로명)	본사:
이사장(회장)				

물목정보 추가 수정 삭제

주요사업

**조합원현황**

생산자  명 소비자  명 직원  명 자원봉사자  명 후원자  명 **계** 0 명

**직원현황**

직원현황  명

**임원현황**

직위	성명	경력	겸직여부
임원현황			

추가 삭제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정관 사본	적합	2013-10-0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적합	2013-10-04	
<input type="checkbox"/>	3	사업계획서	--선택--		
<input type="checkbox"/>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선택--		
<input type="checkbox"/>	5	설립동의자 명부	--선택--		

서류심사저장

처리부서  검색

담당자  검색

보완보정 민원결과 처리구분 처리 신고증인쇄 저장

- ①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
- ②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③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
- ④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3 4650000 0002477

검색

민원명

협동조합 설립신고-유형없음

민원유형

민원인

허정단

주소(도로명)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01번안길 2-4, 202호 (광명동,상우주택상)

전화번호

주소(지번)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85호 11동 5반 상우주택상 202호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수수료합계

0

접수자

김민원 12

접수일시

2013-10-04 15:26

처리기한

2013-11-08

단계별결정사항

현지조사일

조사결과

실무종합개최일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결정내역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민원 12

CAF12

처리책임자

김민원 12

CAF12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료일자

2013-10-11 14:38

불가반려시

처리대안

이의신청고지여부

예 아니오

이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등록

닫기

전자결재 - 전자결재기안처리

기안제목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2477 호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

기안본문

1.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2477호 (20131004) 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2.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협동조합 기본법」 제 15조제 1항 또는 제 71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가.협동조합 설립 신고 내역

-이사장(회장)명 : ○○

-조합(연합회)명 : 딸기협동조합(123123)

-소재지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11-3 (중양동1가)

기안문초기화

템플릿저장

템플릿삭제

제목

내용

민원번호 2013465000000000422번 민

민원접수번호 : 2013465000000000422

민원번호 2013465000000000424번 민

민원접수번호 : 2013465000000000424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04

1.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0408호 (20130225) 와 관련된 민

기안첨부

Check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

C:\Temp\W\2013년 10월 11일-a0-협동조합신고필증.pdf

139,915

추가

삭제

수신자ID

CAF12

수신자 ID 안내

\* HANDY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의 사원번호

\* enRiseOFFICE 전자문서 시스템 - 행정정보ID

\* 나눔기술, Hi Express, ACUBE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Log In ID

파일갯수: 1

파일총크기(byte): 139,915 /7Mbytes

전송

종료

- ①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
- ②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
- ③ 전자결재기안처리(수신자ID를 입력 및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 전송)

510



○ **협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접수번호		2013-4650000-0002475		접수일자		2013-10-04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허점단	
민원등록번호		540309-2648813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85호 11통 5반 상우주택상 202호							
신고번호		2013-4650000-37-5-00002		관리번호			
운영상태		운영중		설립일자		2013-10-04	
조합명(연합회명)		우리협동조합		설립구분		생산자	
조합전화번호		1231241		업종구분		농업, 어업 및 임업	
설립동의자 수		123 명		총출자금액		123 원	
발기일 및 결의 회 개최일		2013-10-04		조합유형		신규	
회계년도		01 월 01 일 ~ 03 월 03 일					
소재지 (도로명/지번)		560-0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11-3 (중앙동1가)			
		560-0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1가 1번지 1호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사소재지(도로명)		본사:
		허점단	540309-2648813	1111-1111-1111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01번안길 2-4, 202		경기도 광명시 광
품목정보		C R S C					
주요사업		S C R					
조직원현황							
생산자		12 명	소비자	23 명	직원	12 명	자원봉사자
						후원자	12 명
		82 명					
직임현황							
직임현황		1231 명					
임원현황							
임원현황		직위	성명	경력		겸직여부	
		O O	O O	S C R		Y	
처리부서							
처리부서		완산구		담당자		김민원12	
보안보증		민원결과		처리구분		처리 신고증인쇄 저장	



○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도움말

민원접수번호: 2013-4650000-0002109 접수일자: 2013-09-10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허점단

민원등록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85호 11동 5반 상주주택상 202호

신고번호: \_\_\_\_\_ 조회 관리번호: \_\_\_\_\_

운영상태: \_\_\_\_\_ 설립일자: \_\_\_\_\_

조합명(연합회명): \_\_\_\_\_ 설립구분: \_\_\_\_\_

조합전화번호: \_\_\_\_\_ 업종구분: \_\_\_\_\_

설립동의자 수: \_\_\_\_\_ 총출자금액: \_\_\_\_\_ 일

발기일: \_\_\_\_\_ 조합유형: \_\_\_\_\_

창립총회 개최일: \_\_\_\_\_

회계년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소재지 (도로명/지번): \_\_\_\_\_ 주소찾기

이사장(회장): \_\_\_\_\_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본사소재지(도로명): \_\_\_\_\_ 본사: \_\_\_\_\_

품목정보: \_\_\_\_\_

주요사업: \_\_\_\_\_

**조합원현황**

정신자: \_\_\_\_\_ 명 소배자: \_\_\_\_\_ 명 직원: \_\_\_\_\_ 명 자원봉사자: \_\_\_\_\_ 명 후원자: \_\_\_\_\_ 명 계: 0 명

**직업현황**

직업현황: \_\_\_\_\_ 명

**임원현황**

직위	성명	경력	결직여부

추가 삭제

**변경내용**

변경내용: \_\_\_\_\_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type="checkbox"/>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	--선택--		
<input type="checkbox"/>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선택--		
<input type="checkbox"/>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선택--		
<input type="checkbox"/>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	--선택--		

처리부서: 완산구 검색 담당자: 김민원12 서류심사저장

보완보정 민원결과 처리 처리 신고증인쇄 저장

**협동조합 검색**

조합명(연합회명): \_\_\_\_\_ 이사장(회장): \_\_\_\_\_ 검색

1/3 (총 22건)

순번	신고번호	관리번호	이사장(회장)	운영상태	조합명(연합회명)
1	2014-4640000-37-5-00014	테스트일자:20140528	김협동	운영중	테스트협동조합
2	2013-4650000-37-5-00013	테스트일자:20140528	허점단	운영중	연계테스트협동조합
3	2013-4650000-37-5-00012	테스트자료	허점단	운영중	해커스협동조합
4	2013-4650000-37-5-00011		허점단	운영중	캐논협동조합
5	2013-4650000-37-5-00010		허점단	운영중	프리미엄1협동조합
6	2013-4650000-37-5-00009		허점단	운영중	오르조협동조합
7	2013-4650000-37-5-00008	서울강서-111	허점단	운영중	하교협동조합
8	2013-4650000-37-5-00006		허점단	운영중	오즈협동조합
9	2013-4650000-37-5-00005		허점단	운영중	오즈협동조합
10	2013-4650000-37-5-00004	관리-1231415	김미나	해산	미나협동조합

확인 닫기

- ① 인허가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산하고자하는 대장을 불러온다
- ②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
- ③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④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
- ⑤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3 4650000 0002477

검색

민원명

협동조합 설립신고-유형없음

민원유형

민원인

허정단

주소(도로명)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01번안길 2-4, 202호 (광명동,상우주택상)

전화번호

주소(지번)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85호 11동 5반 상우주택상 202호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수수료합계

0

접수자

김민원 12

접수일시

2013-10-04 15:26

처리기한

2013-11-08

단계별결정사항

현지조사일

조사결과

실무종합개최일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결정내역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민원 12 CAF12

처리책임자

김민원 12 CAF12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료일자

2013-10-11 14:38

불가반려시

처리대안

이익신청고지여부

예 아니오

이익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등록

닫기

전자결재 - 전자결재기안처리

기안제목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2477 호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

기안본문

1.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2477호 (20131004) 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2.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협동조합 기본법」 제 15조제 1항 또는 제 71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가.협동조합 설립 신고 내역

-이사장(회장)명 : ○○

-조합(연합회)명 : 딸기협동조합(123123)

-소재지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11-3 (중양동1가)

기안문초기화

템플릿저장

템플릿삭제

템플릿

제목	내용
민원번호 2013465000000000422번 민	민원접수번호 : 2013465000000000422
민원번호 2013465000000000424번 민	민원접수번호 : 2013465000000000424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04	1.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0408호 (20130225) 와 관련된 민

기안첨부

Check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C:\Temp\2013년 10월 11일 -a0-협동조합신고필증.pdf

139,915

추가

삭제

수신자ID

CAF12

수신자ID안내

\* HANDY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의 사원번호

\* enRiseOFFICE 전자문서 시스템 - 행정정보ID

\* 나눔기술, Hi Express, ACUBE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Log In ID

파일갯수: 1

파일총크기(byte): 139,915 /7Mbytes

전송

종료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
- 전자결재기안처리(수신자ID를 입력 및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 전송)

513



○ **협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도움말

<b>민원접수번호</b> 2013-4650000-0003102		<b>접수일자</b> 2013-11-06	
<b>민원인구분</b> 개인		<b>민원인명</b> 허점단	
<b>민원등록번호</b>	<b>전화번호</b>	<b>휴대폰번호</b>	
<b>주소</b>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85호 11층 5반 상우주택샵 202호			

<b>신고번호</b> 2013-4650000-37-5-00011 <span style="margin-left: 20px;"><a href="#">조회</a></span>	<b>관리번호</b>
<b>운영상태</b> 운영중 ▼	<b>설립일자</b> 2013-12-20 <span style="float:right;"></span>
<b>조합명(연합회명)</b> 캐논협동조합	<b>설립구분</b> 소비자 ▼
<b>조합전화번호</b> 12412412	<b>업종구분</b> 농업, 어업 및 임업 ▼
<b>설립동의자 수</b> 124 명	<b>총출자금액</b> 124 원
<b>발 기 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b> 2013-12-20 <span style="float:right;"></span>	<b>조합유형</b> 신규 ▼
<b>회계년도</b> 01 월 01 일 ~ 12 월 31 일	

<b>소재지 (도로명/지번)</b>	560-0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11-3 (중앙동1가) <span style="float:right;"><a href="#">주소찾기</a></span>
	560-0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1가 1번지 1호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사소재지(도로명)	본사:
허점단	111111-111111	1241-2412-4121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01번안길 2-4, 202	경기도 광명시 광	

[추가](#)
[수정](#)
[삭제](#)

<b>품목정보</b>	ㅅ ㄷ ㅇ ㅎ ㅈ ㄷ
<b>주요사업</b>	ㅅ ㄷ ㅇ ㅎ ㅈ ㄷ

**▶ 조합원현황**

<b>생신자</b> 12 명	<b>소비자</b> 123 명	<b>직원</b> 2 명	<b>자원봉사자</b> 12 명	<b>후원자</b> 3 명	<b>계</b> 152 명
-----------------	------------------	---------------	-------------------	----------------	----------------

**▶ 직원현황**

<b>직원현황</b>	124 명
-------------	-------

**▶ 임원현황**

직위	성명	경력	겸직여부
ㅇㅇ	ㅅ ㄷ ㅇ	ㅅ ㄷ ㅇ	Y

[추가](#)
[삭제](#)

**▶ 변경내용**

<b>변경내용</b>	11111 2222222 33333
-------------	---------------------------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	적합	2014-03-12 <span style="float:right;"></span>	
<input type="checkbox"/>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선택--	<span style="float:right;"></span>	
<input type="checkbox"/>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선택--	<span style="float:right;"></span>	
<input type="checkbox"/>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	--선택--	<span style="float:right;"></span>	

[서류심사저장](#)

<b>처리부서</b> 완산구	<b>검색</b>	<b>담당자</b> 김민원12	<b>검색</b>
-----------------	-----------	------------------	-----------

<b>보완보증</b>	<b>민원결과</b>	<b>처리구분</b> ▼	<b>처리</b>	<b>신고증인쇄</b>	<b>저장</b>
-------------	-------------	---------------	-----------	--------------	-----------



○ 협동조합 해산신고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협동조합해산신고** 도움말

민원접수번호 2014-4650000-0000434		접수일자 2014-03-12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김협동	민원등록번호 111111-111111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신고번호	조회	관리번호	
운영상태		설립일자	
조합명(연합회명)		설립구분	
조합전화번호		업종구분	
설립동의자 수	명	총출자금액	원
발기일 및 정립 총회 개최일		조합유형	
회계년도	월 일 ~ 월 일		
소재지 (도로명/지번)	주소찾기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사소재지(도로명)	본사지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div>					
<input type="button" value="추가"/>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품목정보**

주요사업

**조합원현황**

생신자 명 소비자 명 직원 명 자원봉사자 명 후원자 명 계 0 명

**직원현황**

직원현황 명

**임원현황**

직위	성명	경력	겸직여부

**해산현황**

해산일자

해산사유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type="checkbox"/>	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선택--		

처리부서 완산구  담당자 김민원12

**협동조합 검색**

조합명(연합회명) | 이사장(회장) |

1/3 (총22건)

순번	신고번호	관리번호	이사장(회장)	운영상태	조합명(연합회명)
1	2014-4640000-37-5-00014	테스트일자:20140528	김협동	운영중	테스트협동조합
2	2013-4650000-37-5-00013	테스트일자:20140528	허정단	운영중	연계테스트협동조합
3	2013-4650000-37-5-00012	테스트자료	허정단	운영중	해커스협동조합
4	2013-4650000-37-5-00011		허정단	운영중	캐논협동조합
5	2013-4650000-37-5-00010		허정단	운영중	프리미엄1협동조합
6	2013-4650000-37-5-00009		허정단	운영중	오트조협동조합
7	2013-4650000-37-5-00008	서울강서-111	허정단	운영중	하교협동조합
8	2013-4650000-37-5-00006		허정단	운영중	오즈협동조합
9	2013-4650000-37-5-00005		허정단	운영중	오즈협동조합
10	2013-4650000-37-5-00004	관리-1231415	김미나	해산	미나협동조합

- ① 인허가번호  버튼을 클릭하여 해산하고자하는 대장을 불러온다
- ②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
- ③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④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
- ⑤ 민원을 처리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3 4650000 0002477

검색

민원명

협동조합 설립신고-유형없음

민원유형

민원인

허정단

주소(도로명)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01번안길 2-4, 202호 (광명동,상우주택)

전화번호

주소(지번)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85호 11동 5반 상우주택 202호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수수료합계

0

접수자

김민원 12

접수일시

2013-10-04 15:26

처리기한

2013-11-08

단계별결정사항

현지조사일

조사결과

실무종합개최일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결정내역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민원 12

CAF12

처리책임자

김민원 12

CAF12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료일자

2013-10-11 14:38

불가반려시

처리대안

이의신청고지여부

예 아니오

이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등록

닫기

전자결재 - 전자결재기안처리

기안제목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2477 호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

기안본문

1.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2477호 (20131004) 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2.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협동조합 기본법」 제 15조제 1항 또는 제 71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가.협동조합 설립 신고 내역

-이사장(회장)명 : ○○

-조합(연합회)명 : 딸기협동조합(123123)

-소재지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11-3 (중양동1가)

기안문초기화

템플릿저장

템플릿삭제

제목

내용

민원번호 2013465000000000422번 민

민원접수번호 : 2013465000000000422

민원번호 2013465000000000424번 민

민원접수번호 : 2013465000000000424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04

1. 민원접수번호 제 2013465000000000408호 (20130225) 와 관련된 민

기안첨부

Check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

C:\Temp\2013년 10월 11일-a0-협동조합신고필증.pdf

139,915

추가

삭제

수신자ID

CAF12

수신자 ID 안내

\* HANDY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의 사원번호

\* enRiseOFFICE 전자문서 시스템 - 행정정보ID

\* 나눔기술, Hi Express, ACUBE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Log In ID

파일갯수: 1

파일총크기(byte): 139,915 /7Mbytes

전송

종료

- ①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
- ②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
- ③ 전자결재기안처리(수신자ID를 입력 및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 전송)

516



○ 협동조합등록 대장 [메뉴위치 : 노사지원관리>협동조합관리]

**협동조합 대장목록**

1. 검색 조건 입력

2. 검색

3. 초기자료등록

순번	신고번호	관리번호	이사장(회장)	운영상태	조합명(연합회명)	소재지주소(지)
1	2013-4650000-37-5-00014	2013-서울강서-00001	허점단	해산	기획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	2013-4650000-37-5-00006	2013-서울강서-127	이종락	해산	시보레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3	2013-4650000-37-5-00004	2013-서울강서-124	잭스	해산	삼성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4	2013-4650000-37-5-00003	2013-서울강서-132	김교교님	운영중	교교협동조합	
5	2013-4650000-37-5-00002	2013-서울강서-131	허점단	운영중	우리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6	2013-4650000-37-5-00001	2013-서울강서-123	허점단	운영중	마음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7	2013-4640000-37-5-00002	2013-서울강서-129	ㅇㅇ	운영중	사과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8	2013-4640000-37-5-00001	2013-서울강서-130	ㅇㅇ	운영중	대라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❶ 검색 조건 입력

- 협동조합대장 검색을 위해서 검색 조건을 입력

❷ **검색** : 검색 조건에 맞는 결과를 조회

❸ **초기자료등록** : 협동조합대장 초기자료를 등록



○ 협동조합대장 상세 화면 [메뉴위치 : 노사지원관리>협동조합관리]

→ 협동조합 대장 도움말

▶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록정보

신고번호	2013 4650000 37 5 00014	관리번호	2013-서울강서-00001							
운영상태	해산	설립일자	2013-10-18							
조합명(연합회명)	기획협동조합	설립구분	생산자							
조합전화번호	010-2222-1111	업종구분	도매 및 소매업							
설립동일자 수	12 명	총출자금액	2,131,232 원							
발기일 및 정립 총회 개최일	2013-10-10	조합유형	신규							
회계년도	01 월 01 일 ~ 03 월 31 일									
소재지 (도로명/지번)	560-0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11-3 (중양동1가) 560-0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양동1가 1번지 1호	주소검색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사소재지(도로명) 본사: 허점단 540309-2648813 1231-2312-3121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01번안길 2-4, 202 경기도 광명시 광									
품목정보	품목정보변경	추가	수정							
주요사업	주요사업변경	삭제								
▶ 조합원현황	생산자 12 명 소비자 12 명 직원 1333 명 자원 봉사자 123 명 후원자 23 명 계 1,503 명									
▶ 직원현황	직원현황 12312 명									
▶ 임원현황	임원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위</th> <th>성명</th> <th>경력</th> <th>겸직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대리</td> <td>홍길동</td> <td>경력없음</td> <td>Y</td> </tr> </tbody> </table>	직위	성명	경력	겸직여부	대리	홍길동	경력없음	Y	
직위	성명	경력	겸직여부							
대리	홍길동	경력없음	Y							
▶ 협동조합 변경정보	변경내용 품목정보,주요사업 변경	추가	삭제							
▶ 협동조합 해산정보	해산일자 2013-10-10	해산사유								

4 5 6 7 8  
 추가 신고증인쇄 목록 삭제 저장

- ① 추가 : 이사장(회장) 정보 추가 입력
- ② 수정 : 이사장(회장) 정보 수정
- ③ 삭제 : 이사장(회장) 정보 삭제
- ④ 추가 : 협동조합 상세 화면 전체 클리어
- ⑤ 신고증인쇄 : 해당 협동조합대장 신고증 인쇄
- ⑥ 목록 : 협동조합대장 목록 화면으로 이동
- ⑦ 삭제 : 협동조합대장 내역 삭제
- ⑧ 저장 : 협동조합대장 내역 저장

※ 푸른색 글씨는 필수 입력 항목



### 3.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 가 협동조합 관련 정보 공유

- 협동조합 홍보포탈(www.coop.go.kr)을 통해 협동조합 관련 제도소개, 설립·운영 절차, 설립현황, 사이버교육, 교육일정, 협동조합 상품정보, 알림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나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주요통계

##### □ 설립현황

-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처리된 협동조합 신고·수리(인가) 현황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 협동조합 명칭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조합명칭, 품목, 종류, 지역, 유형, 소관부처, 업종, 신고·수리 상태)

**협동조합 현황**

1 page / 735 page

협동조합명

전체 협동조합 | 전체 지역 | 지역을 선택하세요 | 전체 소관부처 | 전체 업종 | 전체 유형 | 전체 신고·수리

번호	협동조합명	소재지	수리(인가)일
7346	경기도전세버스협동조합	경기도	2015.06.29
7345	시화문화마을 협동조합	광주	2015.06.29
7344	강릉시농촌체험마을협동조합	강원도	2015.06.29
7343	한물레협동조합	강원도	2015.06.29
7342	한마을협동조합	강원도	2015.06.29
7341	동해88협동조합	강원도	2015.06.29
7340	한소리협동조합	충청북도	2015.06.27
7339	사회적협동조합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	전라북도	2015.06.26
7338	행복가족 협동조합	서울	2015.06.26
7337	어쩌다 집 협동조합	서울	2015.0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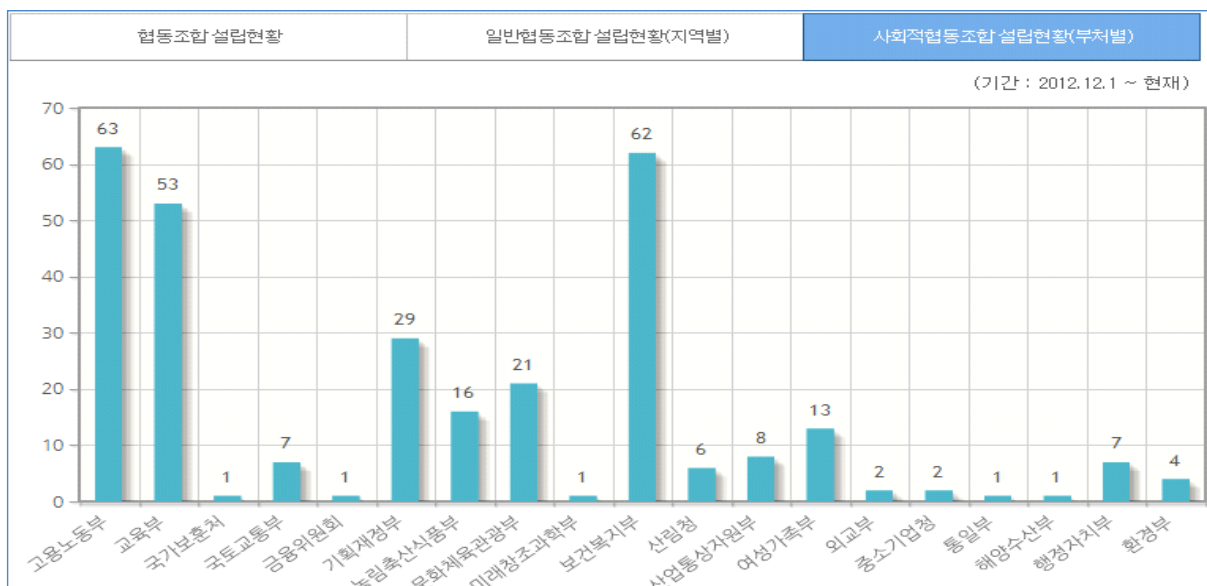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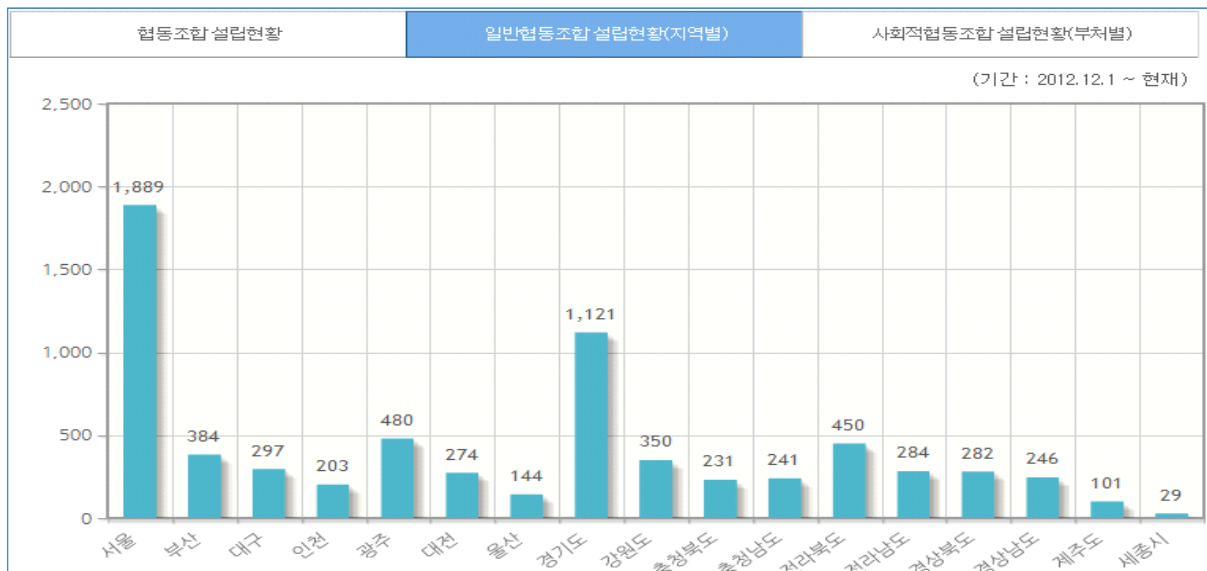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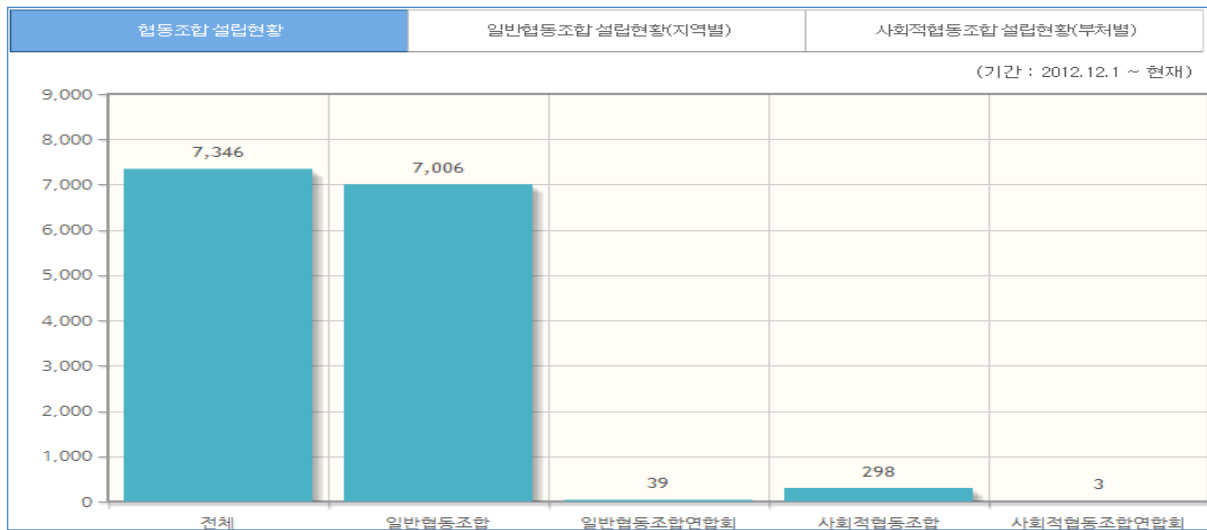
설립현황 엑셀다운로드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



## □ 주요통계

- 협동조합 설립현황을 협동조합의 종류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통계 제공





-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홍보 및 판로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14.7월)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 협동조합 상품몰 메인화면 >

coop 협동조합 상품몰

사이트맵 협동조합 정보포털 바로가기

상품검색

협동조합상품몰 | 상품을 소개 | 공공구매우선대상 협동조합 | Coop Shopping Mall

식품 | 생활용품 | 사무/기업용품 | 교육/문화/취미 | 의료/복지 | 용역/위탁 | 기타

카테고리 전체보기

coop mall

coop mall에서  
마음의 선물을 담아 주세요.

공지사항 | FAQ

· 상품몰 공지사항테스트 2014-11-10  
· 상품몰 테스트 공지사항 2014-11-07

최신등록상품 협동조합 상품몰에 최근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관엽식물 100,000원  
일예유통협동조합나눔미

서양판란 150,000원  
일예유통협동조합나눔미

이동식화장실 HSP-3 별도문의  
한국이동식화장실협동조합

이동식화장실(HK-A-6) 별도문의  
한국이동식화장실제조업협동조합

이동식화장실(HCP-A-6) 별도문의  
한국이동식화장실제조업협동조합

식품 | 생활용품 | 사무/기업용품 | 교육/문화/예술 | 의료/복지 | 용역/위탁 | 기타

계곡가든간장게장1kg(압꽃게) 66,000원  
(유)네고협시푸드

볶은 커피 20,000원  
이미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

혼합미남원추어탕 6,500원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반찬,도시락배달 별도문의  
과천상안협동조합

원두 20,000원  
이미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



□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은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설립절차, 회계·세무, 성공사례 등 총 20개 과정과 해외 교육자료 5개 과정으로 구성

### < 사이버교육 시스템 메인 화면 >

협동조합 홍보포털 바로가기

**Coop Academy**

동영상교육	교육일정	홍보동영상
1.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6. 협동조합 설립절차	11. 협동조합의 인사노무
2.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7. 설립 이후 행정 절차	12. 협동조합의 자본
3.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방향	8.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	13. 협동조합의 회계
4. 협동조합의 특징	9. 협동조합의 기관	14. 협동조합의 세무
5. 협동조합의 유형	10. 임원의 책임과 권한	15. 협동조합의 법인세
		16. 협동조합의 마케팅
		17. 협동조합의 사회적 의무
		18. 협동조합간의 협동
		19. 성공사례 / 20. 실패사례
		해외교육 동영상

**협동조합 교육**  
COOP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현장감 넘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교육일정** 더보기

교육일정	테스트	경기	2014.11.11 06:09
· 교육일정 테스트	경기	2014.11.11 06:09	
· test	경북	2014.11.03 03:05	
· asdf	경남	2014.11.10 05:13	
· 1111	강원	2014.11.11~2014.11.25	
· 마을공동체 선진화 사례 및 실태...	광주	2014.10.08 05:11	

**홍보동영상** 더보기

홍보동영상	2014-11-04
· 협동조합 홍보동영상	2014-11-04
· 제1회 협동조합 주간행사 홍보영상	2013-11-29
· 차관님 협동조합 현장방문 - 도시락 배달	2013-11-29
· 협동조합기본법 홍보 동영상 2	2013-11-29
· 협동조합기본법 홍보 동영상 1	2013-11-29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저작권정책 | 사이트맵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pyright© 201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 Reserved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 블로그

관련사이트 | 이동



- 협동조합 관련 주요정보를 모바일기기 전용화면으로 제공
  - 모바일 홍보포탈 주소 : <http://m.coop.go.kr>

< 모바일 홍보포탈 주요화면 >









## X. 부록

<b>1. 협동조합 주요 참고자료 .....</b>	<b>527</b>
<b>2. 협동조합 법령 .....</b>	<b>548</b>
가. 협동조합 기본법 .....	548
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572
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	584
<b>3.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b>	<b>641</b>
가.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641
나. 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	660
다.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678
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	699







## **[협동조합 주요 참고자료]**

<b>1. 협동조합정책의 의의</b>	<b>528</b>
<b>2. 협동조합기본법 연혁</b>	<b>537</b>
<b>3. 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b>	<b>538</b>
<b>4.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b>	<b>540</b>
<b>5. 15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b>	<b>542</b>
<b>6.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현황</b>	<b>543</b>



① (정책목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협동조합 설립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 농·수협 등 기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8개)과는 달리 5인 이상이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서 법인 설립가능(일반법-특별법 관계)

○ (일자리 창출)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 '1인1표' 민주적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일하는 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자주·자립·자치'의 복지 실현

○ (경제 활성화) 은퇴자들의 재능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을 제고

\* 기획재정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 협력모델의 모범사례로 안정적 취약계층 고용도 기대

② (정책방향)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에 입각한 간접지원 실시

○ (예산) '16년 협동조합정책활성화 사업에 3,757백만원

③ (기대 효과) 경제주체별·부문별 다양한 효과 기대

구 분		효 과
주체별	소비자	원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생산자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제품 개발 → 안정적·높은 수익
부문별	경제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유통구조 개선 → 물가안정
	사회	□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일을 통한 복지 실현 □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 복지 전달체계 개선
운영과정		민주적 운영(1인 1표)으로 주인의식 제고 등



- (개념)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12월)되기 이전에 이미 개별법에 근거한 8개 협동조합\*이 존재 (일반법-특별법 관계)
    - \*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 \*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설립 분야 및 규모에 제한이 있어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던 단체 다수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쏠 분야 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종류)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부여되며, 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사 업	▪ 금융·보험업 금지 外 제한 분야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다만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지원제도 현황	▪ 일반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재정지원 기회 부여 ▪ 특례보증을 상시보증으로 전환	▪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입 ▪ 법인세 일부 감면

\* 공익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체 사업 중 공익사업 사업비, 서비스대상 인원·시간·횟수 등으로 40% 비율 판단



□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 민주적 운영 ·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영리회사보다 최선의 가격 (best price)으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조합원(member)은 이용자(user)인 동시에 소유자(owner)이며, 투자이익이 아닌 사업이용의 편익을 위해 협동조합에 투자

※ 협동조합의 정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
- 미국 농무부(USDA)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 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조합원과의 관계에 따른 협동조합의 구분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소비자(예, 소비자 생협)
- 생산자 협동조합 : 조합원=공급자(예, 농협, 수협)
- 직원 협동조합 : 조합원 = 직원(예, 청소, 대리운전 등)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소비자, 생산자, 직원 협동조합 등의 역할을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수행(예, 생협 + 직접생산)

※ 개별법상 협동조합 현황

- 생산자 조합
  - 1차 산업 : 농협 · 수협(농식품부), 엽연초조합(기재부), 산림조합(산림청)
  - 2차 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청)
  - 3차 산업 :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새마을금고(행안부)
- 소비자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 1. 협동조합 종류별 설립현황

구 분	'14년말	'15년말	'16.1~12월말	누 계
일반협동조합	5,803	8,117	1,862	9,979
사회적협동조합	229	405	199	604
협동조합연합회	33	48	9	57
전 체	6,065	8,570	2,070	10,640

## 2. 일반협동조합 설립현황

### ① 지역별

소관 지자체	~'15년말		'16.1~12월말		누 계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서울특별시	2,142	26.4	380	20.4	2,522	25.3
부산광역시	446	5.5	83	4.5	529	5.3
대구광역시	345	4.3	101	5.4	446	4.5
인천광역시	229	2.8	41	2.2	270	2.7
광주광역시	525	6.5	65	3.5	590	5.9
대전광역시	323	4.0	82	4.4	405	4.1
울산광역시	158	1.9	25	1.3	183	1.8
경기도	1,326	16.3	344	18.5	1,670	16.7
강원도	408	5.0	123	6.6	531	5.3
충청북도	271	3.3	64	3.4	335	3.4
충청남도	288	3.5	68	3.7	356	3.6
전라북도	533	6.6	161	8.6	694	7.0
전라남도	340	4.2	106	5.7	446	4.5
경상북도	337	4.2	110	5.9	447	4.5
경상남도	293	3.6	60	3.2	353	3.5
제주특별자치도	123	1.5	38	2.0	161	1.6
세종특별자치시	30	0.4	11	0.6	41	0.4
총 계	8,117	100.0	1,862	100.0	9,979	100.0

\*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에서 설립 신고필증 발급



## 2 업종별

업종별	'15년말까지		'16.1~12월말		누계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농업, 어업, 임업	891	11.0	177	9.5	1,068	10.7
광업	4	0.0	2	0.1	6	0.1
제조업	685	8.4	215	11.5	900	9.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54	0.7	11	0.6	65	0.7
하수, 폐기물처리, 재생, 환경복원업	99	1.2	22	1.2	121	1.2
건설업	232	2.9	39	2.1	271	2.7
도매 및 소매업	2,085	25.7	398	21.4	2,483	24.9
운수업	226	2.8	40	2.1	266	2.7
숙박 및 음식점업	286	3.5	76	4.1	362	3.6
출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330	4.1	77	4.1	407	4.1
금융 및 보험업	0	0.0	0	0.0		0.0
부동산 및 임대업	87	1.1	22	1.2	109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71	3.3	65	3.5	336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237	2.9	58	3.1	295	3.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8	0.1	3	0.2	11	0.1
교육 서비스업	1,004	12.4	252	13.5	1,256	1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	3.8	71	3.8	383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8	8.2	205	11.0	873	8.7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94	7.3	123	6.6	717	7.2
기타 미분류 자가소비생산활동	42	0.5	4	0.2	46	0.5
국제 및 외국기관	2	0.0	2	0.1	4	0.0
총계	8,117	100.0	1,862	100.0	9,979	100.0



###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인가부처별)

소관 부처	~'15년		'16.1~12월 말		누 계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기획재정부	33	8.1	14	7.0	47	7.8
교육부	74	18.3	69	34.7	143	23.7
미래창조과학부	2	0.5	0	0.0	2	0.3
외교부	2	0.5	1	0.5	3	0.5
행정자치부	7	1.7	5	2.5	12	2.0
문화체육관광부	32	7.9	8	4.0	40	6.6
농림축산식품부	21	5.2	8	4.0	29	4.8
산업통상자원부	9	2.2	2	1.0	11	1.8
보건복지부	108	26.7	34	17.1	142	23.5
환경부	6	1.5	4	2.0	10	1.7
고용노동부	73	18.0	39	19.6	112	18.5
여성가족부	14	3.5	4	2.0	18	3.0
국토교통부	7	1.7	3	1.5	10	1.7
해양수산부	3	0.7	1	0.5	4	0.7
통일부	1	0.2	0	0.0	1	0.2
국민안전처	0	0.0	1	0.5	1	0.2
국가보훈처	1	0.2	0	0.0	1	0.2
금융위원회	2	0.5	0	0.0	2	0.3
국민권익위원회	0	0.0	1	0.5	1	0.2
중소기업청	2	0.5	1	0.5	3	0.5
산림청	6	1.5	2	1.0	8	1.3
문화재청	0	0.0	1	0.5	1	0.2
기상청	1	0.2	0	0.0	1	0.2
통계청	0	0.0	1	0.5	1	0.2
법무부	1	0.2	0	0.0	1	0.2
총 계	405	100.0	199	100.0	604	100.0

### 4. 협동조합연합회 설립현황

구 분	'14년말	'15년 말	'16.1~12월말	누 계	
					비중
일반협동조합	31	44	8	52	92.2
사회적협동조합	2	4	1	5	8.8
전 체	33	48	9	57	100.0



- **[실태조사 결과 분석]** 협동조합은 ① 시장 진입, ② 물적 자본, ③ 인적 자본, ④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애로요인 존재

- 법 시행 초기이므로 사업 가동 미진, 매출실적 저조, 자금 조달 및 인력 유치에 한계, 연대·협력 여건 등이 열악함

☞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년) 수립으로 협동조합 자립기반 구축

- **[기본계획 방향]**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인력 양성, 연대·협력의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을 도모\*

\* 추진기제(메커니즘)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이 원칙

- **[4대 핵심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제]**

- (시장진입) 기존 법인만을 위한 법·제도로 발생한 차별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 일반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포함, 법적 규제 제거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확대

- (자금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

\* 소상공인협업화사업, 사회적기업인증 등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 홍보 강화

\*\*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 유도, 협동조합 특례보증 확대 등

- (인력양성)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역량 강화

\*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날 행사 통합 운영 등

- (연대·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온라인 거점을 마련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협동조합이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역할 수행
  - \* (설립 현황) '13년 3,223개→'14년 6,065개→'15년 8,570개→'16.12월 10,640개
  - 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협동조합 자생력은 높지 않은 상황\*
    - \* (운영률)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55.5% 수준('15년 실태조사)
  - ☞ 제2차 기본계획('17~'19년)을 통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는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기본계획 방향]** 자생력 제고,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의 4대 핵심전략 11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 (목표) 협동조합의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을 달성
- **[4대 핵심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제]**
  - (자생력 제고) 협동조합의 판로\*와 내·외부 자금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관리를 통해 내부역량 강화
    - \* 민간·공공 유통매장 입점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 \*\* (외부 투·융자) 전용자금 확대, 보증 활성화,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 등 (내부 자금조달) 잉여금 적립제도 도입, 연합회 공제사업 활성화 등
  -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 및 창업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제고
    -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직원협동조합 모델 등
  - (네트워크 강화) 부처별 정책·법령 연계\*, 민·관 업무협약체 신설,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 전문자격업종 참여가능토록 제도 개선
  - (인식개선) 대국민 홍보 강화, 미래세대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저변 확대



- (설립수요) 향후 5년간('13년~'17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 설립 예상(보건사회연구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최소(개)	2,704	2,565	1,943	704	123	<b>8,039</b>
최대(개)	3,386	3,351	2,563	955	165	<b>10,421</b>

- (고용창출 효과)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 분	취업자		피고용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인원(명)	37,799	49,195	28,733	36,930

-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일자리 확대·복지비용 절감 등 시장과 정부의 역할 보완

- (경제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 경기 안정화에 기여

\* 협동조합 활성화시 소비자물가지수 하락효과 : 3.14%p (KDI, '12.11월)

\* 한살림 등 소비자생협의 유기농산물은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교섭력 증대 및 지역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의 양극화 완화

- (사회적 효과) 취약계층 고용 및 처우개선(임금상승 등)을 통해 복지제도 보완, 신뢰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

\*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 가능

- '사회서비스'의 기존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보장기본법)를 확대(범죄예방·상담치료 등 추가)하여 공공서비스 보완

-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의식을 높임



## □ 법 제 · 개정 경과

- 2011.12.29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2012. 1.26 협동조합기본법 공포('12.12.1시행)
- 2013.12.26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4.7.22시행)
- 2014.12.3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5.7.1시행)
- 2015.12.3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6.3.2시행)

## □ 「협동조합기본법」 최근 개정안 주요내용

- 협동조합연합회의 대표성있는 명칭사용 제한적 허용(제3조)
-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제61조, 제106조)
-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 조정(회계연도 종료 후 1→3개월)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105조의2, 제108조의2)
  - 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 연장 및 제재완화(제106조)
  - 등기시한을 연장(21→60일)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
- 사업자(비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한 1년 연장(부칙)



- ◇ '16년 중간지원기관의 업무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17년 기관선정시 반영
- ◇ '16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2개소)은 다년(3년) 지원기관 지정

#### □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의 기본틀 유지

-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민간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계약법령(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여 공고부터 최종계약까지 진행
-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과의 통합 선정·운영

#### □ 전담인력은 평균 3명으로 하되, 업무량에 따라 기관별 차등 배정

- 지역내 협동조합 수, 상담·컨설팅·교육실적을 근거로 업무량 산출

#### □ 협동조합 설립 둔화 추세를 감안 중간지원기관의 업무중심을 협동조합 설립상담에서 운영지원(경영컨설팅 등)으로 전환

#### □ 모니터링 실시 및 객관적 평가 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 지원기관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외부전문가 중심 평가위원회를 통해 '16년 지원기관의 전문성, 업무실적,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17년 기관 선정시 결과 반영
- '16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다년(3년) 기관으로 지정하고, 하위 기관은 별도 관리감독\* 등 패널티 부여로 서비스 질 제고 유도

\* 격주 업무보고 및 분기별 현장 점검 등 사업 추진실적 집중 관리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1800-2012
	(사)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서울지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29 제 1동 1층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29 제1동 1층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2층 사람과세상	
인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대로 51번길 26 성원빌딩 5층	
강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사)강원도지역 자활센터협회 강원도광역자활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05번길 7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92 3층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7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경북	(사)지역과 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1 6층 604호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2, 210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 3길 2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57 5층	
	(사)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3길 14	
	(사)일하는사람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82번길 16	
대전 세종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9130	

\* 통합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에서 가까운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동연결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의 2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4.12월)으로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령 → 법으로 격상

□ (심의사항) 다음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 \* (주요 정책사항) ① 「협동조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②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 ④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⑤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성) 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시행령 제3조의2)

- (정부위원) 협동조합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위원장 포함 11명)

-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중소기업청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제1호)

- (민간위원) 연구소, 관련 학과 대학교수 등 학계, 현장전문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9명)

- \*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법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 (운영실적) '13.1월 심의회 구성 후, 현재까지 총 15회 개최

- 분기별 1회 개최(대면 10회, 서면 5회)



- 협동조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를 위해  
 '13.1월 심의회를 구성, '17.1월 현재 총 15회 개최

구 분	안 건 명
제1차('13.1.24)	① '13년 협동조합 정책추진 방안 ② 협동조합정책심의회위원회 운영방안
제2차('13.5.15)	①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② 협동조합 주간행사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 ③ 협동조합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제3차('13.10.2)	①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②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제4차(서면)	① 협동조합 기본계획(안) ('13~'16년)
제5차('13.12.24)	① 협동조합 기본계획(안) ('13~'16년) ②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6차('14.4.11)	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②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제도 개선방안
제7차(서면)	①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대책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활성화 방안
제8차(서면)	① 2015년도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선정 계획(안) ②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제9차('14.12.29)	①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본계획(심의) ② 2015년 협동조합 교육계획(심의)
제10차('15.4.14)	①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②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모델 개발 추진계획(안)
제11차('14.10.20)	① 협동조합 보증제도 개선방안(심의) ② 협동조합 경영공시 개선방안(심의)
제12차(서면)	① 협동조합간 협력방안(심의) ②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3차('16.4.15)	①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방향(심의) ②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심의) ③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보고) ④ '16년도 협동조합 교육계획안
제14차(서면)	① 협동조합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고시 제정안 ② 사회적협동조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및 개선방안 ③ 2015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결과 보고 ④ 협동조합 판로 확대 개선 방안
제15차('17.1.10)	①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안)(심의) ②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심의) ③ 2017년 협동조합 교육계획안(서면보고)



## 1. 조사개요

- '14년말 기준으로 신고·인가된 6,235개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구성원·고용·재무 현황에 대해 조사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6항에 따라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 2. 조사결과

- (사업운영률)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의 55.5%로 13년 1차조사(54.4%)에 비해 소폭 상승

- (조합원수) 2,243개 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는 106,020명으로 1차 조사(43,842명)에 비해 약 2.4배 증가

○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는 47.3명으로 1차조사(58.7명)에 비해 감소

- (고용현황) 평균 종사자수는 13.2명으로 1차조사(7.7명)에 비해 증가\*

\* 임원 +0.2명, 직원 +0.9명, 자원봉사자 +4.4명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보수(급여 또는 배당)를 받는 취업자수는 조합당 평균 4.3명으로 1차조사(5.8명)에 비해 1.5명 감소

\* 직원 2.2명, 임원 1.9명, 자원봉사자 0.2명

○ 월 평균 급여는 정규직 143만원, 비정규직 98만원,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율은 81.9%

- (재무현황) 평균 자산은 5,744만원, 출자금은 4,069만원이며, 부채는 1,675만원으로 1차 조사에 비해 규모가 증가

○ 조합당 평균 매출액 2억 1,402만원, 당기순이익은 1,923만원

- (정책수요) 판로지원(40.7%), 금융인프라 확보(17.7%),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16.7%), 연대촉진(10.0%) 順

○ 교육·컨설팅 등 정부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은 48.1%

- (지역사회 기여) 전체의 49.4%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했으며, 2014년 1년간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0억 7,795만원



## □ 사회적경제조직 조직 총계(A+B)

(단위 : 개, 명)

연도	'14년		'15년	
구분	조직수	종사자수	조직수	종사자수
일반사회적경제조직	31,482	197,205	18,102	99,064
개별법상 협동조합	4,835	149,759	5,234	156,717
총계	36,317	346,964	23,336	255,781

## ○ 일반 사회적경제조직(A)

(단위 : 개, 명)

연도	14년		15년	
구분	조직수	종사자수	조직수	종사자수
(예비)사회적기업(고용부)	2,475 <sup>1)</sup>	23,919	2,914 <sup>2)</sup>	33,527
협동조합(기재부)	6,251	36,064 <sup>3)</sup>	8,570	36,645 <sup>4)</sup>
마을기업(행자부)	1,119	10,117	1,342	11,513
자활기업(복지부)	1,344	8,580	1,339	7,511
영농조합법인(농식품부)	11,599	62,599	조사중	조사중
농업회사법인(농식품부)	4,883	39,697	조사중	조사중
영어조합법인(해수부)	1,004	6,476	조사중	조사중
어업회사법인(해수부)	99	658	조사중	조사중
장애인표준사업장 (복지부)	169	4,299	213	5,082
사회복지법인(복지부)	1,739	자료 없음	2,900	자료 없음
자활센터(복지부)	261	1,638	264	1,6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부)	539	3,158	560	3,133
계 <sup>5)</sup>	31,482	197,205	18,102	99,064

- 1) 지자체장 및 부처가 지정하고 있는 1,463개의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2) 지자체장 및 부처가 지정하고 있는 1,408개의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3) 6,218개(연합회 제외) × 5.8명('13년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당 평균 취업자수)
- 4) 8,522개(연합회 제외) × 4.3명('15년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당 평균 취업자수)
- 5) '15년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조직수 및 종사자수는 '16년도 연말까지 조사 중에 있어 총계 수치 감소



○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B)

(단위 : 개, 명)

연도	14년			15년		
구분	조직수	종사자수	조합원수	조직수	종사자수	조합원수
농협 (농림부)	1,161	81,499	2,431,353	1,134	89,039	2,300,000
수협 (해수부)	92	9,642	158,311	92	2,841	158,512
신협 (금융위)	942	9,614	5,825,000	910	17,440	5,751,627
새마을금고 (행자부)	1,402	32,444	9,485,862	1,335	30,612	9,210,000
생협 (공정위)	150	12,500	1,073,260	666	11,250	1,555,842
중기협 (중기청)	930	1,047	71,052	940	2,538	72,119
산림조합 (산림청)	142	2,886	494,000	142	2,896	385,000
업연초협 (기재부)	16	127	3,790	15	101	3,460
계	4,835	149,759	19,542,628	5,234	156,717	19,436,560



## 2.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15년			16년			17년			재정지원 부담비율 (중앙:지방)
구분	중앙	지자체	계	중앙	지자체	계	중앙	지자체	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부)	1,431	260	1,691	1,018	370	1,388				(인건비) 75:25 (사업비) 70:30
협동조합(기재부)	361 <sup>1)</sup>	29	390	288 <sup>2)</sup>	28	316	287 <sup>3)</sup>			-
마을기업(행자부)	89	89	178	89	86	175	79	79	158	50:50
자활기업(복지부)	-	64 <sup>4)</sup>	64	-	122 <sup>5)</sup>	122				-
농어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므로 파악이 곤란)									
장애인표준사업장 (복지부)	127	-	127	115	-	115				
사회복지법인 (복지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므로 파악이 곤란)									
자활센터(복지부)	3,665	976	4,641	3,800	1,023	4,82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복지부)	134	134	268	131	131	262				
농협(농림부)	8,723	-	8,723	6,297	-	6,297				
수협(해수부)	164	-	164	169	-	169				
신협(금융위)	-	-	-	-	-	-				
새마을금고(행자부)	-	-	-	-	-	-				
생협(공정위)	-	-	-	-	-	-				
중기협(중기청)	94	0	94	84	0	84	109	-	109	
산림조합(산림청)	652		652	985		985				
엽연초협(기재부)	(정부지원 없으나, '15년 엽연초부담금 136.3억 사용)									
계	15,440	1,552	16,992	12,976	1,760	14,736				

- 1)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예산 36억,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325억원(중기청)
- 2)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예산 38억,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250억원(중기청)
- 3)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예산 43억,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244억원(중기청)
- 4) 지자체 자활기금 조성액(3,700억원) 중 사용액 64억원 계상
- 5) 지자체 자활기금 조성액(3,800억원) 중 1~6월 사용액 122억원 계상

□ (지원내역) 사업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일정기간 지원

구분	재정지원 내용	지원기간/한도	간접지원 (재정지원 외)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예비(2년),인증(3년)	○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감면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위탁, 국공유지이용 ○ 사업홍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최장2년/최대1억	
마을기업	사업비	최장2년/최대8천	
자활기업	자활근로 사업비(인건비) 지원	기초생활급여	



- 사회적경제는 각 나라,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요소와 경제적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
    - \* ‘The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cs’ (OECD, 2007)
  - EC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고 참여적 경영 시스템(participative governance system)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과 관련된 경제의 특정 부문(specific part of the economy)’으로 정의
    - \*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repreneurship’ (European Commission, 2013)
  - 캐나다(퀘벡)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6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 사회적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
    - \* 구성원 · 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의 타법인 양도
  - 사회적경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3부문(the third sector), 비영리 섹터(non profit sector), 자발적 영역(voluntary sector),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시민경제(civil economy) 등의 용어가 사용됨
- (특징) 시민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연대와 협력, 자율적 ·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징으로 함
  - (조직운영) 회원들간 평등과 자율경영, 1인1표를 통한 민주적 참여와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회적 소유를 강조
  - (경제활동) 지역중심의 경제활동, 회원의 권익 실현, 불이익 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등 국가 · 시장에서 미충족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 (추구가치) 상업적 목표보다는 사회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시민적 가치(자발성)추구 등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 재분배 강조



## 참고 2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행정자치부 지침	- 국민기초생활법
조직형태	-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법인체 -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사업목표	- 조합원 권익향상 및 지역사회공헌 - 지역주민 권익·복지 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 기타 지역사회공헌	- 마을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유도
사업유형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수행 가능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중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20%이상) - 기타 사회공헌형	- 지역 인적·물적자원 활용하는 사업 ·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상가활성화 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쓰레기·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 기타 지역단위사업	
재정지원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취약계층 인건비 최대 5년간 지원 (1인당 98만원정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지원	- 시설비,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 2년간 최대8천만원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초기창업자금·인건비 지원
선정기준	- 해당사항 없음	- 법인·조합·주식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 - 유급근로자 채용 - 취약계층고용 등 - 민주적의사결정 - 수입>노무비의 30% - 정관·규약보유 - 이윤의 2/3 이상 사회환원	- 법인·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 선정심사기준 · 공동체 구성(주민참여도) · 재정건전성(자부담비율 등) · 지속적 수익창출 가능성 · 안정적 일자리창출가능성	-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
선정주체	- 협동조합(광역자치단체) - 사회적협동조합(각 중앙행정기관)	- 고용노동부 (진흥원 추천 → 고용부 인증)	-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추천 → 시도선정)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4053호, 2016.3.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6.3.2.>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



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 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 [제목개정 2014.1.21.]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



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21.>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을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금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의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삭제 <2014.1.21.>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1.21.>



-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 [본조신설 2014.1.21.]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1.]

## 제7절 등기

-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본조신설 2014.1.21.]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 ⑥ 삭제 <2014.1.2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2014.7.22.] 제116조제3항



##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4053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5호, 2016.8.2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2.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30.]

**제3조의2(심의회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30.]

**제3조의3(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8.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 제2장 협동조합등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6.30.]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



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8.29.]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8.29.>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7455호, 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가.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8호, 201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5.6.30.>

**제4조** 삭제 <2015.6.30.>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동조합등은 다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 영 제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등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



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분할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분할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제528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결산 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23호의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연합회 명칭( [ ]사용금지 [ ]수정 ) 명령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의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 연합회명	법인등록번호
	소속 연합회 주소	전화번호
통지서 수령일	명칭( [ ] 사용금지 [ ] 수정) 명령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통지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의 명칭( [ ] 사용금지 [ ] 수정) 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 검토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 결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 결과 회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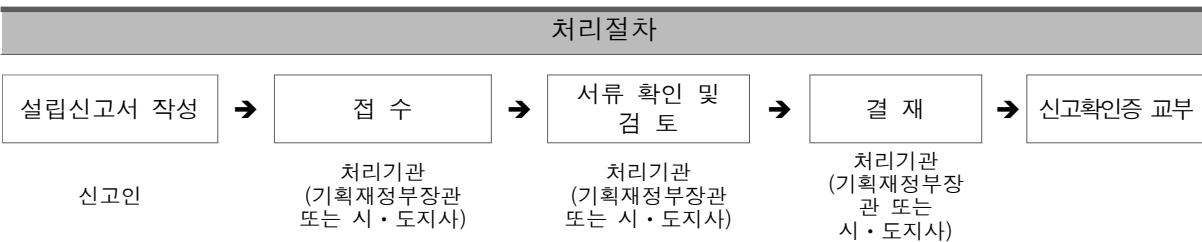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임원명부

[illegible]

## 작성 방법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동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	--	--	--	--	--	--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	--	--	--	--

조직도						
-----	--	--	--	--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	---	--	--	--	--	--

### 작성방법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당 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인건비			
사업수입	00사업		경상비	운영비			
	"			소계			
	"			00사업			
	소계		사업비	"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			
	지원금			소계			
	기타			기부출연금			
	소계		사업외지출	지원금			
출자금				기타			
차입금				소계			
기타수입			출자금반환				
"			차입금상환				
"			배당금				
"			기타지출				
"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 조합원

[illegible]

## 작성 방법

1.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연합회 설립 시 회원인 협동조합의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협동조합  
[                                 ] 변경신고서  
**협동조합연합회**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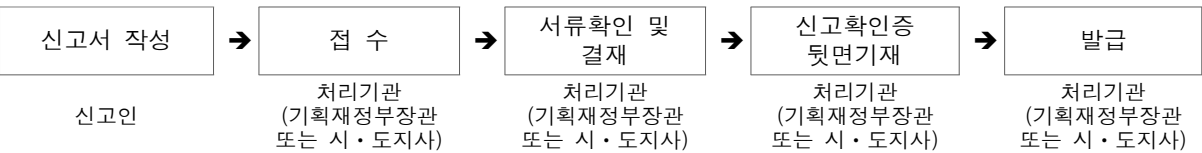
이  
의  
이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li> <li>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li> <li>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li> <li>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재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li> <li>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li> </ol>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처리절차





신고번호 제 호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변경) 신고확인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시 · 도지사

직인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①



신고번호 제 호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변경 · 합병 · 해산 · 조직변경) 신고확인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합병을 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기획재정부장관

직인



## 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개요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원

###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자산</b>		<b>부채</b>	
<b>I. 유동자산</b>		<b>I. 유동부채</b>	
(1) 당좌자산		- 미지급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b>II. 비유동부채</b>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b>부 채 총 계</b>	
<b>II. 비유동자산</b>		<b>자본</b>	
(1) 투자자산		<b>I. 자본금</b>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b>II. 자본잉여금</b>	
(2) 유형자산		<b>III. 자본조정</b>	
- 비품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 시설장치		<b>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b>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 본 총 계</b>	
<b>자 산 총 계</b>		<b>부 채 및 자 본 총 계</b>	

### 작성방법

1. 출자금 :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금한 출자금 제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I. 매출액</b>		<b>VI. 영업외수익</b>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b>II. 매출원가</b>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b>III. 매출총손익</b>		<b>VII. 영업외비용</b>	
<b>IV. 판매비와관리비</b>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b>VIII. 법인세차감전손익</b>	
- 여비교통비		<b>IX. 법인세등</b>	
- 통신비		<b>X. 당기순손익</b>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b>V. 영업손익</b>			

###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회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 [대의원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 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	--	--	--	--	--	--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	--	--	--	--

조직도						
-----	--	--	--	--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명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당 연도  
사업계획



해당 연도  
사업결과



#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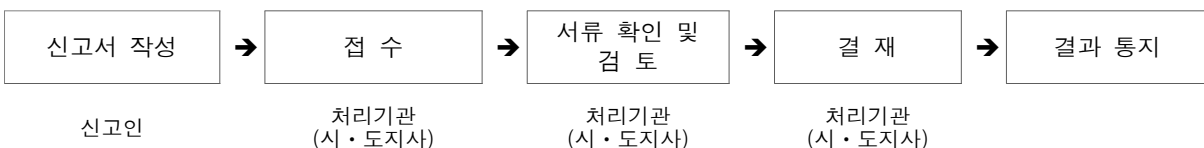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또는 제10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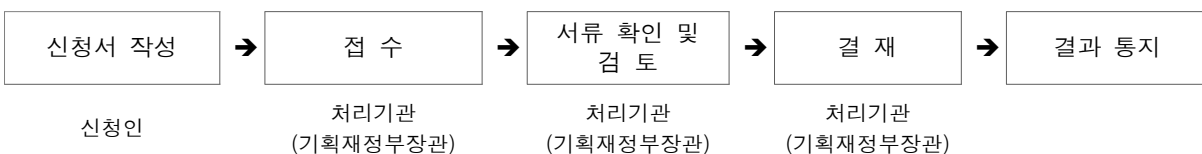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흡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1부 6. 흡수합병 후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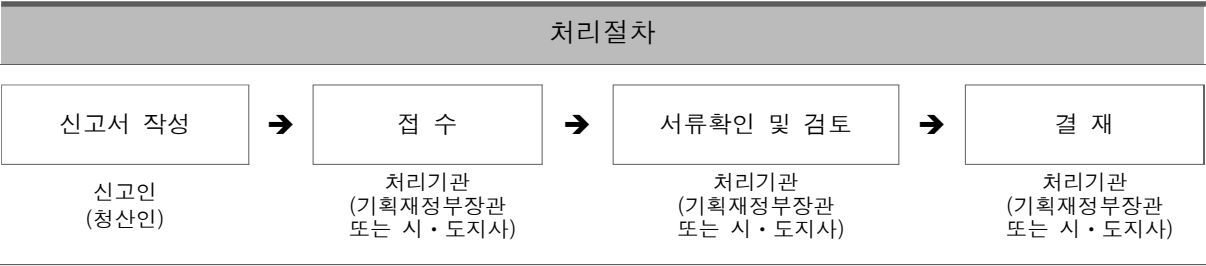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조직변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처리기관 (시·도지사)	→	서류 확인 및 검토 처리기관 (시·도지사)	→	결 재 처리기관 (시·도지사)	→	신고확인증 교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연합회명(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회원 수(개)	출자금 납입총액(원)	공제규정 의결 총회 개최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2항 또는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사업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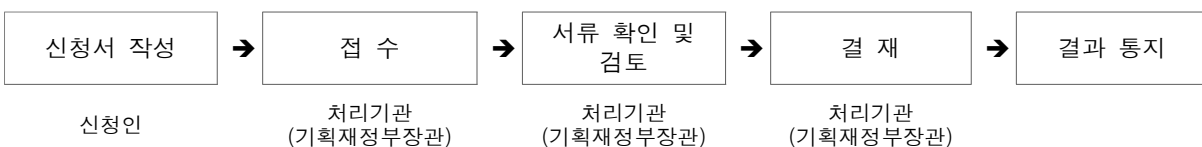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연합회명(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공제사업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기타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2항 또는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사업 인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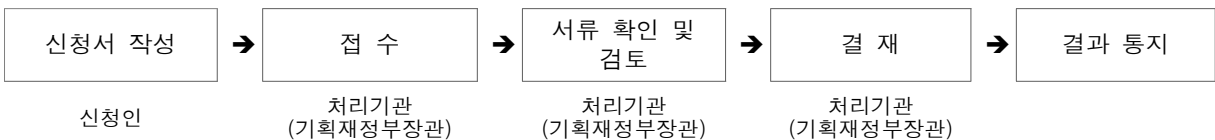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1인당 최저출자금(원)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설립목적	[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	--

의사결 정기구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총회 <input type="checkbox"/> 대의원 총회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조직도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 계획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 계층	명	계	명

### 작성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 ④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사업(위탁기관)		
	□□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 ⑤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공익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 작성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연도 예산 또는 해당 연도 계획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	구분		금액	구성비 (%)		
주 사업	○○사업			주 사업	○○사업				
	"				주 사업	"			
	"					주 사업	"		
	"						주 사업	"	
기타사업	○○사업			기타사업				○○사업	
	"				기타사업			"	
	"					기타사업		"	
	"						기타사업	"	
사업비 합계				사업비 합계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취약계층 인건비			
	"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운영비 등		
	"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	
출자금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차입금					사업외 비용			잡손실 등	
"						사업외 비용		"	
"				출자금 반환					
"				차입금 상환					
"				예비비 등					
합계				합계					

###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 립 인 가 증**

조 합 명: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주 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직인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변경 · 합병 · 조직변경) 인가증  
해산 신고확인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의 변경을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의 합병을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위의 조직변경을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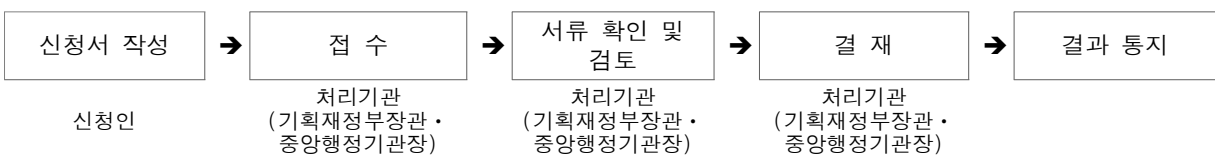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당좌자산		- 단기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미지급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II.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부 채 총 계	
II.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I. 자본금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II.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III. 자본조정	
- 비품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작성방법

1. 출자금 :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금한 출자금 제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I. 매출액</b>		<b>VI. 영업외수익</b>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b>II. 매출원가</b>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b>III. 매출총손익</b>		<b>VII. 영업외비용</b>	
<b>IV. 판매비와관리비</b>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b>VIII. 법인세차감전손익</b>	
- 여비교통비		<b>IX. 법인세등</b>	
- 통신비		<b>X. 당기순손익</b>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b>V. 영업손익</b>			

### 작성 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지역사회 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인가 부처 감독사항과 그 조치 결과	연월일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사업 결과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비율 (C=B/A)(%)		

- 첨부서류
1.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 첨부서류
1. 전체 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생년월일 포함),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사업(위탁기관)		
	□□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1. 위탁사업 계약서
2. 위탁사업 지출명세서
3.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중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대상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공익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 (0000년 12월 31일 현재)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 1. 소액대출 사업 현황

대출조건	소액대출 이자율	연 00.00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연 00.00 (%)
	소액대출 연체 이자율	연 00.00 (%)	1인당 대출한도	원
대출현황	총 대출금액(B)	원	총 상환액(C)	원
	총 대출잔액(D=B-C)	원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D/A)	(%)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원

분기별 소액대출 추이(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총출자금액(A)					
총대출금액(B)					
총상환액(C)					
총대출잔액(D)					
출자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E)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 상호부조 사업 현황

상호부조 계약 현황	월별 납부액	(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 · 규약· 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지급사유별 지급액	혼례(본인)	원
		혼례(자녀)	원
		사망(본인)	원
		사망(배우자)	원
		○○○	원
		△△△	원
상호부조 기금 현황	전년도 기금 잔액 (G)	원	
	해당 연도 수입(H)	원	
	해당 연도 지출(I)	원	
	해당 연도 기금 잔액 (J=G+H-I)	원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J/A)	(%)	

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전기 잔액(G)					
당기 수입(H)					
당기 지출(I)					
당기 잔액(J)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합병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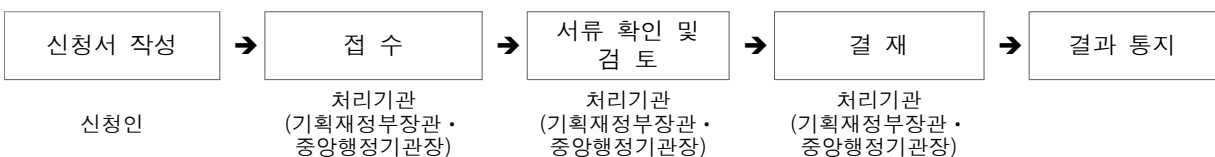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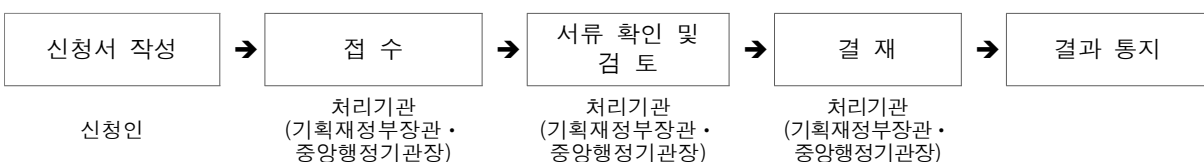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분할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6. 분할 후의 사업계획서 1부 7. 분할 후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서**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첨부서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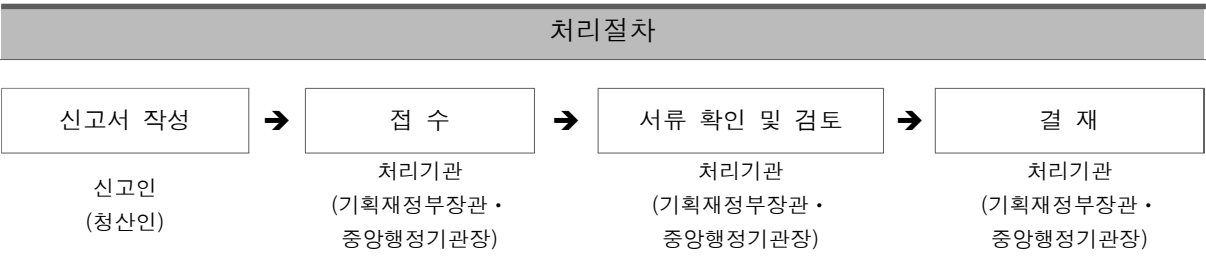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중앙행정기관장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조직변경총회 개최일
	1인당 최저출자금(원)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설립목적	[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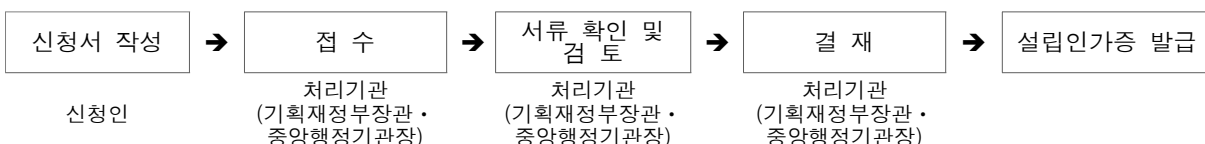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계산에 따라 20일이 아닌  
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가 되는 13일부터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12일(공고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까지 공고하여야 함

(가칭) ○○○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 ○ ○ (인)



## ○○○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안내

(설립동의자) 님 안녕하십니까?

○○○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가칭) ○○○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가칭) ○○○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 ○ ○ (인)



##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 . . (○요일) ○○시

나.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가. 재적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 ▽▽▽(재적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나. 참석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참석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5. 총회 내용

가. 발기인대표 ○○○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전체 설립동의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한 서기로 ○○○ 조합원을, 기명날인인으로 ○○○, △△△, … ▽▽▽를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기명날인인을 별도로 지명하지 않고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도 무방



라.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마.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정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정관의 목적, 조합의 책무, 조합원의 자격 등 각 조항에 대해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
- △△△ 조합원이 정관 제○조에서 ‘○○○○’를 ‘△△△△’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다.
- □□□ 조합원이 제○○조 제○항의 문구에 ‘▽▽▽▽▽▽’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의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재청을 묻다.
- ◇◇◇◇ 조합원의 재청, 전원 동의로 수정인이 성립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을 제안과 같이 수정하여 정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정관을 확정하다.

바.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후보추천 예시①)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로 ○○○, △△△, ... ▽▽▽, 감사로 ◇◇◇가 추천되다.

<이사후보>

- ○○○(발기인 대표)
- △△△(발기인, ○○○○ 대표)
- ...

<감사후보>

- ○○○(발기인)
- 임원후보 전원이 인사말을 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을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에 대한 찬성하는 조합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하여 전원이 동의하여 후보 전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다.
- 의장이 선출된 임원 전원에 대해 수락여부를 묻고 선출된 임원 전원이 수락하다.



-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 ▽▽▽ 이사가 다른 후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주문하여 전원 동의로 선출하다.

사.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아.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 의장이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 시까지 소요 될 예상 경비를 보고하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하여 사용 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출자금 납입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다.
- 의장이 협동조합의 주사무소는 ○○○○○○에 소재함을 설명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지 확인한다.
- 조합원 ○○○이 동의하고 조합원 △△△의 재청 및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자.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 협동조합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 . . .

## (가칭)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이사장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협동조합 임원 이력서				
사진 (3x4)	성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주소	( 도로명 주소)			
등록기준지	( 도로명 주소)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	비 고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작성자 : (인)				



○○○ **협동조합 출자자 명부**

※ 1좌당 금액 : 00000원

(단위: 좌, 원, %)

연번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출자좌수	출자금액	비율
1	○○○	000.00.00	50	500,000	10
2	△△△	000.00.00	100	1,000,000	20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3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연합회의 경우 한 회원의 출자좌수가 4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합 계				5,000,000	100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 < 유의사항 >

- 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 < 유의사항 >

-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조합의 유형에 맞는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〇〇〇, 세분류 〇〇〇, 세세분류 〇〇〇)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〇〇〇, 세분류 〇〇〇, 세세분류 〇〇〇)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 다른 업종의 조합원 비율은 조합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 유의사항 >

- 조합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유의사항 >

-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0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1. 0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유의사항 >

- 탈퇴·제명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 유의사항 >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 유의사항 >

-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 유의사항 >

-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 유의사항 >

-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전 벽보의 부착
  - 2. 선거 공보의 배부
  -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효·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 유의사항 >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유의사항 >

-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유의사항 >

-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유의사항 >

-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 부칙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 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연합회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 < 유의사항 >

- 연합회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회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제6조(광고방법)** ① 연합회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 유의사항 >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〇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유의사항 >

-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유의사항 >

- 탈퇴·제명회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



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금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회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 유의사항 >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연합회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 유의사항 >

-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 연합회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



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회원으로 할 수 있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휴업
3. 회원의 제명
4.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유의사항 >

-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 유의사항 >

-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원에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연합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회장은 전체 회원 협동조합에 속한 총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유의사항 >

-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0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4.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 유의사항 >

-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0조의2(공제사업)** ① 제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③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연합회 설립신고 시에는 “공제사업”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 연합회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제사업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0개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6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63조(회계연도)**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연합회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연합회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6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연합회는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연합회 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는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유의사항 >

-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② 연합회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협동조합 (인)

발기인      ○○협동조합 (인)

발기인      ○○협동조합 (인)

※ 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 < 유의사항 >

- 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2조(목적)**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 유의사항 >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분납할 수 없다.
-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유의사항 >

-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



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 유의사항 >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의사항 >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유의사항 >

-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0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 유의사항 >

-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해당 인가부처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므로,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조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  
상이어야 한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 유의사항 >

-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  
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으로서 ‘○○○ ... ○○○’으로 한다.

### < 유의사항 >

- 위 4항에 해당하는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에 사업유형에 따른 예시 중 해당  
되는 것을 기재하되, 한 사업유형에 예시가 둘인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된다.

#### 1. 지역사업형

-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지역사업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3.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4. 위탁사업형

-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5. 기타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주 사업으로 두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

적용 예)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1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의 설립 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한다.
- 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16.12월 기준 3.29%)를 고려하여 정한다.
-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5%)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뉜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병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상호부조를 제공한다.
-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유의사항 >

-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 유의사항 >

-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 유의사항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 < 유의사항 >

- 연합회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회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제6조(광고방법)** ① 연합회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유의사항 >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〇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회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회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



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 연합회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



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4.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유의사항 >

-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 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 유의사항 >

-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내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원내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내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4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



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55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연합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유의사항 >

-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59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9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4.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 유의사항 >

-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9조의2(공제사업)** ① 제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③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연합회 설립신고 시에는 “공제사업”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 연합회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제사업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0개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62조(회계연도)**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3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연합회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연합회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4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5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 연합회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 유의사항 >

-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 유의사항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인)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인)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인)

※ 법인인감도장 날인



연번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2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4항(청구권 발생 시점)과 제5항(소멸시효기간)의 순서를 조정하고,</li> <li>● 제5항 소멸시효기간(2년)의 기산점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이 아닌 실제 환급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수정</li> </ul>
3		※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 중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예정인 기관의 경우, 다음의 항목 추가 안내 <신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정관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안내 (사회적협동조합에만 해당)</li> </ul>



4	<p>제60조(사업의 종류)① ... 중략...</p> <p>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으로 한다.</p>	<p>제60조(사업의 종류)① ... 중략...</p> <p>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으로서 ‘○○○...○○○’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주사업 유형 및 판단기준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기존 정관례를 따라 작성할 때 주사업 유형 외에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음</li> <li>- 따라서, 주사업 판단기준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사업 유형별로 판단기준 예시문구를 각각 안내 (사회적협동조합에만 해당)</li> </ul>
---	--	--	--